

연구보고서 2021-10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기태
이주미·여유진·김태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1-10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ISBN 978-89-6827-807-5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1.10>

발|간|사

한국 사회는 ‘고비용 사회’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지속해서 오르는 아파트 가격,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교육비 부담, 본인 부담 수준이 높은 병원비, 매달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통신 비용이 만만찮다. 한국 가계의 소득은 그렇게 밀 빠진 독에 든 물처럼 빠져나간다. 20세기 중반에는 빈국이었던 한국이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혹은 복지국가의 대열에 섰다고 한다. 가계의 지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들의 한숨 소리가 작지 않다.

한국 가계에 부담을 주는 지출 구조 및 수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한국 가계가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 핵심 영역에 지출하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객관화된 연구도 많지 않았다. 일부 연구는 분석의 틀이나 자료의 신뢰성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계 동향조사와 유럽연합의 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자료의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에서 진일보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이 고비용 사회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을 모두 합했을 때,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해당 분야 지출 부담 비율이 47.2%였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가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로 부담하는 몫이 비교 대상이 된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가장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소득보장’의 측면이 아닌, ‘가계의 지출 부담 경감’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가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논의 속에서 제기되는 사회서비스 강화, 혹은 ‘기본서비스’ 식의 접근의 실증적 근거가 된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을 대목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지점인 주거비 부담 부분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거비 부담 수준(11.2%)은 비교 대상이 된 유럽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 이 분석은 한국인 대부분의 직관에 반하는 내용일 것이다.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국의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부담 수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인 아파트 특유의 낮은 관리 비용 등이다.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설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구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한국인들이 스웨덴인의 주거비용을 비교하면서 주거비로 인한 고통의 수준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분석에서는 주거로 비롯되는 대출 상환 등 금융 비용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적절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다. 세계 최대 수준인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을 고려하면, 주거 분야에서 비롯되는 지출 부담 수준 역시 가벼이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 수준이 유럽 국가보다 낮다고 가볍다고 해서, 한국 가계의 주거 관련 지출 부담 수준을 방치해도 좋다고 볼 수 없다. 연구진이 확인한 바대로, 의료, 교육, 통신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거 영역에서도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디딤돌 삼아 한국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더욱 정교한 분석과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연구진이 진행한 세 차례의 포럼에 참석해서 유익한 발표를 해준 이재민 경북대 교수님, 법무법인 세종의 나상욱 박사님,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박성호 박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는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24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국제 비교 기준	29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31
제2절 국제 비교 분석 기준	39
제3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51
제1절 들어가며	53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60
제3절 나가며	72
제4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의료비 부담	77
제1절 들어가며	79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86
제3절 나가며	98



제5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육비 부담	103
제1절 들어가며	105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육비 지출 부담	113
제3절 나가며	125
제6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통·통신비 부담	129
제1절 들어가며	131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141
제3절 나가며	158
제7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핵심생계비 부담	161
제1절 가구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163
제2절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173
제8장 소비지출 불평등 요인 분해	187
제1절 소비지출 불평등 분해 방법	190
제2절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불평등도	191
제3절 가구유형별 각 비목의 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	196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정책 제언	227



참고문헌	235
부록	243
[부록 1] 가계동향조사와 HBS 지출변수 비교	243
[부록 2] 노인단독가구 및 4인 가구 핵심생계비 분석 결과	262
[부록 3] 경상소득 대비 지출비목별 비율 분포 (2019년 1분기 기준)	274
[부록 4] 불평등 기여율과 기여도 (4인 가구)	275

표 목차

〈표 1-2-1〉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관련 전문가 포럼	27
〈표 2-1-1〉 복지국가 유형별 특성 비교	32
〈표 2-1-2〉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지표	33
〈표 2-1-3〉 OECD 29개국의 의료보장제도 유형화	36
〈표 2-3-1〉 가구유형 구분	44
〈표 2-3-2〉 가구유형별 표본 수	44
〈표 2-3-3〉 지출 영역별 세부 비목	46
〈표 2-3-4〉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전체 가구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48
〈표 3-1-1〉 주거점유 형태 변화	55
〈표 3-1-2〉 소득계층별 주거점유 형태 변화	56
〈표 3-1-3〉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주거·수도·광열비 수준	59
〈표 3-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60
〈표 3-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62
〈표 3-2-3〉 한국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지역특성별)	64
〈표 3-2-4〉 국가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65
〈표 3-2-5〉 국가별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66
〈표 3-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67
〈표 3-2-7〉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68
〈표 3-2-8〉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70
〈표 3-2-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4인 가구)	71
〈표 3-3-1〉 4개 복지국가와 비교한 주거비 부담 수준	72
〈표 4-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86
〈표 4-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88
〈표 4-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90
〈표 4-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92
〈표 4-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95
〈표 4-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4인 가구)	96



〈표 5-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교육비 비율	113
〈표 5-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115
〈표 5-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전체 가구)	117
〈표 5-2-4〉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 (3인 가구: 부모+한 자녀)	119
〈표 5-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1
〈표 5-2-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2
〈표 5-2-7〉 소득분위별 교육비 과지출 가구의 비율(전체 가구)	123
〈표 6-1-1〉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132
〈표 6-1-2〉 기본품목에 해당하는 항목들 (가계동향조사 기준)	133
〈표 6-1-3〉 교통비 및 통신비 항목별 비중	134
〈표 6-1-4〉 주요 국가 자동차 1대당 인구수 (2011년 기준)	136
〈표 6-1-5〉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 및 ICT 지출 비중	140
〈표 6-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142
〈표 6-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143
〈표 6-2-3〉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145
〈표 6-2-4〉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146
〈표 6-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149
〈표 6-2-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150
〈표 6-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151
〈표 6-2-8〉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4인 가구)	152
〈표 6-2-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154
〈표 6-2-10〉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155
〈표 6-2-1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156
〈표 6-2-12〉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4인 가구)	157
〈표 7-1-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65
〈표 7-1-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66
〈표 7-1-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168



〈표 7-1-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169
〈표 7-1-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171
〈표 7-1-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172
〈표 7-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73
〈표 7-2-2〉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75
〈표 7-2-3〉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77
〈표 7-2-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78
〈표 7-2-5〉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1
〈표 7-2-6〉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2
〈표 7-2-7〉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4
〈표 7-2-8〉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5
〈부록표 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2
〈부록표 2-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3
〈부록표 2-3〉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4
〈부록표 2-4〉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5
〈부록표 2-5〉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6
〈부록표 2-6〉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7
〈부록표 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68
〈부록표 2-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69
〈부록표 2-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0
〈부록표 2-10〉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1
〈부록표 2-11〉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2
〈부록표 2-12〉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3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1] G20 국가들의 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37
[그림 3-1-1] 주요 국가별 자가 및 임대주택 점유율 (2018년)	57
[그림 3-1-2] 주요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20년)	58
[그림 3-2-1]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비교	60
[그림 3-2-2]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비교	62
[그림 3-2-3] 5개국 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	68
[그림 3-2-4] 5개국 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	69
[그림 3-3-1] 소득별 주택가격 및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	73
[그림 3-3-2] 주요 국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 변화 (2020년 4분기)	74
[그림 3-3-3]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5년)	76
[그림 4-1-1]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중	81
[그림 4-1-2]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 (2019년 기준)	83
[그림 4-1-3] 경상의료비 가운데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율	84
[그림 4-1-4] 국가별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변화 추이	85
[그림 4-2-1]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86
[그림 4-2-2]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88
[그림 4-2-3]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90
[그림 4-2-4]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92
[그림 4-2-5] 국가별 1분위 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94
[그림 4-2-6]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4인 가구)	97
[그림 4-3-1]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19년 기준)	99
[그림 4-3-2]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9년 기준)	99
[그림 4-3-3]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9년 기준)	100
[그림 5-1-1] 비교 국가의 25-34세의 교육 성취 (2019년)	106
[그림 5-1-2] 비교 국가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109
[그림 5-1-3] 사교육 참여율	111
[그림 5-2-1]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비교	114

[그림 5-2-2]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비교	115
[그림 5-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1
[그림 5-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2
[그림 6-1-1]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전년 대비 증감비	135
[그림 6-1-2] 시내버스 기본요금 및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	137
[그림 6-1-3] 지하철 기본요금 및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	138
[그림 6-1-4] 이동전화 가입 건수	139
[그림 6-1-5] 인터넷 이용률	139
[그림 6-2-1]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142
[그림 6-2-2]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143
[그림 6-2-3]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144
[그림 6-2-4]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146
[그림 6-2-5]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147
[그림 6-2-6]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147
[그림 6-2-7]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	149
[그림 6-2-8]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	150
[그림 6-2-9]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	154
[그림 6-2-10]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	155
[그림 7-1-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65
[그림 7-1-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67
[그림 7-1-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168
[그림 7-1-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169
[그림 7-1-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171
[그림 7-1-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172
[그림 7-2-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5분위 차이 (전체 가구)	174
[그림 7-2-2]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74
[그림 7-2-3]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5분위 차이 (전체 가구)	177



[그림 7-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78
[그림 7-2-5]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1
[그림 7-2-6]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3
[그림 7-2-7]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4
[그림 7-2-8]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185
[그림 8-2-1] 소비지출과 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	192
[그림 8-2-2] 가구유형별 소득지출 및 소득 기준 불평등도 순위	193
[그림 8-2-3] 노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 수준과 노인 단독가구 소득 지니계수	196
[그림 8-3-1]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가구)	198
[그림 8-3-2]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 (전체 가구)	200
[그림 8-3-3]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인단독가구)	204
[그림 8-3-4]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 (노인단독가구)	206
[그림 8-3-5]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4인 가구)	207
[그림 8-3-6]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 (4인 가구)	208
[부록그림 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2
[부록그림 2-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3
[부록그림 2-3]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4
[부록그림 2-4]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5
[부록그림 2-5]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6
[부록그림 2-6]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267
[부록그림 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68
[부록그림 2-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69
[부록그림 2-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0
[부록그림 2-10]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1
[부록그림 2-11]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2
[부록그림 2-12]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273



Abstract

A Study on how to reduce Korean Households' Financial Burdens on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Project Head: Kim Ki-tae

Growing income inequality has been ris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many other welfare states for the last decades. Various polic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to little avail. Rather than trying to find how to increase the incomes, this report seeks ways of reducing household expenditures on key areas such as housing, healthcare, education, etc. Bearing this approach in mind, we compare the household expenses on five areas of housing, education, healthcare,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of Korea and 8 European welfare states. We use the Korea'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the European Union's Household Budget Survey in 2015.

For housing, Korean households spend far less amount (11.2%) on average out of their total incomes compared with those of all European nations (generally over 15%). On the other hand, Korean households use 6.8% on healthcare on average, which is higher than those of the compared European nations. Korea's spending on educ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highest with its average cost standing at 11.1% and 5.7% re-

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spectively, compared to those of the European states. Korea's spending on transport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ropean countries.

Overall, by summing up the total expenditures on the five areas, this report finds that Korean households shoulder the burden of 47.2%, the highest ratio of the total expenditure on average. Korean households spend relatively less on housing but its costs on healthcare, education and communication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European states. In conclusion, this report proposes a couple of policy measures how to reduce the burdens.

Keyword : household expenditure, spending on housing, spending on healthcare, spending on education, spending o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및 격차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재분배 제도를 제안하는 등 복지국가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소득 보장’의 접근에서 벗어나, ‘가계의 지출 경감’이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계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가계의 지출 경감 정책은 기존의 의료, 주거, 교육 등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 더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통과 통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의 가계지출 경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른바 현금 복지에 대한 사회 일부의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가계 지출 경감 정책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해 이뤄진다면,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역들에 대한 적절한 공적 규제, 지원, 전달 등은 이른바 ‘공동구매’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의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어도 지출 분야의 공공화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계가 비싼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득보장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복지국가들과의 가계지출 수준에 대해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지금까지 가계의 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국제 비교한 연구는 희소했다.

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김기태 외(2019)에서 한국과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의 의료, 주거, 교육 영역에 대한 지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값싼 주거 부담 및 주거 관련 부채 상황 부담 수준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 수준을 낮춘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이 연구는 일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패널 자료를 이용했기에 수평적인 비교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으로부터 유럽 28개국 가계의 지출항목을 담은 유럽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의 비목과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두 조사 모두 가계지출의 항목의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따라서 한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했다.

두 자료를 이용해서 유럽의 네 가지 체제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두 개씩 골라서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유럽의 여덟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북유럽 모델), 프랑스와 벨기에(보수주의 모델), 영국과 아일랜드(자유주의 모델), 스페인과 그리스(남유럽 모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해당 국가 통계청의 비협조와 자료의 일부 변수값 부재 등의 이유로 누락됐다.

Esping-Andersen(1990) 등이 제안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르면,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의 형평한 분배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공공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의 복지국가에서 가계지출의 수준도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의료 및 교육 시장 등에서 공공화 수준이 더딘 한국에서는 그 부담이 가계에 가중될 가능성도 클 것이다. 한국과 8개국의 가계지출 수준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9개국의 자료를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주거·수도·광열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의 비율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5개 비목별 지출 비용을 합한 ‘핵심생계비’를 다시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산출해서 비교했다. 다섯 개 비목을 ‘핵심생계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들 영역이 가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면서 동시에 사회정책의 정책 개입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식료품 관련 지출은 제외했다.

비교의 대상은 9개국의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및 5분위 집단이다. 비교 대상 시기는 2015년이다. 시기를 다소 오래된 과거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유럽연합의 HBS 자료의 최신판 기준연도가 2015년이다. 둘째,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지출 및 소득 자료가 포함된 연간 자료는 최근 연도에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주요 연구결과

3장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수준을 비교했다. 주거·수도·광열비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비목 가운데 가계의 지출 부담이 모든 나라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매우 낮게 나왔는데, 소비지출액 대비 11.2%였다. 비교 대상 국가들은 대체로 15% 이상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을 나타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는 한국이 25.3%로, 그리스(18.3%)보다는 높고, 덴마크(36.3%)보다는 낮았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9.5%로 가장 낮았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높게 나왔다. 전

체 가구 기준으로 스웨덴과 덴마크가 소비지출 대비 각각 19.7%, 21.4%였다.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9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을 소득 기준 5분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서 유럽 국가들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고, 분위에 따른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수준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를테면, 한국의 1분위는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17.1%로 한국의 5분위의 9.0%보다는 높았지만, 비교 대상이 된 8개국의 1분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덴마크의 33.2%~아일랜드의 17.9%)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전세제도 영향으로, 한국의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집값 수준은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측정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중간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임대료 수준은 집값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 수준은 낮은 편이다. 셋째, 주거·수도·광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수준은,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넷째, 한국의 주된 주거 공간인 아파트는 집수리 및 관리 비용이 매우 적게 들며, 이웃 간 단열 및 냉·난방 효과가 매우 크다. 이런 요인들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장에서는 국가별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6.8%로 비교 대상이 된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7.4%)였다. 노인단독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에서 한국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비교 대상이 된 대부분 국가들은 대부분의 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이 한국의 수치(6.1~9.4%)를 밑돌았다. 둘째,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격차가 한국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의료비 부담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셋째,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에 견줘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원인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은 결과,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계의 직접부담 비중이 30.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OECD, 2021g). 둘째 원인은 한국인들의 의료 이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년 17.2회로 OECD 평균(6.8회)의 두 배를 넘어선다(OECD, 2021g). 셋째, 한국인의 건강 수준, 특히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한국은 일부 건강 지표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자살 발생 비율은 가장 높다(OECD, 2021g).

5장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 수준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공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분과 순수 사교육비를 합한 금액이다. 분석 결과, 교육비가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1.1%)은 유럽 8개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북유럽 2개국(스웨덴, 덴마크)과 유럽 대륙 2개국(벨기에, 프랑스)은 소비지출의 1% 미만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다만,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에서 그리스는 소비지출의 8.5%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한국(16.2%) 다음으로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소득 5분위별 분석 결과에서도 노르딕 2개국과 유럽대륙 2개국의 분위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모든 분위에서 1% 내외를 교육비로 지출했다. 또한, 1분위를 예외로 할 때, 한국을 포함한 그리스, 영국 등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 수준이 유독 높은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과 그 비용이 매우 높다. 2019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의 83.5%, 중학생의 71.4%, 고등학생의 61.0%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최근까지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의 대학 입학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률(GDP의 0.94%) 또한 비교 대상국들 중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이러한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대학 진학률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성과주의 문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6장에서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을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은 모든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비교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이외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신비 부담 비교에서는 비교 국가와 한국 간의 통신비 부담에 있어 차

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한국은 5.7%로 비교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5%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7장에서는 3~6장에서 분석한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를 '핵심생계비'라 명명하고, 이 지출액이 가계의 소비지출 및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핵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국(47.2%)은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다른 나라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게 나왔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와 의료비(6.8%)에서 모두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은 다른 국가보다 대략 10%p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비교 대상이 된 국가들 가운데서는 덴마크(43.3%)와 스웨덴(42.6%)이 한국 다음으로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이 높았다. 북유럽 국가에서 가계지출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은 의료비와 교육비들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잡는 데는 대부분 한계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에서 한국과 영국은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의 비율이 2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비는 거의 없었다. 노인들의 주된 소비 영역은 주거·수도·광열과 의료 및 교통이었다. 소비지출을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단독가구의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의 노인단독가구의 핵심생계비 부담 비율이 34.0%로 가장 낮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이 48.5%로 가장 높았다. 한국 4인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9.5%로 유일하게 한 자리대였지만, 교육비가 1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비는 한국의 '밑 빠진 독'이었다.

9개 국가의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소비지출을 대비해서 보았을 때, 분위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국가였다.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3.0%p였다. 그리스(0.6%p)에서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영국(13.0%), 벨기에(12.9%)에서 분위별 차이가 컸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9.5%), 덴마크(11.2%)에서 1~5분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작지 않았다.

8장에서는 지니분해를 통해 각 비목별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분해에 앞서 소비지출 불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 가구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0.265로 비교 대상국들 중 덴마크(0.24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두 명의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도 덴마크(0.203) 다음으로 낮은 수준(0.212)을 기록했다. 반면, 노인단독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0.325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아일랜드(0.350)와 스페인(0.34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4인 가구와 대조를 보였다. 즉, 한국은 경제활동기 가구주 가구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노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가구의 지니분해 결과, 핵심생계비 비목 중에서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비목은 비교 대상 국가들 모두에서 교통비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덴마크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0.5%를 설명했다. 한국은 20.2%로 교통비가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의 약 5분의 1 정도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다음으로 불평등에 크게 기여한 항목은 주거·수도·광열비이다. 주거·수도·광열비는 대체로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의 6~8% 내외를 설명했다.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아일랜드(8.4%), 덴마크(8.1%), 프랑스(8.0%) 등에서 8%대, 스페인(7.4%), 그리스(7.0%)는 7%대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6.6%였다.

의료비의 경우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은 국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낮은 영국은 1.5%에 불과한 데 비해, 기여도가 가장 높은 그리스는 8.3%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의료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5.9%로 높은 편에 속했다. 교육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불평등 기여도가 3~7% 내외로 극히 낮은 비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소비지출 불평등의 17.1%를 설명하며, 이는 비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노인단독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모든 비교대상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몫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비목 중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26.6%), 영국(25.3%), 덴마크(23.1%) 정도였다. 나머지 나라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9.9%(스웨덴)~14.9%(스페인)로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노인단독가구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편차가 매우 큰 비목은 교통비였다. 교통비는 스웨덴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1.8%를 설명했으나, 한국에서 교통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5.6%에 불과했다. 또, 한국에서 의료비의 총소비지출 기

여분은 16.7%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았고, 비목 중에서도 두 번째 높았다.

4인 가구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소비지출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목은 교통비로 나타났다. 특히, 벨기에에서 교통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는 33.5%에 이르렀다. 반면 그리스(15.4%)에서 교통비의 상대적인 불평등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경우 교통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22.2%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도를 설명하는 비중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5~7%대 수준이었다. 영국은 비중이 유독 낮아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7%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7.5%로 미미한 차이기는 하지만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한국에서 19.2%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 노르딕 국가에서는 여전히 0에 가까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국에 이어 그리스와 영국에서 교육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가 각각 12.0%와 10.5%로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9장에서는 연구를 종합하면서, 분야별로 정책 제언을 했다. 먼저 주택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정책으로 주거비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제시했다. 한국의 주거비 지원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하기 이전에는 생계급여의 일환으로 여겨져

실질적 주거급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에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주거급여 기준과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주거급여 본연의 성격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로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임대료 역시 시장임대료를 충분히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임대 가구가 증가하고 특히 월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주거급여 기준과 급여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좀 더 과감한 임대료 보조 혹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의 공급은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을 넘어 8.9%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지역과 대상자가 많지 않아 늘어나는 부동산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초년생, 주택불안정 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적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곳에 사회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으로 인한 불평등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 부담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낮추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분화, 소득 분배 및 재분배에서의 불평등, 지역 간 격차, 젠더 격차 같은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돼야 전반적인 건강 수준도 개선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없이 의료비 절감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은,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을 방치한 채 강 하류에서 끊임없이 물 정수 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첫째, 환자 본인의 의료비 비용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건강보

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핵심 고리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급여화를 이뤄내야 한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돼 있어서 1분위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셋째, 한국의 1차 의료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1차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게이트 키퍼를 강화해야, 앞서 제시한 의료비 경감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만 몇 가지 제안하면, 첫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공적 투자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보편적 접근 방식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장학금 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등은 상대적으로 왜소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둘째, 드림스타트 같이 저소득 아동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재능을 개발하고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제한된 '괜찮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의 서열화도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교통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 교통비 보조의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고소득 가구의 전체 교통비가 저소득 가구보

다 현저히 높았으며,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자동차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현재 도시철도 요금에서 노인 적용 제외에 대한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보전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운영 지역과 비운영지역의 지역적 차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연계 및 합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고려(65세 이상 노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지원 정책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 서비스별 가입률, 이용량, 단말기 가격·교체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은 낮지만, 이용량 증가, 높은 단말기 가격과 짧은 교체 주기가 가계통신비 부담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 즉, 본인의 이용 패턴을 고려한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경제·사회활동에서 필수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반이 되는 통신서비스 이용(소비)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되, 와이파이가 확산 등을 통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이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넘어서 사회복지 수단으로 전환되고, 현행 감면제도가 취약계층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신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성 통화료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등 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통신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온라인 혹은 비대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 계층에 대하여 통신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바우처 지급이나 통신급여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영역에서 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1) 현금 복지에 대한 사회 일부의 거부감을 완화하면서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2)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3)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이 보고서의 접근법은 현재 자주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방향과도 일부 일맥상통하다(Coote and Percy, 2020; Social Prosperity Network, 2017). 영국의 학자인 Coote and Percy(2020)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기본원칙으로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집단 책임의 이행’(81쪽)이라고 규정하고, 영국에서 이미 그 원칙이 일부 관철되고 있는 의료 및 교육 영역의 제도 개선과 아울러 돌봄과 주거, 교통, ITC로 기본서비스를 확장해나가자고 제안한다. 이들이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대상 영역으로 지목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는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다섯 영역과 중첩된다.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가계지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 및 통신비, 핵심생계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OECD, 2015; Reich, 2015). 이 같은 경향은 복지국가의 황금기인 1960~1970년대를 경과한 이후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때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유화를 외치던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현재의 불평등 수준으로는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OECD, 2011; OECD, 2015).

이 같은 불평등 및 격차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 방안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전통적인 복지제도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촘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의 급여 수준을 올리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상병수당,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복지 확장을 통해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빈곤 및 불평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 다른 복지국가에서도 공적이전소득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복지국가들에서 소득 지표가 뚜렷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기는 힘들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소득 양극화의 흐름을 공적이전소득을 통해서 막기에 버거운 측면도 있다.

불평등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식은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와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의 불평등 심화가 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정기적·보편적이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의 기본소득을 제안한다(Van Parijs, Vanderborght, 2019). 그 밖에도 기본소득과 일부 유사하며 동시에 차이점을 보이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들도 제시된다. 이와 같은 제안은 복지국가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낙인효과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기존 현금급여제도와와의 정합성 문제 등으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대응들은 아직은 미흡하거나 혹은 더 장기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혹은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가 막대한 공공 재원을 활용했다. 급진적인 재분배 정책을 펴기 위한 재정적인 여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의 불평등 수준을 완화할 수 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셈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가구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방법 외에 지출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가계의 지출 경감 정책은 이른바 현금 복지에 대한 사회 일부의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 의료, 교통, 통신, 교육 영역에서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편적 성격을 띠며 사회 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욕구에 기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현금 복지와

달리, 대상의 선별 과정에서 생기는 자격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둘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료나 교통 등의 서비스는 대상은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인 수요자가 저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지출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가계의 지출 감소 정책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해 이뤄진다면,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계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출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한 적절한 공적 규제, 지원, 전달 등은 이른바 ‘공동구매’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되어도 지출 분야의 공공화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계가 비싼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득보장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지출 분야의 공공화를 구현하는 수단이 획일적이지는 않다. Powell(2007)은 복지 영역에서의 국가 차원의 공공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즉, 전달, 재정, 규제의 방식으로 공공화가 작동할 수 있다. 교육 영역을 예로 들면, 전달의 측면에서 국가가 모든 교육 기관을 국립 혹은 공립화할 수 있다.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사립 교육 기관을 두더라도 국가가 개인에게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규제의 측면에서는 국가가 교육 영역에서 영리 활동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 정책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반드시 직접 제공할 필요는 없다. Powell(2007)에 따르면, 실업을 막기 위해 일자리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한 조건 아래 회

사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공해를 막기 위해 나랏돈을 쓰는 대신 공해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스스로 대기와 강을 정화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국가가 직접적인 급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공화가 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서 초점을 맞추는 영역 가운데 하나인 의료 영역을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책이나 국가보건서비스 대신 모든 회사가 종업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국가가 강제할 수도 있다. 공공화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 혹은 사회적 수요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전달, 재정, 규제가 가운데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협동조합 같은 비국가적인 방식을 통한 공공화의 방식도 존재한다. 공공화에 대한 다소 복잡한 논의는 이 보고서의 논의의 범주를 넘어선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가계의 지출 부담과 사회정책 영역의 공공화는 이렇게 인과적으로 맞닿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두고자 한다.

가계의 지출 감소 정책은 서구 복지국가 개혁을 둘러싼 제안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와도 연결된다(Coote and Percy, 2020; Social Prosperity Network, 2017). 영국의 학자인 Coote and Percy(2020)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기본원칙을 ‘공동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집단 책임의 이행’(81쪽)이라고 규정하고, 영국에서 이미 그 원칙이 일부 관철되고 있는 의료 및 교육 영역의 제도 개선과 아울러, 돌봄과 주거, 교통, ITC로 기본서비스를 확장해나가자고 제안한다. 이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장점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투입 대비 산출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과 책임의식을 높이면서,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한

다. 이들이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대상 영역으로 지목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는 이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다섯 영역과도 중첩된다.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첫째, 한국 가구의 주거·건강·교육·통신·교통 비용의 부담 수준이 항목별로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항목의 부담 수준이 전체 지출 불평등도(지니)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 분해한다.

둘째, 한국 가구의 주거·건강·교육·통신·교통 비용의 부담 수준을 네 가지 유형의 유럽 복지국가들과 비교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서,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한국 복지국가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더라도 높은 집세와 비싼 의료비,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그리고 교통 및 통신비로 상당한 액수를 지출한다면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생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가계의 소득을 채우는 ‘밑 빠진 독’의 ‘밑’을 채우기 위한 연구다.

제2절 연구의 내용

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다룬다. 첫째, 한국 가구의 소비 생활에서 부담을 주는 지출 내역 및 부담 수준을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가구의 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더라도 필수영역에서 지출 부담 수준이 높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보장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작업이 지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구의 지출 내역 분석을 통해서 한국 가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부담을 지고 있는지 드러내 보인다.

둘째, 한국의 항목별 지출 부담 수준을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연구의 파일럿 스터디의 성격을 가졌던 김기태 외(2019)의 연구에서는 독일, 미국, 스웨덴, 일본을 각각 대표하는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한국 가계의 가용소득 수준을 확인했다. 그러나 각국의 패널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별 비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으로부터 확보한 유럽 28개 국가 가계의 지출항목을 담은 유럽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복지체제 네 가지 유형별로 각각 두 개의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했다. 보수주의(프랑스, 벨기에), 자유주의(영국, 아일랜드), 시민주의(스웨덴, 덴마크), 남유럽(이탈리아, 스페인)이다. 원래는 보수주의 국가로 독일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독일 통계청이 유럽통계청에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 유형의 국가인 벨기에로 대체했다.

한국의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했다.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가구지출설문 모두 가계지출 항목을 정하는 기준으로 국제 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따라서 한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셋째, 한국 및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가구의 총소비지출 지니를 지출 항목별로 구분해서 요인 분해(Lerman & Yitzhaki, 1984; 1985)를 실시한다. 지출 항목별로 불평등 수준이 총소비지출 지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지출 항목이 가계의 불평등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책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 분석에 근거해서 가계의 지출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진은 4~5월 동안 세 차례의 포럼을 열고, 교육, 교통, 통신 전문가로부터 해당 지출 항목의 가계 부담 수준 및 경감 방안에 대한 발표를 청취했다. 연구진은 한국의 가계동향과 유럽연합의 유럽가구지출설문 자료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한국 가계의 지출 구조의 특수성에 근거해서 지출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문헌 연구의 대상 분야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불평등 연구 가운데 가

계의 지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수집 및 분석한다. 알다시피,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했다. 둘째,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별 가계의 부담 수준 및 경감 방안에 관한 문헌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개별 분야별로 일부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진은 각자가 맡은 주거, 의료, 교육, 교통·통신 분야에 관한 문헌 연구를 수행했다.

나. 자료 분석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와 유럽가구지출설문을 분석했다. 두 자료 모두 조사대상이 되는 국가의 가계지출 항목을 정할 때 국제 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자료 가운데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주거비 및 주거 관련 부채), 교통 및 통신비의 비율을 분석했다.

다. 전문가 포럼

이 연구는 의료, 교육, 주거, 교통, 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연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의 빈곤 및 소득 문제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으나, 교육, 교통 및 통신 분야는 공동연구진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듣는 포럼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포럼의 내용은 <표 1-2-1>과 같다.

〈표 1-2-1〉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관련 전문가 포럼

일시	발표자	주제	주요 내용
2021.4.12.	이재민 교수 (경북대)	교통비	〈우리나라 가계 교통비 빈곤구조 분석〉 - 교통비 빈곤구조 - 분석 시 고려사항 - 정책 제언
2021.4.26.	나상우 박사 (법무법인 세종)	통신비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현황 및 경감방안〉 - 가계통신비 부담 지속 원인 - 가계통신비 국제 비교의 어려움 존재 - 분석 시 고려사항 - 정책 제언
2021.5.11.	박성호 박사 (한국교육 개발연구원)	교육비	〈한국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 - 사교육 정책 현황 - 정책 제언

자료: 필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국제 비교 기준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제2절 국제 비교 분석 기준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국제 비교 기준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이 절에서는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아울러 가계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가계지출 분석을 수행한 과거 연구를 검토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지출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들과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복지국가 유형은 Wilensky, Lebeaux(1965)가 잔여적 및 제도적 복지 모델로 제시한 것이 선구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Esping-Andersen(1990)이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더 세밀하게 다듬어졌다. 그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계층 간 연대 수준이 높고 보편적 복지모델을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 직역 등으로 분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대륙형 보수주의 모델, 복지 영역에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모델은 이후 일종의 보완 작업을 거치는데, 대표적인 것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모델로서의 남유럽 모델(Leibfried, 1992) 및 동아시아 모델(Hudson and Kuhner, 2009)의 등장이다. 동아시아 모델에는 물론 한국이 포함됐다. 이 같은 모델 구성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논의 수준을 넘어선다. 다섯 가지 복지국가 유형의 특성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복지국가 유형별 특성 비교

구분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	한국
노동시장 특성	유연적 높은 평등수준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고용	경직적 중간 평등수준 높은 실업률 중간 수준 여성고용	유연적 낮은 평등수준 낮은 실업률 높은 여성고용	경직적 중간 평등수준 높은 실업률 낮은 여성고용	유연적 낮은 평등수준 낮은 실업률 낮은 여성고용
(고등)교육체 제 특성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적 성격 (혼합형)	사유재 성격	혼합형	사유재 성격
가족 특성	개인주의	가족주의	개인주의	강한 가족주의	강한 가족주의
복지국가의 기본원칙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에 기반한 이전과 서비스	고용주와 피용자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혼합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욕구 있는 자'에 대한 표적화된 이전과 서비스	고용주와 피용자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강제보험	안정적인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과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화된 이전과 서비스
복지국가의 기본목표	안정과 평등	안정	빈곤완화	안정	빈곤 완화
복지의 일차적 제공자	국가	국가(제3섹터)	시장	시장과 가족	가족
커버리지	전체 시민	전체 시민 (근로자 중심)	욕구 있는 시민	안정적 근로자 중심	안정적 근로자 중심, 일부 욕구 있는 시민
복지국가 성과	낮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낮거나 중간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중간 수준의 빈곤율과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	높은 수준의 빈곤율과 불평등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	높은 수준	비교적 높은 수준~중간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삶의 질과 행복 수준	높은 수준	높거나 중간 수준	높거나 중간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자료: 여유진 외(2019) 표 2-11 일부 수정

〈표 2-1-2〉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지표

(단위: 1000달러, %)

복지국가 유형	국가명	1인당 GDP	1인당 지출액	소득 5분위 배율	사회보장 지출액 (GDP 대비)
자유주의	미국	53.2	41.1	8.4	18.7
	스위스	42.1	28.4	4.6	19.2
	아일랜드	31.1	25.2	4.3	13.4
	영국	35.1	29.4	6.5	20.6
	캐나다	35.9	27.6	4.9	18.0
	평균	39.5	30.4	5.7	18.0
보수주의	독일	42.7	27.5	4.4	25.9
	벨기에	37.6	26.2	3.8	28.9
	오스트리아	39.3	28.0	4.3	26.9
	프랑스	36.9	24.0	4.6	31.0
	평균	39.1	26.4	4.3	28.2
사회 민주주의	노르웨이	41.8	27.4	4.0	25.3
	덴마크	36.7	25.8	3.8	28.3
	스웨덴	35.4	23.5	4.2	25.5
	핀란드	36.4	25.0	3.9	29.1
	평균	37.6	25.4	4.0	27.0
남부유럽	그리스	22.4	19.9	5.0	24.0
	스페인	28.6	22.9	5.9	24.7
	포르투갈	27.4	21.5	5.1	22.6
	이탈리아	32.0	26.0	6.0	28.2
	평균	27.6	22.6	5.5	24.9
한국		26.8	19.4	6.5	12.2

주: 1) 통계청과 OECD 자료에서 2018년 이후 자료가 있는 국가들을 제시. 일부 국가들은 2020년 자료가 없을 경우, 2018~2019년 자료 활용.

2) 1인당 지출액은 통계청의 국가별 가계지출 자료에서 OECD의 국가별 인구수를 나누어서 산출함.

3) 가계지출은 식품, 의류, 주거(임대료), 에너지, 교통, 내구재(특히 자동차), 의료비, 여가 및 기타 서비스 등 일상의 필요 충족을 위한 가구의 최종 소비지출 금액임. 가계지출은 보통 GDP의 60퍼센트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의 경제 분석에 필수적인 변수.

자료: 통계청 (2021) 가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611_OECD에서 2021.11.17. 인출

통계청 (2021) 1인당 총가계처분가능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10_OECDD에서 2021.11.17. 인출

OECD(2021a),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1.11.17. 인출. 가처분소득 기준, 2012년도 새로운 소득 기준 대비

OECD(2021b), Social Spending.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에서 2021.11.17. 인출.

OECD(2021c), Population.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에서 2021.11.17. 인출.

이 같은 네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성과들은 복합적이다. <표 2-1-3>을 보면, 복지국가 유형별로 일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1인당 GDP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한국과 남유럽 국가들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1인당 지출액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다만, 소득 분배 수준에서는 다른 추이가 나타난다. 소득 분배 수준을 가리키는 소득 5분위 배율은 보수주의 4.3, 사회민주주의 4.0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 6.5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평균인 5.7보다 높다. 보수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은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 수준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지출액 수준은 보수주의 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평균이 GDP 대비 28.2%와 27.0%로 한국의 12.2%보다 매우 높다.

소득재분배 지표에서 나타나는 사회민주주의 및 보수주의 국가들의 성취가 가계지출 영역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복지국가 모델에 더해서, 한국 가계의 지출 수준을 수평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서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Esping-Andersen(1990)이 지적했듯이, 복지국가는 개별적인 복지제도의 총합 이상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역사적인 발전 경로를 따라 발전한 복지국가는 그 과정에서 개별 제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개별 제도들이 해당 복지국가의 성격과 일맥상통하게 발전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장제도이다. 일부 복지국가들의 건강보장 제도는 복지체제의 범주와 다소 무관하게 운영된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복지 영역을 시장원리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유형 국가로 분류되지만,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매우 공적인 국가의료서비스(NHS)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정책,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복지국가의 범주와 무관하게, 의료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별도의 범주화를 시도했다(Wendt, 2009; Reibling, Ariaans, Wendt, 2019). 대표적인 예가 Reibling, Ariaans, Wendt(2019)의 연구인데, 이들은 복지국가의 의료제도에서 공급 측면, 공공과 민간의 혼합, 의료 접근성에 대한 규제, 1차 의료기관의 성격, 성과의 다섯 측면에서 13가지 변수를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이 제시됐다. 이들은 I. 공급과 선택 지향형 공공모델(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10개국), II. 성과와 1차 의료 지향형 공공모델(한국, 스웨덴, 일본 등 7개국), III. 규제 지향형 공공모델(영국, 덴마크, 스페인 등 6개국), IV. 낮은 공급 및 낮은 성과 모델(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4개국), V. 공급과 성과 지향형 민간모델(미국, 스위스 등 2개국)이다.

여기에서 한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의 복지국가들과 함께 '성과와 1차 의료 지향형 공공모델'의 범주에 속한다. Reibling, Ariaans, Wendt(2019)이 제시한 당초 군집에서는 한국은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단독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9개의 군집을 5개의 범주로 묶으면서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묶였다. 그러므로 같은 집단에 묶인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의료보장제도의 성격을 많이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1-3〉 OECD 29개국의 의료보장제도 유형화

구분	소비지출 대비 비율	
	주된 성격	해당 국가들
I. 공급과 선택 지향형 공공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의료 지출 수준 중상 - 의료인력 수 상 - 공공재정 지출 상 - 의료 접근 규제 수준 하 - 대부분 건강보험 기반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10개국
II. 성과와 1차 의료 지향형 공공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의료 지출 수준 중 - 의료인력 수 중 - 공공 재정 지출 상 - 의료 접근 규제 수준 중 - 의료의 질 수준 높음 	한국, 스웨덴,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7개국
III. 규제 지향형 공공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의료 지출 수준 중 - 의료인력 수 중 - 공공재정 지출 상 - 의료 접근 규제 수준 최상 - 1차 의료기관 기능 중 	영국,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6개국
IV. 낮은 공급 및 낮은 성과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의료 지출 수준 하 - 의료인력 수 하 - 공공재정 지출 중 - 의료 접근 규제 수준 최상 - 의료의 질 하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
V. 공급과 성과 지향형 민간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의료 지출 수준 상 - 의료인력 수 중 - 공공재정 지출 하 - 의료 접근 규제 없음 - 1차 의료기관 역할 상 	미국, 스위스 등 2개국

주: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국가들을 진하게 표시함. Reibling, Ariaans, Wendt(2019)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그리스를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음. 다른 연구인 Wendt (2009)에서는 그리스를 유형화하기 어려운 범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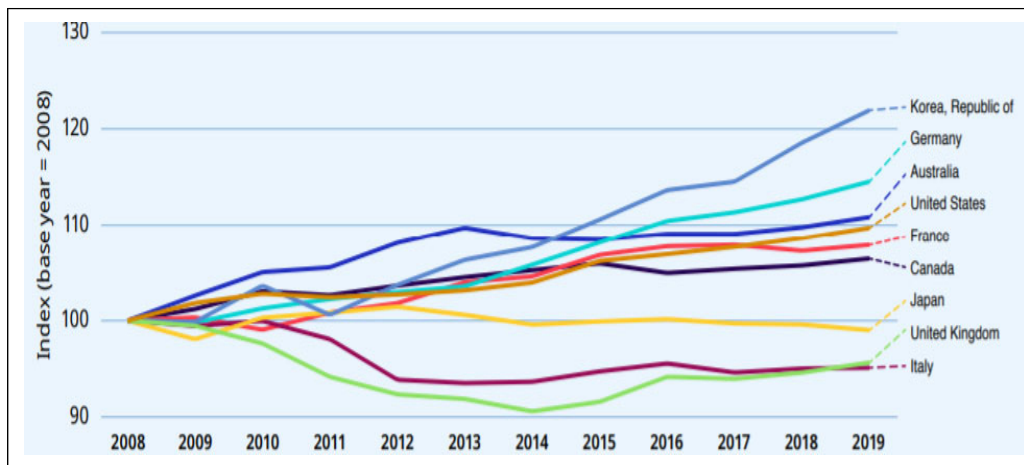
자료: Reibling, Ariaans, Wendt(2019) Table 4 재구성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9개 국가 가운데 그리스를 제외한 8개국은 Reibling, Ariaans, Wendt(2019)이 제시한 5개 범주 가운데 처음 I~III 범주에 속했다. 한국이 속한 II 범주 및 III 범주(규제 지향형 모델)는 대부분 조세 기반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점에서,

즉 병원의 문턱이 매우 낮은 한국과 II, III 범주 국가들은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건강보장의 영역에서 한국이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과 한 집단으로 묶였다는 점은, 복지국가의 성격과 개별 제도의 성격이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의 제도들이 가계의 지출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지출 절감이라는 접근이 한국에서도 낯선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 한국에서 집권한 정부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내세운 바 있다. 이 정책 기조는 흔히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으로 상징되며, 일부 성과([그림 2-1-1] 참고)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정책이 ‘가계지출 경감 정책’이다. 가계지출 경감 정책은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세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가계지출 수준을 파악하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했다.

[그림 2-1-1] G20 국가들의 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자료: ILO (2021) 그림 3.4 (a) 34쪽.

여유진(2002)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소비지출의 불평등 경향에 주목하고, 그 내적 기여요인을 확인하고자 한 드문 연구이다. 당시 도시가계조사를 활용해서 1982~2000년 동안 소비 항목별로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김기태 외(2019)의 연구 역시 한국과 다른 네 개의 복지국가(스웨덴, 미국, 일본, 독일)의 ‘가용소득’을 비교하고 관련 정책 제언을 시도한 드문 예였다. 해당 연구에서 가용소득은 “가구의 가처분소득 가운데 주거, 의료, 보육, 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가리킨다. 여기서 주거에 관한 지출에는 주택 소유 혹은 임차를 위한 부채 원금 상환액 및 이자액을 포함”(김기태 외, 2019, p.5)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용소득 수준을 다른 네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인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과 비교 분석했다.

이현주 외(2020)의 연구는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가계의 빈곤율 및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및 돌봄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산출한 뒤, 각각 가처분소득과 조정가처분소득의 소득분배지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각 영역의 사회서비스가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보면, 가계의 지출 가운데 의료비를 차감할 경우, 빈곤율이 1.55%p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확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같은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가계지출 수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이러한 무관심은 지금까지 재분배와 관련한 연구가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경로가 공적 서비스 확대

를 통한 가계의 불가피한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돌봄 등의 제반 사회정책 영역에서 공적인 규제, 공적인 전달, 공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이 같은 정책 효과는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접근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소비 항목별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주거·의료·공교육만을 보면, 한국 가계의 핵심생계비 부담 수준은 다른 복지국가들에 견줘 높지 않다. 김기태 외(2019)는 한국 가계의 주거·의료·공교육 관련 지출 부담이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에 견줘 가볍다는 점을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주거비 및 주거 관련 부채로 인한 비용 부담이 다른 국가들에 견줘서 한국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만, 당시 연구는 가계의 핵심생계비로 주거, 공교육, 의료비만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영역 외에 사교육, 교통, 통신 영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수준과 이에 따른 빈곤 및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했다.

제2절 국제 비교 분석 기준

1. 자료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유럽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은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 및 유럽의 통계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Eurostat, 2020). 유럽연합은 유럽가구지출설문을 실시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했다(Eurostat, 2020). 첫 번째는 유럽 단위에서 조정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혹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ices)를 산출할 때,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가운데 품목별 가중치를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둘째, 국가별 통계청의 입장에서는 개별 가구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유럽가구지출 설문을 국민계정상의 소비지출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별 통계청에서는 빈곤 문제를 연구하면서 소득 및 지출 분배 수준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유럽가구지출설문을 활용한다.

유럽가구지출설문은 다른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와 일부 차이점이 있다. EU-SILC(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등과 다르게, 유럽가구지출설문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Eurostat, 2020).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가구지출설문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자료를 제출할 때, 통계의 목적이나 방법론 등에서 자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Eurostat, 2020).

유럽가구지출설문 자료를 유럽통계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다소 복잡한, 네 단계에 걸친 인증 및 등록 절차를 6개월 넘게 거쳐야 했다. 첫 번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유럽연합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기관인증 절차였다. 연구진은 지난 2021년 1월 13일에 기관인증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차례 추가자료를 제출한 뒤, 2021년 2월 26일 기관인증을 받았다.

두 번째는 유럽가구지출설문을 받기 위한 연구계획서 인증 절차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유럽통계청이 제시한 유럽연합 마이크로데이터 홈페이지에 이 연구의 영문 연구계획서를 3월 4일에 제출했고, 유럽연합통계청은 해당 연구가 유럽가구지출설문 자료를 받기에 적절한지 심사를 진행했다. 그에 대해 연구진은 4월 8일에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럽통계청이 요구하는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세 번째 절차는 유럽연합통계청이 개별 국가들의 통계청과 해당 국가의 자료를 제공할지 협의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28개 국가의 전체 자료보다는, 12개 주요 국가의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복지국가 유형별로 3~4개 국가를 선정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12개 유럽연합 국가들(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영국)의 통계청과 협의를 거친 뒤, 6월 19일에 11개국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다만, 독일 통계청은 연구진의 자료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네 번째 절차는 유럽가구지출설문 자료가 업로드되는 S-CIRCABC 사이트의 등록 절차였다. 유럽연합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일련의 등록번호(Reserch Project Proposal Reference Number)와 이미 등록한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6월 21일에 S-CIRCABC 사이트를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반년 동안 유럽연합 통계청에 33회에 걸쳐서 이메일을 보냈으며, 30회의 답 메일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체제의 네 가지 유형별로 각각 두 국가를 선택해서 분석했다. 최종 선정한 국가는 자유주의(영국, 아일랜드), 보수주의(프랑스, 벨기에), 사회민주주의(스웨덴, 덴마크), 남유럽(그리스¹⁾, 스페인)나라들이다. 연구 초기에는 보수주의 국가에 독일을 넣으려고 했으나, 유럽연합 통계청으로부터 국가별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독일 통계청만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Eurostat, 2021).

한국의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가계동향조사의 개발 목적 가운데 하나는 “가계소득 및 지출조사를 실시 중인 해외 각국과의

1) 당초 남유럽 국가 중 하나로 이탈리아를 고려하였으나 유럽연합의 HBS 자료상 이탈리아의 모든 케이스에 소득변수값이 '0'이 입력되어 있었으며, 유럽연합 통계청에 문의한 후 활용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이탈리아를 그리스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구축하여 국제적 연구가 진행되도록 자료를 구축”(통계청, 2020; 3)하는 것이다. 1942년 일제 말기부터 시작된 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를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017년에 지출 부문과 소득 부문을 이원화하여 조사를 수행한 이후, 2019년에는 다시 전용 표본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부문을 통합하고, 연간 지출 부문을 단일한 6-6-6 연동 표본 체계로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6-6-6’이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조사에 참여한 뒤, 6개월간의 휴식 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2. 분석 기준

국제 비교연구에서는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수평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네 차례 회의를 통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수치 및 비율, 가구유형 및 소득분위 설정, 필수재의 설정, 데이터 분석 연도 등에 대한 협의의 거쳤다. 그 결과 다음의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한국(가계동향조사)과 유럽 국가(유럽가구지출설문)의 자료 가운데서 ① 총소득²⁾ 대비 대분류 지출 항목 비율, ② 총소비지출 대비 대분류

2) 소득변수(EUR_HH095)의 범위에 대해 유럽연합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각 국가에서는 연간 기준의 소득값을 제공하며, 따라서 비경상소득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즉, 분석에 활용한 소득변수(EUR_HH095)는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값으로 경상소득만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HBS는 소비 관련 자료를 주로 담아서, 가처분소득과 같은 자세한 소득 자료는 담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Eurostat은 연구진이 보낸 문의 사항에 대한 답신에서 복권과 같은 비경상소득도 소득변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유럽 국가들에서 월소득이 아니라 연 소득 값을 보내면서 비경상소득도 대체로 포함된다. 일부 극단값을 제거되기도 하지만 유럽연합 통계청은 HBS 자료 상에 나타나는 극단값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아직 두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Eurostat, 2021.9.14. 이메일). 이 연구 과정에서도 일부 극단값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지출 항목 비율, ③ 총소비지출 지니의 대분류 항목별 요인 분해(Lerman & Yitzhaki, 1984)의 결과값을 국가별로 산출한 뒤, 이를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둘째, 가구유형은 지출행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진의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가구유형을 세부화할수록 유효표본 수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럽통계청의 유럽가구지출설문 누리집(ec.europa.eu/eurostat/web/household-budget-surveys)에는 표본 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European Commission(2003)의 다소 오래된 자료에서는 네덜란드(1,851가구)부터 독일(62,000가구)까지 국가별로 표본의 수가 다양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별 국가의 통계청에서 확인해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표본이 2만 8,000가구(Insee, 2021), 영국은 10,349가구를 표본 추출한 후, 설문에 응답한 4,760가구의 자료를 담고 있었다(UK ONS, 2017).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가구유형을 가능한 한 단순화해서 ① 전체 가구, ② 노인단독가구(65세 이상), ③ 4인 가구(부모 + 자녀 2인)로 나누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추가로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 혹은 3인 가구와 4인 가구 등의 비교 분석을 고려하였으나 지출비목별 부담과 관련한 지출 구성과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인이 있는 가구로 분석을 확장할 경우 국가별로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구성 혹은 동거 형태에 따라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하여, 노인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4인 가구의 경우, 자녀 연령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자

연구진의 검토 결과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하나의 값을 제외하고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째, 유럽연합 통계청에서 극단값을 조정한 결과를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실제 분석 과정에서 평균값을 좌우할 정도의 극단값은 찾기 어려웠다. 셋째, 일부 극단값도 실제 소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교통비의 경우는 자동차 구입비 등에서 극단값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녀의 연령을 만 16세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잦은 반면, 유럽은 그러한 빈도가 적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였다. 또한 유럽가구지출설문 자료상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스웨덴 등)가 존재하고, 별도로 구분해 둔 가구 유형에서 자녀의 연령 기준을 16세로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한 가구유형별 표본 수는 <표 2-3-2>와 같다.

<표 2-3-1> 가구유형 구분

가구유형	조작적 정의
전체 가구	전체 가구
노인단독(독거)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단독(독거) 가구
4인 가구	부모 + 자녀(만16세 미만)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참고) 3인 가구 ¹⁾	부모 + 자녀(만16세 미만)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주: 1) 교육비 분석 시 노인단독가구 대신 3인 가구를 포함하여 분석함.

<표 2-3-2> 가구유형별 표본 수

(단위: 가구)

가구유형 국가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3인 가구 (부모+자녀1)	4인 가구 (부모+자녀2)	전체
SE(스웨덴)	170	266	255	232	2,870
DK(덴마크)	238	266	129	165	2,205
BE(벨기에)	325	505	520	666	6,135
FR(프랑스)	1,927	1,586	1,496	1,766	16,978
ES(스페인)	1,793	2,174	2,659	3,125	22,130
EL(그리스)	882	774	550	685	6,150
IE(아일랜드)	738	678	548	782	6,839
UK(영국)	682	515	475	473	5,263
한국	963	847	758	1,211	9,709

주: 1)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이 2인인 가구, HBS 데이터의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로 설정함.

2)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 그 외 2015년 기준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셋째, 필수재의 범주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로 한정했다. 우선 집합재로서의 4개(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범주를 대분류 기준으로 정하여 분석했다. 가계동향과 유럽가구지출설문 모두 가계지출의 범주를 ① 식료품·비주류음료, ② 주류·담배, ③ 의류·신발, ④ 주거³⁾·수도·광열, ⑤ 가구용품·가사서비스, ⑥ 보건, ⑦ 교통, ⑧ 통신, ⑨ 오락·문화, ⑩ 교육, ⑪ 외식⁴⁾·숙박, ⑫ 기타 상품 및 서비스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부록1] 참고). 이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가계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재로 ④ 주거·수도·광열, ⑥ 보건, ⑦ 교통과 ⑧ 통신, ⑩ 교육을 선택했다. 물론, ① 식료품·비주류음료 역시 필수재로 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의 대상 범주인 다섯 범주로 한정했다.⁵⁾ 각 범주에 포함된 항목⁶⁾은 <표 2-3-3>과 같다(통계청, 2020: pp.40-43).

먼저 주거·수도·광열비는 주거시설을 이용하고, 거주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 폐수·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모두 포함하였다. 따라서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데 지출하는 실제 임대료,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주택유지 및 수선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비,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를 위한 공동비용 등 주거 관련 서비

3) 주거비에는 실제주거비(실제임대료,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s for housing), 주택유지 및 수선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비, 기타주거 관련 서비스, 연료비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분석에서는 귀속임대료를 주거비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참고로, 귀속임대료를 소비지출에 포함할 경우, 국가별 주거비 부담 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HBS를 분석한 결과, 스웨덴은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31.7%로 귀속임대료를 제외할 때(19.6%)보다 12.1%p나 증가했다.

4) 가계동향이 제시하는 범주에서는 가계지출의 열한 번째 범주로 음식 및 숙박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가구지출설문을 이 범주를 Restaurants and Hotels로 제시하고 있다. 가계동향이 제시하는 대로 '음식 및 숙박'으로 제시할 경우, 첫 번째 지출 범주인 식료품·비주류음료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음식 및 숙박' 대신 '외식 및 숙박'으로 제시한다.

5) 물론,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생활 분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복지의 영역에 포함된다. 더욱이 식품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에 포괄되는 영역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복지(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등과 같이, 지출 영역이 대부분 이번 분석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보고서는 사회정책의 영역을 다소 협소하게 다섯 영역으로 한정했다.

6) 통계청(2020),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스비용,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비 등이 포함된다.

〈표 2-3-3〉 지출 영역별 세부 비목

분석 대상 5범주	세부 비목
주거·수도·광열	실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 관련서비스, 연료비(전기료, 도시가스 등) 등
의료	의약품, 의료용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입원서비스, 기타 의료서비스 등
교육	정규교육(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 학원교육, 기타 교육 등
교통	자동차 구입, 기타 운송기구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 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 운송, 기타 교통 관련 서비스 등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 장비, 통신서비스 등

자료: 가계동향조사(2020)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보건)의료비는 사람의 질병 예방, 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다. 따라서 처방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사 및 의사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 의약품 이외에 안대, 식염수 등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용,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신체의 교정 및 유지에 필요한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구입비용, 외래의료서비스비, 치과서비스비, 이외에 기타 의료 관련 서비스비, 마지막으로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부터 치료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병원 입원치료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비는 학습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초등교육(초등학교 교육서비스), 중등교육(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서비스), 고등교육(2년제 대학 이상 정규교육)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과 정규교육 이외에 학원(성인학원 포함) 및 보

습교육, 교육훈련 및 연수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포괄한다.

교통비는 이동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지출로,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구입, 자동차 이외에 사람의 이동 및 화물운송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 구입 등 기타 운송기구 구입, 가정용 운송기구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개인교통 등 기타 개인교통 서비스 관련 비용과 철도(기차 및 지하철 등) 운송, 육상(버스, 택시 등) 운송, 기타 운송비, 여객 이외에 기타 화물 등 관련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는 의사·지식·정보 등을 주고받는 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구입비,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다.

넷째, 자료 분석 연도는 2015년도로 정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9년 혹은 2020년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연동 패널의 성격 때문에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19년 혹은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자료의 경우 데이터 제공 시 가구별 소득값이 존재하지 않고, 소득구간 변수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득 변수 활용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소득값이 제공되는 가계동향조사(분기) 자료는 연간화가 불가능한 점에서 분기별 특성을 상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표본이 확보되는 2015년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유럽가구지출설문 자료의 가장 최근 자료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2015년 자료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가능한 한 동일 시점에서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자 했다. 실제로 가계동향의 2015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물론, 연구 시점보다 6년이 앞선 자료를 활용했

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HBS에 2015년의 자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2010년 자료를 사용했다.

다섯째, 한국이나 유럽 국가 가구들의 총소비지출액 대비 개별 소비지출 비율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은 가구별 비율을 구한 뒤 평균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식은 전체의 가구 특정 지출액을 합산한 값을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액을 합산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해서 제시하면 <표 2-3-4>와 같다. 한 나라에 A, B 두 가구만 있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방식대로 총소비지출액 대비 교육비 지출액 비율을 구하면 $70\%(0.7 = (A \text{ 가구 비율 } 0.4 + B \text{ 가구 비율 } 1.0)/2)$ 가 된다. 두 번째 방식대로 계산하면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약 40.5%가 되는데, 계산식은 $0.405 \approx (4000 + 100)/(10000+100)$ 이다. 두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4>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전체 가구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구분	총소비지출액	교육비	1) 가구 비율 평균 기준	2) 전체 가구 전체 지출액 평균 기준
A가구	10,000	4,000	0.4 (=4000/10000)	
B가구	100	100	1.0 (=100/100)	
합계	10,100	4,100	$0.7=(0.4+1.0)/2$	$0.405(=4100/10100)$

자료: 필자 작성.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전체 소비지출과 함께 계산식에 들어가는 소득이 0인 가구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구의 경우, 예를 들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0인 가구가 46가구 있었다 ([부록 3] 참고). 또한 소득이 0인 가구를 제외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고 지출액이 많은

경우, 소득 대비 특정 범주 지출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큰 수치가 되고, 이러한 가구들의 비율이 전체 평균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경상소득 대비 교통비의 비율이 200%가 넘는 가구가 26가구 있었다([부록 3] 참고).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 비율 산출 방식을 사용했다.

여섯째, 소득 기준은 총소득, 엄밀히 말하자면 비경상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으로 산출했다. 김기태 외(2019)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을 국제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했으나, 유럽가구지출설문에서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통계청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총소득 기준을 활용했다.

일곱째, 소득 및 모든 지출 항목을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균등화했다. 교통 및 통신비의 경우, 균등화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가구지출 부담을 반영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의 통일성 측면에서 모든 비목을 균등화했다.



제3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제3절 나가며

제 3 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1. 가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의 의미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식주이다. 의(衣)는 인간의 피부를 보호하고 계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복, 신발 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식(食)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물과 관련된 것이다. 주(住)는 인간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과거에는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장소로, 현재는 쉼을 제공하는 쉼터로서 기능하는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의식주 모두 인간이 생활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거는 인간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 국가는 국민들의 주거 혹은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통해 주거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거 혹은 주택에 대한 개념은 시기와 국가별로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전세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 중심으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전세와 월세의 특징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거비 측면에서 보면 월세는 매월 일정 수준의 임대료가 나간다는 점에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전세는 매월 부담해야 할 임대료가 없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초기에 목돈이 필요하고, 이를 조달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점에서 월세에 비해서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거

와 관련하여 주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주거 혹은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즉 주거비에 관한 것이다. 주거비는 주거 혹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들어가는 혹은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최저생계비 계측 시 주거비도 함께 측정하며, 이때 주거비는 “투자의 목적, 주거욕구의 반영, 자아의 표현, 주거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으로 정의한다(김태완 외, 2013).⁷⁾

인간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면, 생활환경이 줄어들고, 주거·수도·광열비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국민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빈곤층을 돕기 위한 주택수당, 주거급여 등 수당과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과 주요국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과 주요국의 주거 지표 변화

한국의 주거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자가가 가장 큰 비중(50% 중반)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가 다음으로는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가 서로 다른 변화를 보인다. 전세는 2006년 22.4%에서 2019년 15.1%까지 감소한 반면에 보증금 있는 월세는 같은 기간 15.1%에서 19.7%로 증가하였다. 2014년 이후로 서로의 점유 비중이 역전되었다. 월세가 늘어나면서 보증금 없는 월

7) 한국에서 최저주거비 개념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속의 최저주거비는 “최저주거기준에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3, 재인용)

세의 비중 역시 2006년 2.1%에서 2019년에는 3.3%로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지만 이후 추가 자본이 필요 없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의 장점이 있는데, 매월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월세가 증가하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1〉 주거점유 형태 변화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자가	55.6	56.4	54.3	53.8	53.6	56.8	57.7	58.0
전세	22.4	22.3	21.7	21.8	19.6	15.5	15.2	15.1
보증금 있는 월세	15.1	14.8	18.2	18.6	21.8	20.3	19.8	19.7
보증금 없는 월세	2.1	1.9	2.0	2.7	1.4	2.7	3.3	3.3
사글세	1.8	1.5	1.3	0.3	0.7	0.7	0.0	0.0
무상	3.1	3.0	2.7	2.8	2.8	4.0	4.0	3.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행정구역별 점유형태, (2021.10.03. 인출)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소득계층별로 주거점유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전세 비중이 감소하고 보증부 월세 등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가 2006년 18.8%에서 2019년에는 10.9%로, 중소득층은 같은 기간 26.5%에서 18.7%로, 고소득층은 23.2%에서 15.3%로 모두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보증부 월세는 저소득층이 2006년 20.3%에서 2019년 29.5%로, 중소득층은 같은 기간 14.2%에서 17.4%로, 고소득층은 7.2%에서 6.2%로 변화했다. 저소득층은 중소득층 혹은 고소득층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점유형태 변화가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소득계층별 주거점유 형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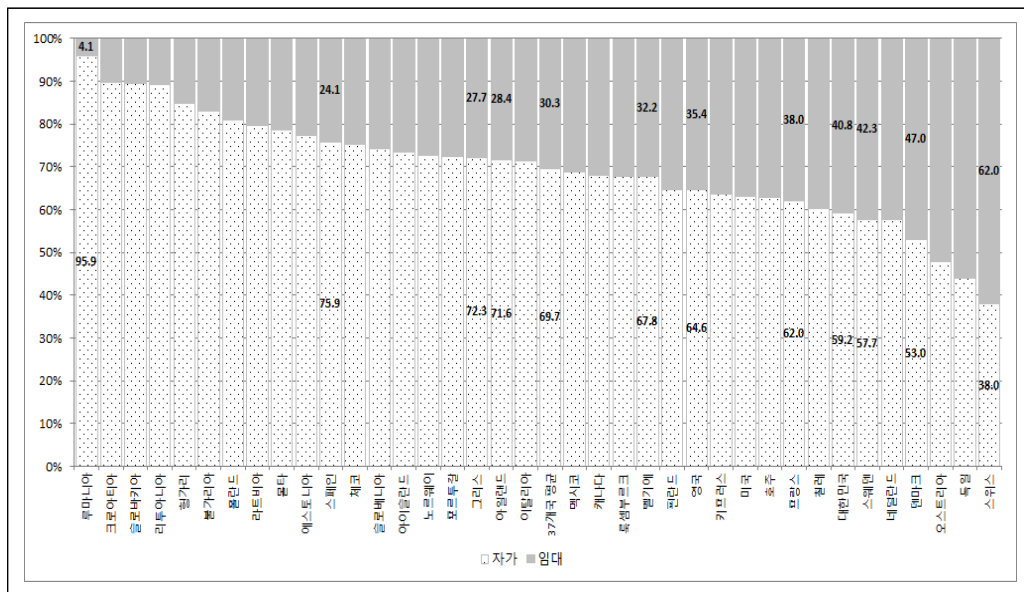
구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2006	계	100.0	100.0	100.0
	자가	49.7	55.3	67.0
	전세	18.8	26.5	23.2
	보증부 월세	20.3	14.2	7.2
	월세	4.0	0.8	0.2
	사글세	3.1	0.7	0.3
	무상	4.1	2.5	2.2
2010	계	100.0	100.0	100.0
	자가	46.9	54.0	69.5
	전세	16.8	25.1	23.0
	보증부 월세	25.8	17.1	5.6
	월세	4.1	1.0	0.3
	사글세	2.8	0.6	0.2
	무상	3.7	2.3	1.4
2014	계	100.0	100.0	100.0
	자가	47.5	52.2	69.5
	전세	14.2	23.3	20.8
	보증부 월세	29.4	21.4	7.7
	월세	2.9	0.6	0.2
	사글세	1.7	0.2	0.2
	무상	4.2	2.3	1.6
2016	계	100.0	100.0	100.0
	자가	46.2	59.4	73.6
	전세	12.9	18.1	15.9
	보증부 월세	28.7	17.8	7.6
	월세	5.2	1.1	0.6
	사글세	1.4	0.3	0.1
	무상	5.6	3.4	2.2
2019	계	100.0	100.0	100.0
	자가	46.4	59.6	76.1
	전세	10.9	18.7	15.3
	보증부 월세	29.5	17.4	6.2
	월세	7.2	1.2	0.4
	무상	5.9	3.2	1.8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지역별 계층별 점유형태, (2021.10.03. 인출)

주요 국가의 자가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살펴보면(2018년 기준), 루마니아의 자가 비율이 95.9%(임대 비율 4.1%)로 가장 많았으며, 분석대상 국가 37개국 평균 자가 비율은 69.7%(임대 비율 30.3%)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59.2%(임대 비율 40.8%)로 비교 대상 국가 평균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자가 비율을 보면 스페인이 75.9%(임대 비율 24.1%)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의 자가 비율이 53.0%(임대 비율 47.0%)로 가장 낮았다.

[그림 3-1-1] 주요 국가별 자가 및 임대주택 점유율 (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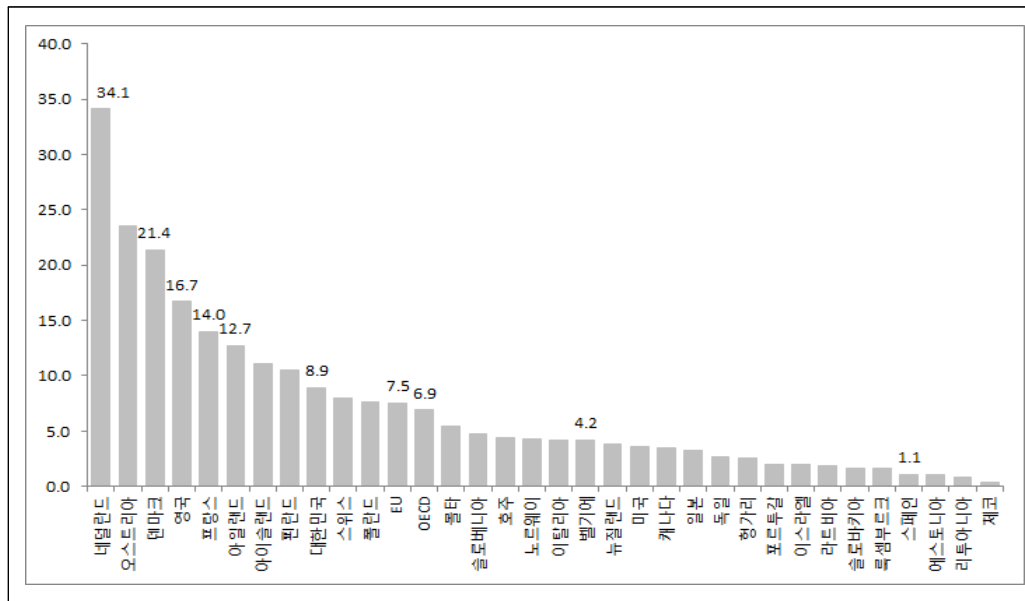
자료: 장경석(2020), OECD 자가 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4월호. 국회입법조사처. 재인용 및 필자 추가

자가와 더불어 주택 분야의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들 수 있다. [그림 3-1-2] 에서 보듯이 네덜란드가 34.1%로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OECD 평균인 6.9%보다 다소 높은 8.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자가 비율은 2019년에 들어서 58.0% 수준이고 임대주택이 42% 정도이므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여전히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임대주택 비율이 42.3%인데 이들 주택의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그림 3-1-2] 주요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2020년)

(단위: %)



자료: OECD(2021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Social housing/social rental housing stock, (<https://www.compareyourcountry.org/housing/en/3/all/default>에서 2021. 10.23. 인출)

한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주거·수도·광열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거·수도·광열비 중 실제 주거비는 2006년 46,739원에서 2020년에는 98,898원으로 52,159원(1.1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소비지출도 증가하여 실제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은 같은 기간 10.5%에서 2020년에는 11.9%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소득계층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3〉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주거·수도·광열비 수준

(단위: 월평균 원, %)

구분	소비지출 (A)	주거·수도·광열 (B)	실제주거비	기타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B/A)
2006	1,751,494	1,843,664	46,739	137,625	10.5
2007	1,807,312	1,877,900	47,414	140,376	10.4
2008	1,855,509	1,994,530	51,027	148,426	10.7
2009	1,883,783	2,021,370	51,226	150,912	10.7
2010	2,002,246	2,183,850	53,578	164,805	10.9
2011	2,102,262	2,307,650	55,761	175,004	11.0
2012	2,156,687	2,427,390	61,025	181,714	11.3
2013	2,166,619	2,516,340	65,627	186,008	11.6
2014	2,206,337	2,514,060	69,834	181,572	11.4
2015	2,193,001	2,592,830	80,332	178,951	11.8
2016	2,165,089	2,563,190	85,315	171,004	11.8
2017	2,556,823	2,829,990	104,618	178,382	11.1
2018	2,537,641	2,854,610	106,642	178,820	11.2
2019	2,456,678	2,765,890	99,402	177,187	11.3
2020	2,400,123	2,858,220	98,898	186,925	11.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소득지출 1인 이상 가구, 전국, (2021.10.03. 인출)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1. 가구유형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표 3-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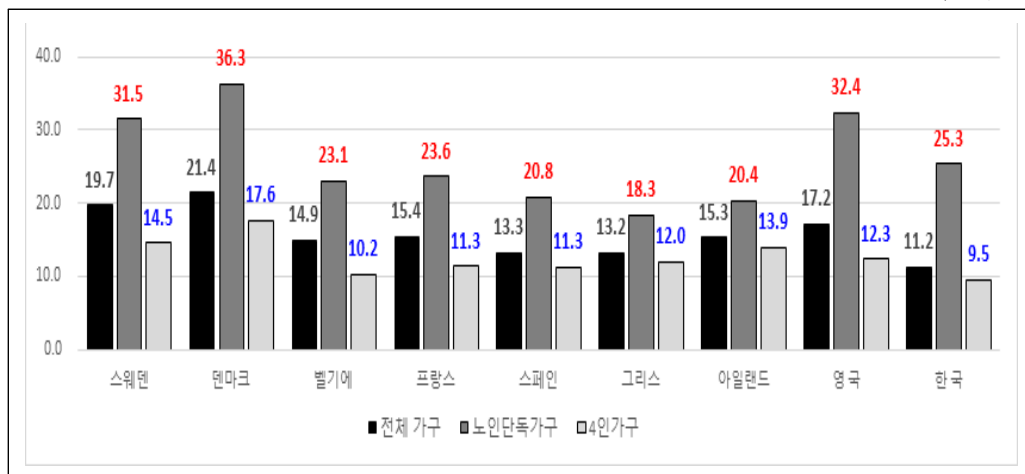
구분	소비지출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19.7	31.5	14.5
덴마크	21.4	36.3	17.6
벨기에	14.9	23.1	10.2
프랑스	15.4	23.6	11.3
스페인	13.3	20.8	11.3
그리스	13.2	18.3	12.0
아일랜드	15.3	20.4	13.9
영국	17.2	32.4	12.3
한국	11.2	25.3	9.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3-2-1〕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서구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살펴보면, 비교 국가와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차이가 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한국은 11.2%로 낮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13.2%)와 스페인(13.2%)을 제외하면 대부분 15% 이상이다.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을 가구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 보았다. 노인단독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구 기준에 비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노인단독가구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덴마크(36.3%), 영국(32.4%), 스웨덴(31.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북구에서 노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모든 국가에서 4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노인단독가구에 비해서 매우 낮았으며,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낮게 나타났다. 국가 간 비교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한 자리대(9.5%)에 머물렀다. 노인단독가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덴마크(17.6%)와 스웨덴(14.5%)에서 4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별로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이 눈길을 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20% 전후였고,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의 3분의 1가량을 주거·수도·광열비에 썼다. 반면, 흔히 남유럽 복지국가 유형으로 분류되는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낮은 점이 관찰된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전통적인 복지체제의 유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전반적인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에서는 낮았지만, 노인단독가구에 이르면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6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표 3-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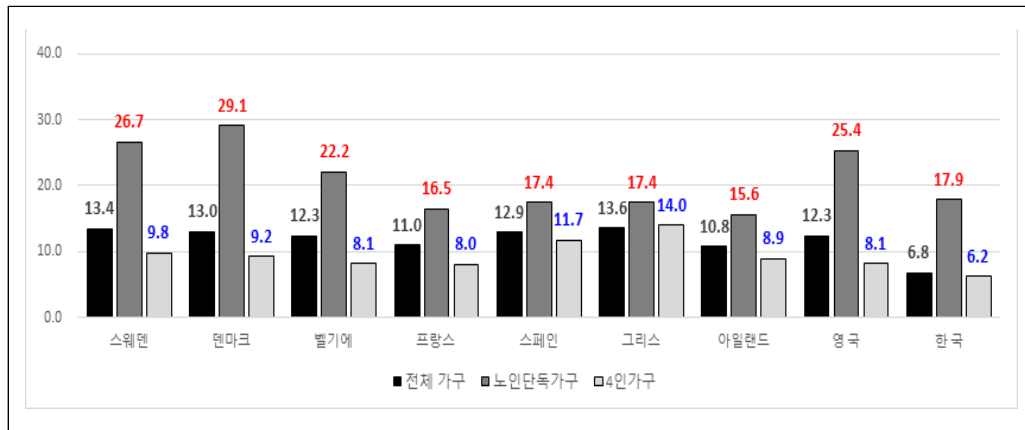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13.4	26.7	9.8
덴마크	13.0	29.1	9.2
벨기에	12.3	22.2	8.1
프랑스	11.0	16.5	8.0
스페인	12.9	17.4	11.7
그리스	13.6	17.4	14.0
아일랜드	10.8	15.6	8.9
영국	12.3	25.4	8.1
한국	6.8	17.9	6.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3-2-2]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소득 대비 비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가장 낮은 6.8% 수준이었으며,⁸⁾ 그리스가 13.6%로 높게 나타났다. 아일랜드는

8) 주거비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송인호(2015), 김기태 외 (2019) 연

10.8%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놓으면, 그리스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유럽의 두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가계의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HBS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스페인의 경우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평균 지출 비율이 97.5%였고 그리스 역시 102.9%로 높았다. 즉, 그리스에서는 소득보다 지출 수준이 더 높았다. 따라서 분모를 소비지출 대신 소득으로 놓을 경우, 이들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다른 국가에 견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로,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은 덴마크에서 가장 낮은 60.9%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벨기에도 82.9%였다.

가구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한국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덴마크(29.1%), 스웨덴(26.7%), 영국(25.4%), 벨기에(22.2%)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소득이나 소비지출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한국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6.2%로 매우 낮았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11.7%), 그리스(14.0%)에서 비율이 높았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북유럽 두 국가에서 4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월소득 대비 주거 비율은 2014년 20.3%, 2016년 18.1%로 이번 분석을 통한 한국의 수치 11.0%(〈표 3-2-4〉 참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계동향조사와 주거실태조사 간의 차이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소득 정

구도 한국의 주거비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마지막에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겠다.

의 기준 등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활용한 유럽연합의 HBS 자료가 2015년 기준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3-2-3〉 한국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지역특성별)

(단위: %)

구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등	도
2006	18.7	19.9	18.5	17.8
2008	17.5	22.3	19.3	15.9
2010	19.2	20.9	16.4	14.4
2012	19.8	23.3	16.8	14.5
2014	20.3	21.6	16.6	15.8
2016	18.1	17.9	15.4	14.2
2017	17.0	18.4	15.3	15.0
2018	15.5	18.6	16.3	15.0
2019	16.1	20.0	16.3	12.7
2020	16.6	18.6	15.1	12.7

주: 1)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2)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 2018년부터 세종시는 광역시 등에 포함해서 분석했고, 이전에는 충남(도 지역)에 포함.
 자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주택임대료 비율). (2021.10.23. 인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5>)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분석한 국가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이 6.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이 11.0%이다. 반면 영국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33.2%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국가 유형별로 유형화되는 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임대료 부담이 낮았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번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4〉 국가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단위: %)

구분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22.3	37.1	15.8
덴마크	18.3	30.9	8.8
벨기에	23.7	29.8	16.6
프랑스	19.6	24.4	14.7
스페인	6.9	12.3	4.4
그리스	26.6	31.0	26.0
아일랜드	18.7	16.9	14.5
영국	33.2	49.0	21.8
한국	11.0	20.8	7.4

주: 1)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2) 가구 가중치 기준임

3)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 (중위월임대료 ÷ 중위월가구소득) × 100.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추가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뜻하는 RIR(Rent Index Ratio)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RIR 비율이 20% 혹은 30%를 초과하는 임대료(실제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3-2-5〉에서 보면 월소득 대비 임대료가 2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유럽 국가 가운데서 스페인이 가장 낮았으며, 스웨덴, 덴마크 및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7.0%로 스페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가 3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20% 이상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다. 유럽 국가별로는 역시 스페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스웨덴과 영국이 15% 이상으로 역시 높았다. 한국은 3.8%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스웨덴, 덴마크에서 노인가구의 50% 이상이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임대료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전체 가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임대료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18.7%로 스페인(5.7%), 그리스(5.2%), 아일랜드(8.4%)보다 높았다. 한국의 경우 노인단독가구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임대료가 높다기보다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생기는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 부담이 3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스웨덴, 덴마크에서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43.1%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국가에서도 노인단독가구의 임대료 관련 부담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노인단독가구에 비해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30% 이상인 가구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적었다. 특히 사민주의 국가(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RIR 30% 초과 가구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임대료 부담의 경우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보다는 가구유형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5〉 국가별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단위: %)

구분	RIR 20% 기준			RIR 30% 기준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31.7	56.6	8.7	16.3	43.1	0.9
덴마크	24.1	50.5	5.6	10.5	30.4	0.0
벨기에	21.7	26.1	9.2	12.1	18.2	3.1
프랑스	17.9	20.8	6.5	7.8	8.9	1.8
스페인	11.3	5.7	10.8	6.9	3.4	6.8
그리스	12.7	5.2	14.0	7.5	3.1	8.2
아일랜드	15.6	8.4	12.0	8.4	5.7	3.4
영국	24.8	30.5	13.2	17.9	26.7	8.2
한국	7.0	18.7	2.7	3.8	13.9	1.4

주: 1)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2) 가구 가중치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2. 소득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여기서는 소득분위별로 주거·수도·광열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한국이 대부분의 분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출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저분위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비지출에 비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별로 보면, 스페인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주거·수도·광열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은 분위별로 주거·수도·광열비의 부담 비율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 그에 견줘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표 3-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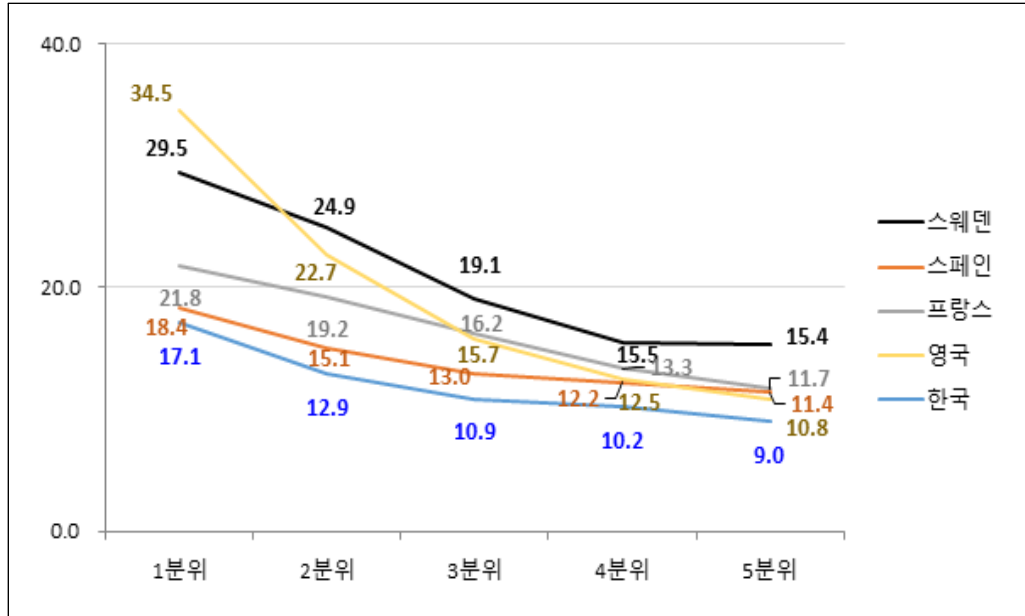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9.5	24.9	19.1	15.5	15.4	19.7
덴마크	33.2	27.5	20.4	16.8	15.7	21.4
벨기에	26.1	17.8	14.3	11.8	10.6	14.9
프랑스	21.8	19.2	16.2	13.3	11.7	15.4
스페인	18.4	15.1	13.0	12.2	11.4	13.3
그리스	17.9	15.9	13.8	12.4	10.3	13.2
아일랜드	25.0	19.7	15.0	12.5	10.8	15.3
영국	34.5	22.7	15.7	12.5	10.8	17.2
한국	17.1	12.9	10.9	10.2	9.0	11.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3-2-3] 5개국 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표 3-2-7>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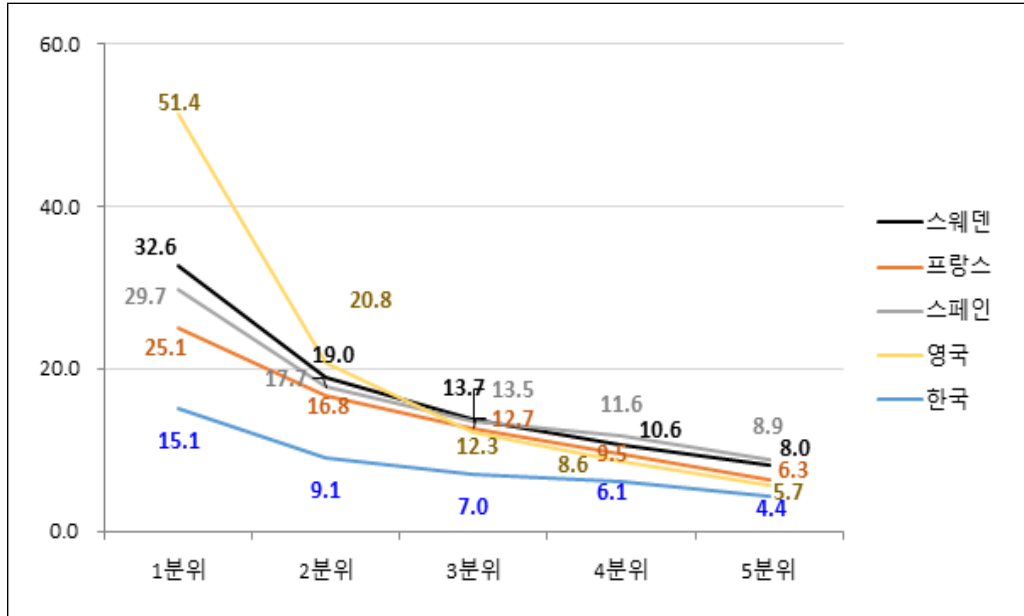
(단위: %)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2.6	19.0	13.7	10.6	8.0	13.4
덴마크	33.1	20.6	13.3	9.7	7.2	13.0
벨기에	28.8	17.1	12.7	9.7	7.1	12.3
프랑스	25.1	16.8	12.7	9.5	6.3	11.0
스페인	29.7	17.7	13.5	11.6	8.9	12.9
그리스	38.1	19.3	15.1	12.2	8.3	13.6
아일랜드	29.0	16.1	11.2	8.6	6.0	10.8
영국	51.4	20.8	12.3	8.6	5.7	12.3
한국	15.1	9.1	7.0	6.1	4.4	6.8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3-2-4] 5개국 분위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소득을 기준으로 분위별 거주비 지출 경향을 보면, 지출과는 또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한국은 전체 분위에서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물론, 1분위의 비율이 15.1%로 5분위(4.4%)의 3배 이상이었다. 한국의 1분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다른 모든 국가에서 1분위의 비율이 25%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국의 1분위에서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비율이 무려 51.4%였다. 영국은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보인다.

〈표 3-2-8〉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6.3	26.3	31.5	26.4	21.2	31.5
덴마크	40.3	36.9	32.4	21.1	26.8	36.3
벨기에	27.8	20.2	23.8	19.0	18.3	23.1
프랑스	26.6	27.8	24.1	19.6	18.8	23.6
스페인	21.0	22.0	21.9	18.8	19.2	20.8
그리스	19.2	19.6	17.5	17.8	16.7	18.3
아일랜드	24.4	21.6	16.8	12.0	12.9	20.4
영국	43.3	31.6	24.9	19.2	18.7	32.4
한국	26.2	24.7	34.3	20.4	11.0	25.3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9.7	26.3	17.6	18.6	8.7	29.1
덴마크	37.9	32.4	25.2	17.5	9.6	22.2
벨기에	32.0	20.7	22.5	16.4	10.2	16.5
프랑스	26.4	22.1	16.9	12.5	9.8	17.4
스페인	26.5	20.0	18.0	17.3	12.3	17.4
그리스	27.1	20.6	16.4	14.9	11.6	17.4
아일랜드	22.2	17.1	11.0	8.2	6.7	15.6
영국	45.4	25.9	17.2	11.4	8.7	25.4
한국	21.1	15.9	19.1	12.2	4.8	17.9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가구유형별로 보면, 먼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한국의 1분위의 소비 지출 대비 비율이 26.2%였다. 그리스(19.2%), 스페인(21.0%)보다는 높았지만, 덴마크(40.3%)나 영국(43.3%)보다는 낮았다. 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노인단독가구 1분위의 비율이 21.1%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가구유형 가운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로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수도·광열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분위만 한정해서 보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소비지출 대비(12.5%) 혹은 소득 대비(11.7%)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다른 분위에서도 한국 4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다른 국가의 같은 분위보다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표 3-2-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비율 (4인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5.0	20.5	14.1	12.0	12.3	14.5
덴마크	26.9	23.7	15.8	17.2	13.9	17.6
벨기에	26.5	12.2	8.9	7.6	8.3	10.2
프랑스	16.5	15.0	11.1	9.9	9.4	11.3
스페인	17.2	12.3	10.4	9.8	9.9	11.3
그리스	16.1	15.9	11.2	11.8	8.9	12.0
아일랜드	20.5	19.7	14.6	11.0	10.4	13.9
영국	27.1	19.3	11.5	10.1	6.8	12.3
한국	12.5	10.8	9.1	9.5	8.2	9.5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2.7	14.5	9.9	8.5	7.0	9.8
덴마크	26.1	13.4	8.9	8.9	5.9	9.2
벨기에	27.3	11.1	7.8	5.7	5.5	8.1
프랑스	20.5	13.3	8.8	7.0	5.1	8.0
스페인	27.7	15.7	11.6	9.6	8.2	11.7
그리스	40.1	21.1	13.8	12.6	8.1	14.0
아일랜드	21.7	16.0	10.7	7.1	5.1	8.9
영국	42.3	16.0	8.4	7.0	3.4	8.1
한국	11.7	7.9	6.6	6.2	4.2	6.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제3절 나가며

지금까지 유럽 주요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소비지출 및 소득에서 주거·수도·광열비가 점유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소비지출 대비 11.2%, 소득 대비 6.8%로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높은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면 다소 뜻밖의 결과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김기태 외(2019)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비교 대상인 네 개의 복지국가보다 낮게 나타난 바 있고, OECD가 집계하는 Better Life Index에서도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수준은 조정가처분소득 대비 15%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OECD, 2021e).

〈표 3-3-1〉 4개 복지국가와 비교한 주거비 부담 수준

구분	한국	한국II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비율	가용소득	82.4	79.4	77.4	74.2	74.2	70.0
	주거비	7.1	10.1	15.7	13.5	12.6	13.6
	의료비	4.7	4.7	1.9	4.6	3.0	5.9
	교육비	2.1	2.1	0.3	0.5	2.4	2.4
	부채비용	3.7	3.7	4.7	7.2	7.8	8.0
	가처분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PP 기준	가처분소득	2,898.8	2,898.8	3,608.6	3,105.5	2,421.8	3,675.0
	가용소득	2,389.6	2,301.4	2,794.1	2,304.5	1,797.9	2,571.0

주: 전월세보증금 환산액을 반영하지 않은 한국 통계를 한국I로, 반영한 통계를 한국II로 제시
 자료: 김기태 외 (2019) 표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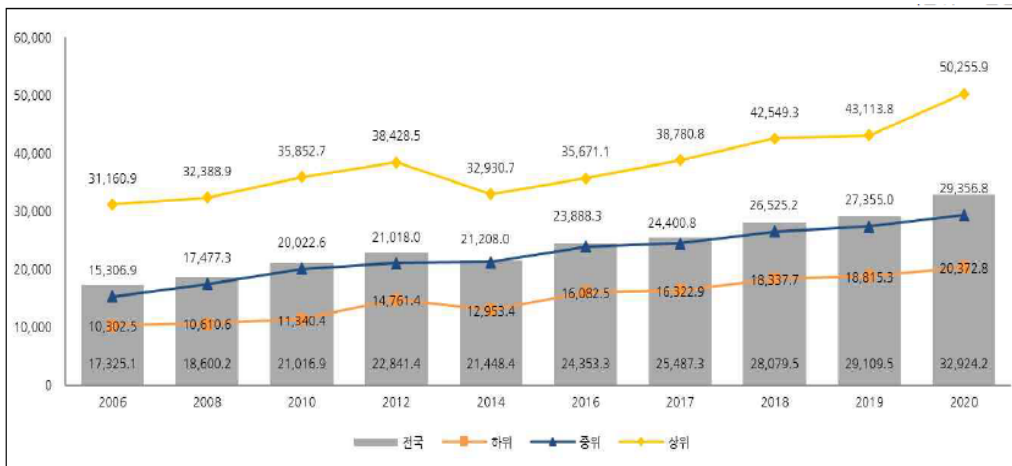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뜻밖에도 낮은 이유에 대해서, 김기태 외(2019)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의 영향이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 제도를 통해서 월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초기에 주택에 들어가는 입주비용의 측면에서 전세는 임차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주택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주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전세를 위한 모기지 비용은 주거비에 포함되기보다는 금융비용으로 부채 항목에서 조사하게 되므로 주거비에서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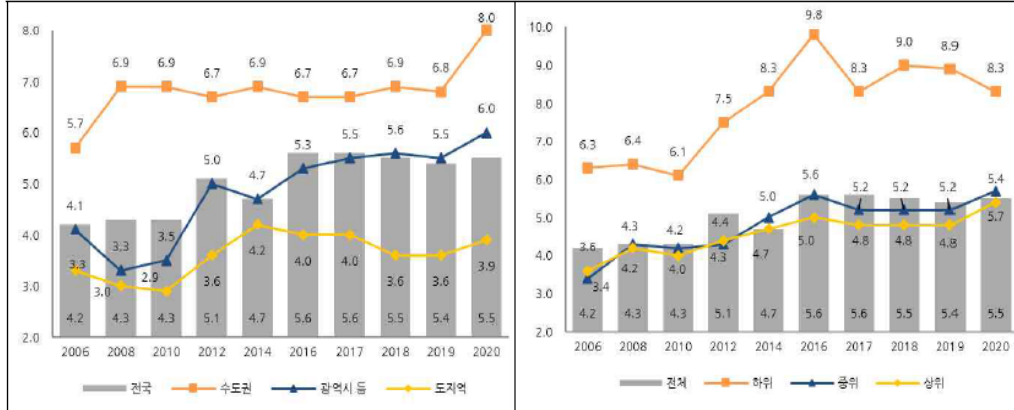
둘째,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이 중위권이며, 2010년 이후에도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OECD, 2021f). 물론, [그림 3-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2년 사이의 가격 상승폭은 다소 우려되는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집값 대비 임대료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 3-3-1] 소득별 주택가격 및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

(단위: 만 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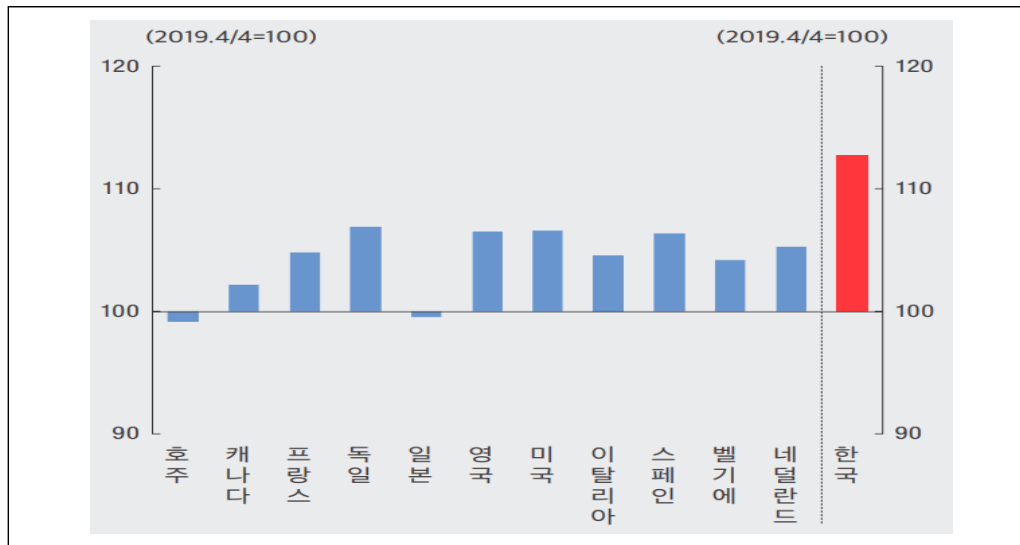


7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 강미나, 박미선, 이재춘, 이길제 외(2021). 2020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그림 3-3-2] 주요 국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 변화 (2020년 4분기)



주: 2019년 4/4분기 대비 2020년 4/4분기 기준
 자료: 한국은행(2021). 금융안정보고서. 2분기

셋째,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수도요금 및 전기료 등의 공과금 수준이 매우 낮았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넷째, 아파트라는 독특한 주거형태로 인해 일정한 단열 및 이웃 간 난방 효과가 있으며, 주거 관리 비용도 매우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공과금 같은 관리비만 내면서 지낼 수

있어서 월평균 주거비를 낮추게 되는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다. 2014년 이후로 전세와 월세의 점유 비중이 역전되었다는 점이다. 점차 전세 비중이 축소되고 매월 일정액을 주거비로 부담해야 하는 월세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월세 가구의 증가는 결국 주거비 부담을 높이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가구유형과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견줘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국내의 가구유형 가운데서는 노인단독가구가 소득과 지출 수준이 낮지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소득이 낮은 저분위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계층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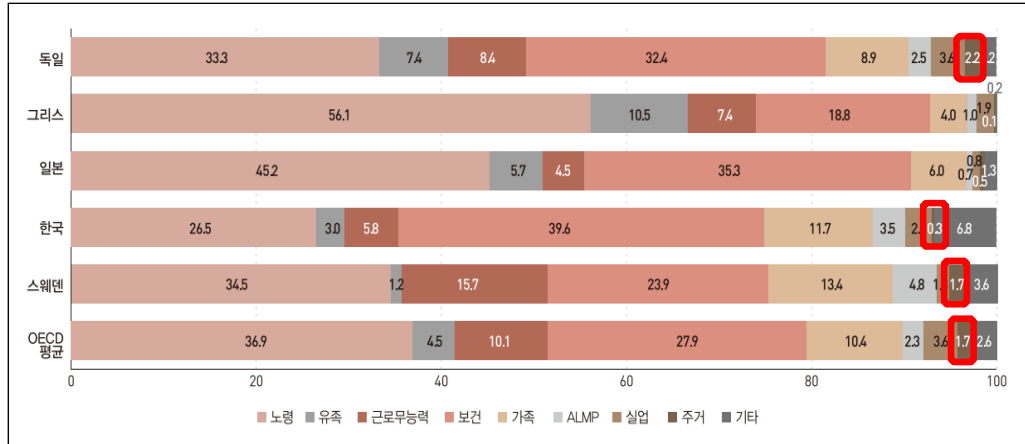
3장의 결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토할 대목이 있다. 유럽 국가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높아도 국민들의 실제 느끼는 부담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임대료 지원, 사회주택 제공 등)가 한국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높은 주거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⁹⁾ OECD SOCX 자료를 보면, 공공지출 중 주거 부문의 투자 수준이 한국의 경우 0.3% 수준이지만, OECD 평균은 1.7%로 우리와 비교해 5.7배 높았다. 주요 국가인 독일은 2.2%, 스웨덴 1.7%, 일본은 0.5%로 한국에 비해 주거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이 높았다. 그리스만 우리보다 낮은 0.1% 수준이었다.

9) 주거복지 혹은 주택복지는 두 가지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인지원으로 주거비 보조, 임대료 지원, 근로자 및 서민 대상 전세 및 주거비 대출지원 등이 있으며, 대물지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등을 들 수 있다(김현희, 2012)

76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3-3-3]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5년)

(단위: %)



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한국도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금리 현상의 여파로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 비중의 증가는 소득에서 점유하는 주거·수도·광열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순환적 고리를 만들게 된다. 2020년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소득 상위는 물론 소득 하위층의 주택가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중위 및 하위의 주택가격이 2006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수도권은 2006년 5.7배에서 2020년에는 8.0배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하위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8.3배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그림 3-3-3] 참고), 이로 인해 시장 불안정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한 정책 제언은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4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의료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제3절 나가며

제4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의료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1.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의 의미

질병과 부상에 따른 개인적 손실은 매우 크다. 아프면 그로 인한 고통 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비용도 부담이 된다. 의료비는 주거비 등과 함께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다. 아프면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을뿐더러, 치료비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의료비용이 가구의 경제력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 같은 문제는 당연히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물론, 높은 수준의 진료비는 부유한 가구의 생계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자주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라는 말로 표현된다(WHO, 2005). 재난적 의료비는 흔히 가구의 소득 혹은 지불 능력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WHO(2005)는 재난적 의료비 수준을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제외한 소득(non-subsistence income), 즉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분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어서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Wagstaff & Doorslaer(2003)는 가구의 소득 대비 2.5~15% 혹은 가구의 소득에서 식료품비 등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액수 가운데 10~40%를 의료비가 차지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간주했다.

재난적 의료비의 정의 혹은 측정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따라서 가구의 경제력을 소득 혹은 지출을 기준으로 할지,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혹은 지출 가운데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할지, 제외한다면 어디까지를 제외할지, 분자에 속하는 의료비 비목을 어디까지 포함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우경숙 외,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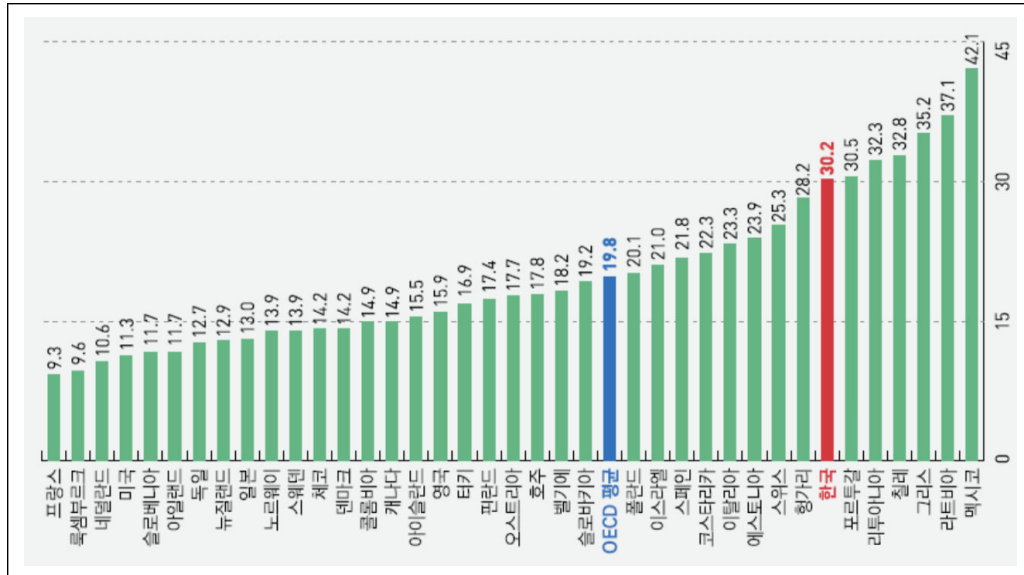
재난적 의료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료비의 과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종종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종종 다른 필수 생계비를 줄인다. 이현규, 한지형, 최현자(2018)는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의료비 외의 소비지출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했다. 다른 필수 생계비를 줄이지 못한다면,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세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2020)는 비정규직, 저학력 등 취약집단에서 미충족의료의 경향이 자주 관찰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건강에서 비롯된 문제가 빈곤 등과 결부되면서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한국에서 이 같은 의료비 과부담의 문제가 자주 연구의 대상이 됐다. 김수진(2019)은 의료패널을 분석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므로 질환 중심보다는 환자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경숙 외(2018)은 복지패널 분석을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가 미발생 가구에 비해서 빈곤화할 가능성이 4.4배 높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에 관한 연구가 자주 수행되는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림 4-1-1]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중

(단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130, 그림 27; OECD(2021g)

OECD(2021g)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액의 비중은 30.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높은 나라로는 멕시코(42.1%), 라트비아(37.1%), 그리스(35.2%), 칠레(32.8%), 리투아니아(32.3%), 포르투갈(30.5%) 등이 있다. OECD 평균은 19.8%였다. 한국은 가계의 직접부담액이 OECD 평균에 비춰 10.4%p나 높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는 다른 복지국가들에 견줘 봤을 때 상당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2021년 현재 상병수당도 부재한 상황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 혹은 기업을 매개로 한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앓을 경우에 소득 상실 및 병원비 부담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한국에 상병수당이라도 갖춰져 있다면, 생활비 및 의

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복지국가에서 상병수당의 부재는 소득의 상실과 아울러 의료비 과부담을 가계에 얹게 된다. 따라서 장기간의 상병은 개인의 빈곤화를 초래하기도 한다(이승윤, 김기태, 2017).

질병과 부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노동자가 상병으로 인해 빈곤화하면 이에 대한 재정적 지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도 따른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노동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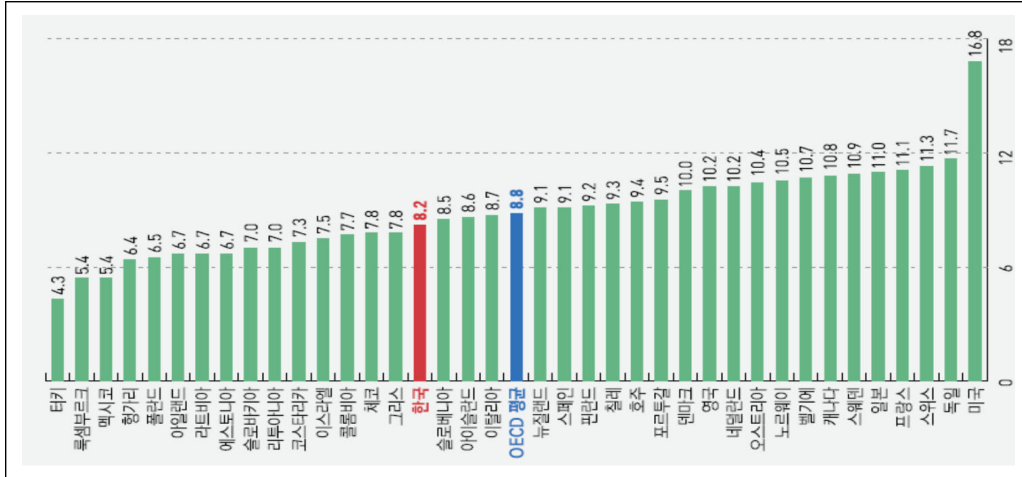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질병보험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병이라는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1883년에 독일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형태의 질병보험을 도입하였다.

3. 한국의 의료비 부담 수준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최종 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로, OECD 평균(8.8%)보다 낮다. 따라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9년 US달러 PPP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달러였다. OECD 평균인 4,087달러보다 낮다. 미국이 1인당 1만 948달러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1인당 1,133달러였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은 경상의료비 지출 수준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다.

[그림 4-1-2]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 (2019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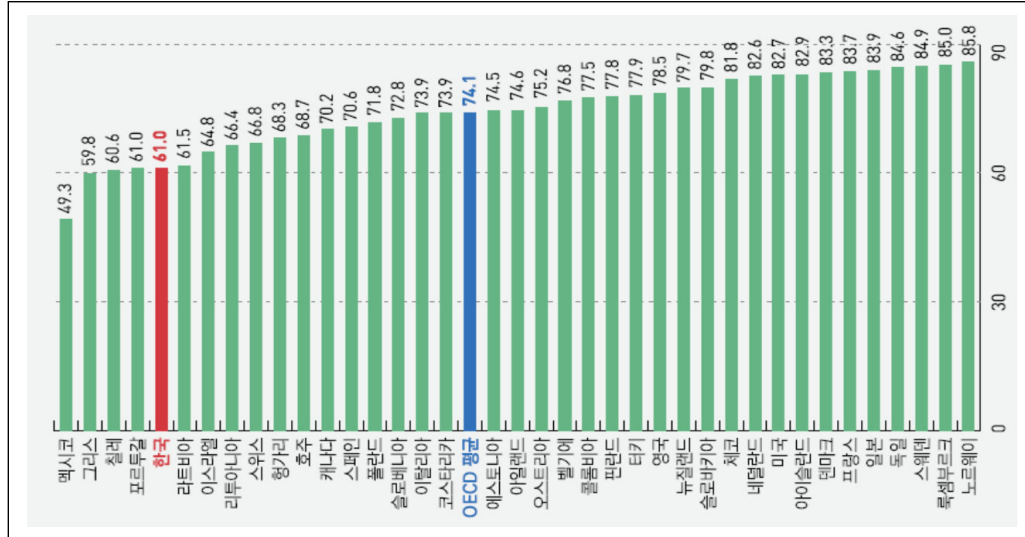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124, 그림 25; OECD(2021g)

그러나 한국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급격한 고령화 및 꾸준한 경제 수준의 향상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4.8%p 증가했다. 다른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같은 기간 0.1%p 증가했을 뿐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를 보면, 앞으로 한국 가계에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총 의료비 지출이 다른 OECD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가계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적지는 않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 가계의 의료비 직접부담 비율은 경상의료비 가운데 30.2%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4-1-3] 경상의료비 가운데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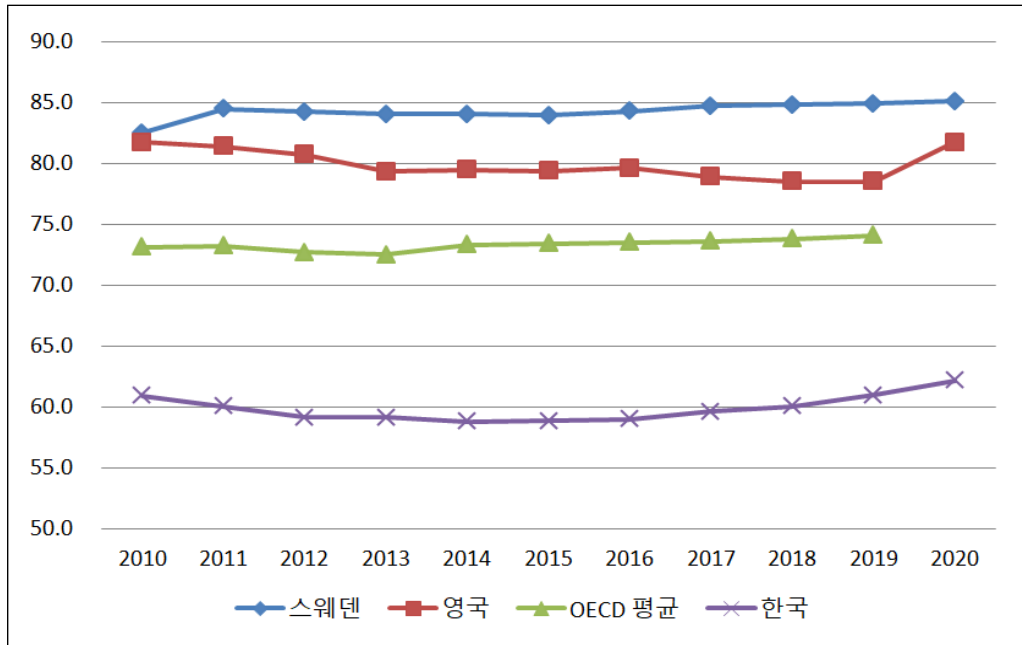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127, 그림 26; OECD(2021g)

이처럼 가계 부담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조세 혹은 사회보험에서 충당하는 비용 부담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OECD(2021g)에서 제시하는 경상의료비 가운데 정부·의무가입제도 비율은 한국이 61.0%로 매우 낮다. OECD 평균 74.1%보다도 매우 낮다. 한국에서 의료 분야의 공공화 수준이 낮은 결과, 가구의 의료비 부담 비중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왔다. 현재 정권도 집권 초기부터 이른바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고, 가계에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중했던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정책 개입에도 불구하고 정체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특히 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의 증가 속도보다 비급여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림 4-1-4] 국가별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OECD(2021g) 및 OECD(2021h), Health spending(<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에서 2021.10.11. 인출) 종합해서 필자 작성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 같은 긴급하지 않고 생명과 다소 무관한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까지로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은 그 이후 완만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달한 상황이다. 정책 성과가 적을수록, 가계가 짊어지는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을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1. 가구유형별 의료비 지출

〈표 4-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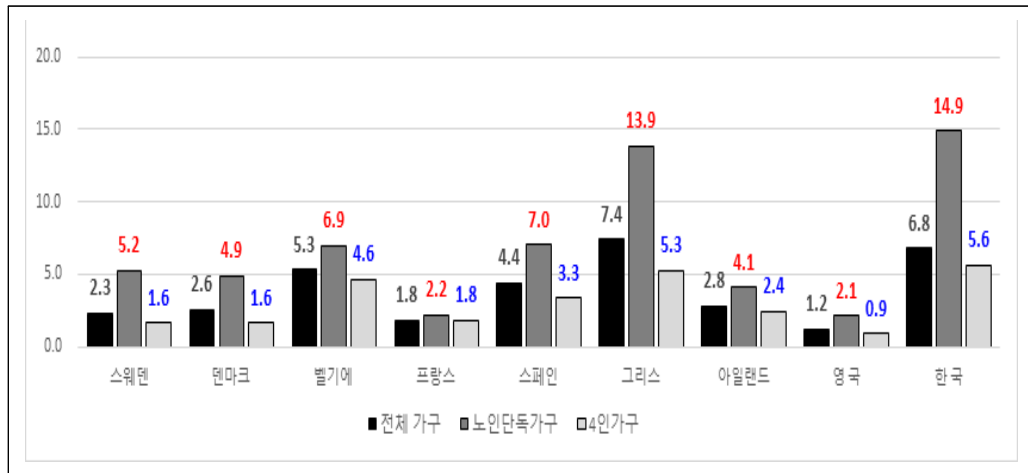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비지출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2.3	5.2	1.6
덴마크	2.6	4.9	1.6
벨기에	5.3	6.9	4.6
프랑스	1.8	2.2	1.8
스페인	4.4	7.0	3.3
그리스	7.4	13.9	5.3
아일랜드	2.8	4.1	2.4
영국	1.2	2.1	0.9
한국	6.8	14.9	5.6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4-2-1]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한국 가계에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은 비교 대상인 유럽 국가 가운데 그리스(7.4%) 다음으로 높다. 조세 기반 국가의료서비스(NHS)를 제공하는 나라(영국 1.2%, 스웨덴 2.3%, 덴마크 2.6%) 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은 나라(프랑스 1.8%)에서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의료보장은 복지국가의 전통적인 범주와는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 유형에 속하는 영국의 의료비 지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은 NHS의 기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단독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노인의 부담 수준은 14.9%까지 올라간다. 그리스(13.9%)와 더불어 유일하게 의료비 부담 수준이 두 자리대이다. 나이가 들면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모든 국가에서 노인 가구에서 소비지출 가운데 의료비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2.2%로, 전체 가구 비율(1.8%)보다 0.4%p만 높은 수준에서 의료서비스 보장이 이뤄지는 점이 이채롭다. 한국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두 배 넘게 상승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은 0.9%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한국은 5.6%였다. OECD(2021g)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5.2%)는 한국(30.2%)보다 의료비 직접부담비율이 높은 여섯 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이 분석에서 그리스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은 5.3%로 한국보다도 낮았다.

〈표 4-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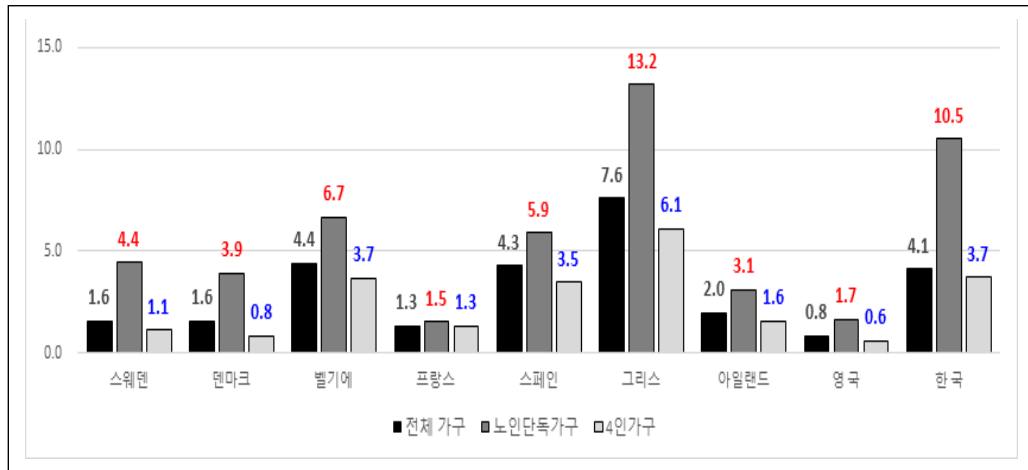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1.6	4.4	1.1
덴마크	1.6	3.9	0.8
벨기에	4.4	6.7	3.7
프랑스	1.3	1.5	1.3
스페인	4.3	5.9	3.5
그리스	7.6	13.2	6.1
아일랜드	2.0	3.1	1.6
영국	0.8	1.7	0.6
한국	4.1	10.5	3.7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4-2-2]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을 살펴보았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7.6%), 스페인(4.3%), 벨기에(4.4%)의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이 한국(4.1%)보다 높았다.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는 소득

대비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1% 미만으로 끌어내렸고, 북유럽의 두 나라와 프랑스, 아일랜드는 의료비 지출 수준을 2% 미만으로 관리했다.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은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보다 대부분 국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지출 수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이 된 국가 가운데 두 나라는 예외였는데, 스페인과 그리스이다. 두 나라에서는 가구 평균 소득액보다 소비지출액이 더 많았다. 스페인은 소득 대비 지출액 비율이 평균 122.1%였고, 그리스는 122.7%였다. 다른 7개국에서는 소득 대비 지출액 수준이 100% 이하였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분모(소득)가 줄어들면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

노인단독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노인들은 소득 가운데 10.5%를 의료비로 썼는데, 이는 그리스(13.2%)보다는 낮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았다. 프랑스가 1.5%로, 영국(1.7%)보다도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은 0.6%로 떨어졌다. 한국은 그리스(6.1%)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았다(3.7%). 벨기에(3.7%)와 스페인(3.5%)이 한국의 뒤를 이었다.

그림이나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아도, 국가별 경향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스가 6.8%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0.9%로 낮은 의료비 부담 수준을 유지했다.

2. 소득분위별 의료비 지출

〈표 4-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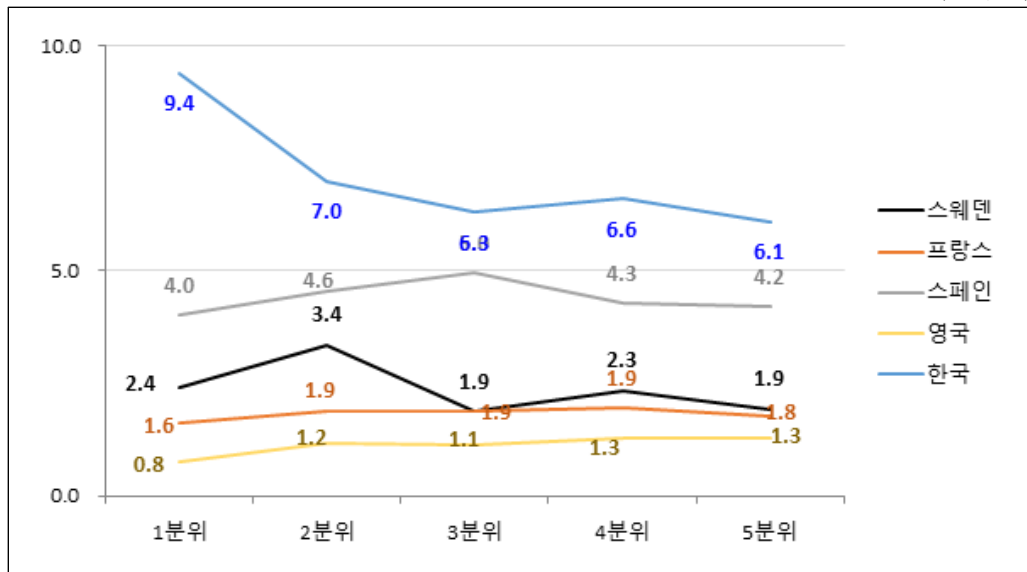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4	3.4	1.9	2.3	1.9	2.3
덴마크	3.3	2.9	2.5	2.6	2.1	2.6
벨기에	5.7	5.9	5.5	5.4	4.6	5.3
프랑스	1.6	1.9	1.9	1.9	1.8	1.8
스페인	4.0	4.6	5.0	4.3	4.2	4.4
그리스	7.2	7.9	8.6	6.5	7.1	7.4
아일랜드	2.2	2.4	2.6	3.0	3.2	2.8
영국	0.8	1.2	1.1	1.3	1.3	1.2
한국	9.4	7.0	6.3	6.6	6.1	6.8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4-2-3]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분위별로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경향을 살펴보았다. 분위별로 보면, 한국은 세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비교 대상인 대부분 국가의 대부분의 분위에서 나타나는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은 한국의 수치를 밑돌았다. 그리스만 예외였는데, 2분위(7.9%)와 3분위(8.6%), 5분위(7.1%)에서 한국보다 높았다.

둘째,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격차가 한국에서는 크게 나타난다. [그림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의료비 부담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우하향 경향은 다른 유럽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거나(덴마크), 완만한 수평선을 그리거나(프랑스), 심지어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의료비 부담 수준이 올라갔다(영국,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에는 1분위에서 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이 0.8%였으나, 5분위에서는 오히려 1.2%로 우상향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영국의 1분위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안과, 치과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무상의료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도 참고삼아 밝혀둔다.

셋째,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이 다른 국가에 견줘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1분위가 부담하는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수준(9.4%)은 다른 국가에 비춰도 부담이 매우 높다. 특히, 2~5분위와 비교했을 때, 1분위의 의료비 부담이 큰 점이 도드라진다. 한국에서 소득 저분위의 상당수가 노인이라는 점, 그래서 이들의 의료 수요가 높은 점도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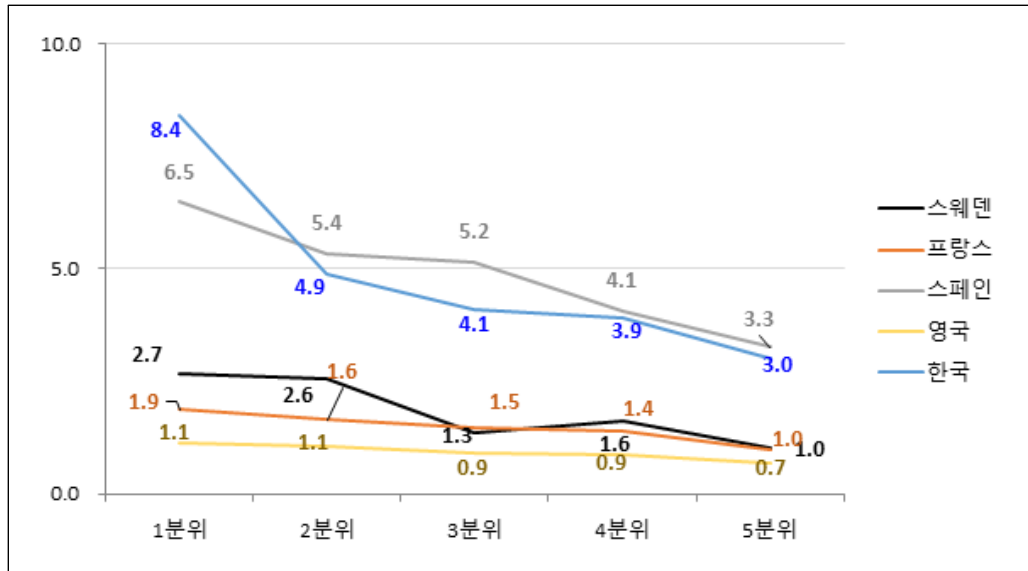
(단위: %)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2.7	2.6	1.3	1.6	1.0	1.6
덴마크	3.3	2.2	1.6	1.5	1.0	1.6
벨기에	6.2	5.6	4.9	4.4	3.1	4.4
프랑스	1.9	1.6	1.5	1.4	1.0	1.3
스페인	6.5	5.4	5.2	4.1	3.3	4.3
그리스	15.3	9.6	9.4	6.4	5.7	7.6
아일랜드	2.5	1.9	1.9	2.1	1.8	2.0
영국	1.1	1.1	0.9	0.9	0.7	0.8
한국	8.4	4.9	4.1	3.9	3.0	4.1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4-2-4]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계의 소비지출액보다 소득이 평균적으로 낮

은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른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계의 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높아서 의료비 부담 비율이 남유럽 국가들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한국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보다 의료비 부담 비율이 전 분위에서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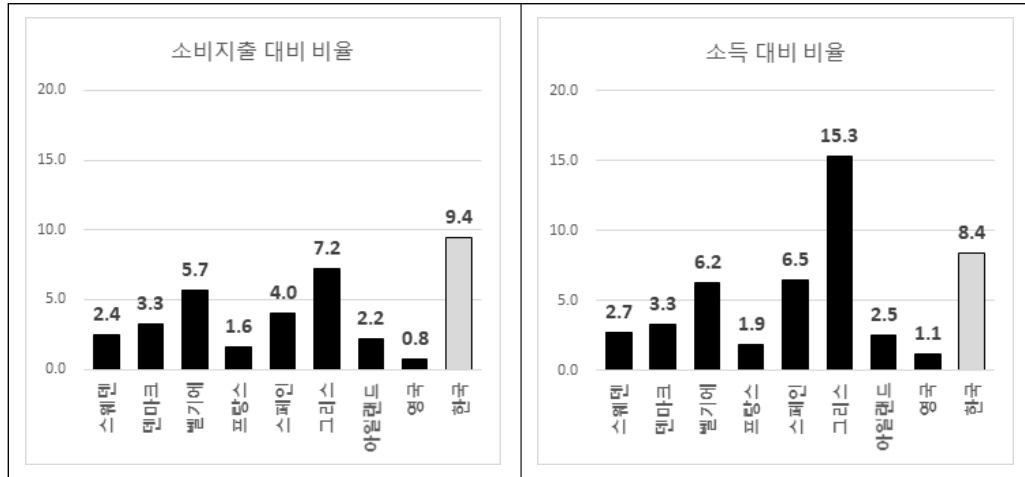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과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의료비 부담 비율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즉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아일랜드와 스웨덴만 예외였는데, 아일랜드에서는 1분위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이 2.5%로 높았지만, 2~5분위에서는 1.8~2.1%로 다소 들쭉날쭉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의료비 부담 수준을 얼마나 완만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즉, 여기서 쟁점은 기울기이다. 무상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영국에서 그 기울기가 가장 완만했다. 1분위의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은 1.0%인데, 분위가 올라갈수록 1.1%(2분위), 0.9%(3분위와 4분위), 0.7%(5분위)로 매우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기울기는 가팔랐다. 한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나라가 스페인이었다. 소득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 비율이 한국(4.1%)과 스페인(4.3%)로 유사하다. 그러나 [그림 4-2-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페인의 기울기는 한국보다 완만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1분위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1분위가 소득의 8.4%를 의료비에 쓰는 반면, 스페인의 1분위는 6.5%를 지출한다. 한국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4-2-5] 국가별 1분위 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비교 대상인 국가들의 소득 1분위에 한정해서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1분위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보면,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가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3% 전후 수준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관리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인 영국과 아일랜드도 조세에 기반한 의료서비스가 의료보장의 중심을 이루면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보다도 낮게 유지됐다. 보수주의 유형인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자 다른 양상을 보였다. 프랑스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게 관리하지만 벨기에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와 한국의 중간 수준이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소비지출 혹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이 차이가 컸다.

〈표 4-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4.2	10.1	2.1	2.3	2.5	5.2
덴마크	4.9	4.0	3.6	10.9	4.5	4.9
벨기에	6.8	6.4	9.8	5.8	4.0	6.9
프랑스	2.2	2.0	2.5	2.3	1.9	2.2
스페인	7.9	7.7	7.6	7.2	4.9	7.0
그리스	14.7	13.7	15.9	12.4	11.5	13.9
아일랜드	3.1	2.7	3.0	5.5	10.0	4.1
영국	2.2	2.2	1.4	0.9	4.7	2.1
한국	15.3	16.4	11.0	12.2	13.0	14.9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4.5	10.0	1.2	1.6	1.0	3.9
덴마크	4.6	3.5	2.8	9.0	1.6	6.7
벨기에	7.8	6.5	9.3	5.0	2.2	1.5
프랑스	2.2	1.6	1.8	1.5	1.0	5.9
스페인	10.0	7.0	6.3	6.7	3.1	5.9
그리스	20.8	14.3	14.9	10.4	8.0	13.2
아일랜드	2.8	2.2	2.0	3.8	5.2	3.1
영국	2.3	1.8	1.0	0.5	2.2	1.7
한국	12.4	10.5	6.2	7.3	5.6	10.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소득분위별로 노인단독가구의 의료비 지출 부담 비율을 살펴 보았다. 한국에서 1분위에 속하는 노인단독가구는 소비지출 대비 15.3%의 의료비 부담을, 소득 대비 12.4%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은 그리스(20.8%) 다음으로 높았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소득분위 가운데 5분위에서 의료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는 점이 이채로웠다. 노인 고소득층에서 국가 의료서비스가 아닌, 고액의 민간 의료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4인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1.4	1.8	1.7	1.9	1.2	1.6
덴마크	1.2	2.5	1.7	1.6	1.4	1.6
벨기에	4.0	5.2	4.3	5.1	4.4	4.6
프랑스	1.5	1.7	1.9	1.9	1.9	1.8
스페인	3.0	4.1	3.4	3.0	3.2	3.3
그리스	6.6	4.5	5.9	5.0	4.9	5.3
아일랜드	1.8	1.8	2.7	2.9	2.5	2.4
영국	0.6	0.5	1.0	0.7	1.3	0.9
한국	5.5	6.1	5.2	6.4	5.1	5.6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1.2	1.2	1.2	1.3	0.7	1.1
덴마크	1.2	1.4	1.0	0.8	0.6	0.8
벨기에	4.2	4.8	3.8	3.9	2.9	3.7
프랑스	1.8	1.5	1.5	1.3	1.0	1.3
스페인	4.9	5.3	3.8	3.0	2.7	3.5
그리스	16.3	6.0	7.3	5.3	4.5	6.1
아일랜드	1.9	1.5	2.0	1.9	1.2	1.6
영국	1.0	0.4	0.8	0.5	0.6	0.6
한국	5.1	4.4	3.7	4.2	2.6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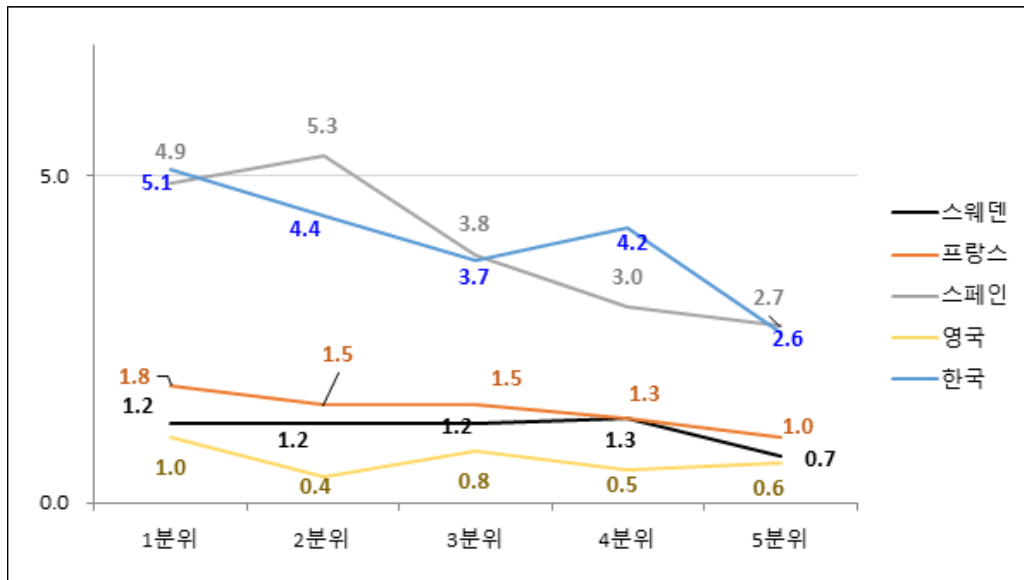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분위별 의료비 지출 부담 비율을 살펴 보았다. 1분위의 경우, 한국은 그리스(16.3%)에 이어서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이 두 번째로(5.1%)로 높았다. 분위별 의료비 부담 비율을 보

면, 스웨덴과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5개국은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분위별 의료비 부담 수준도 차이가 나지 않게 유지했다. 한국과 벨기에, 스페인에서는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1분위는 5% 전후 수준, 5분위는 2.5~3.0% 수준이었다. 물론, 이 분석에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분위별 소득 수준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4-2-6]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제3절 나가며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HBS 자료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국가별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소득을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은 남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유럽의 복지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와 1분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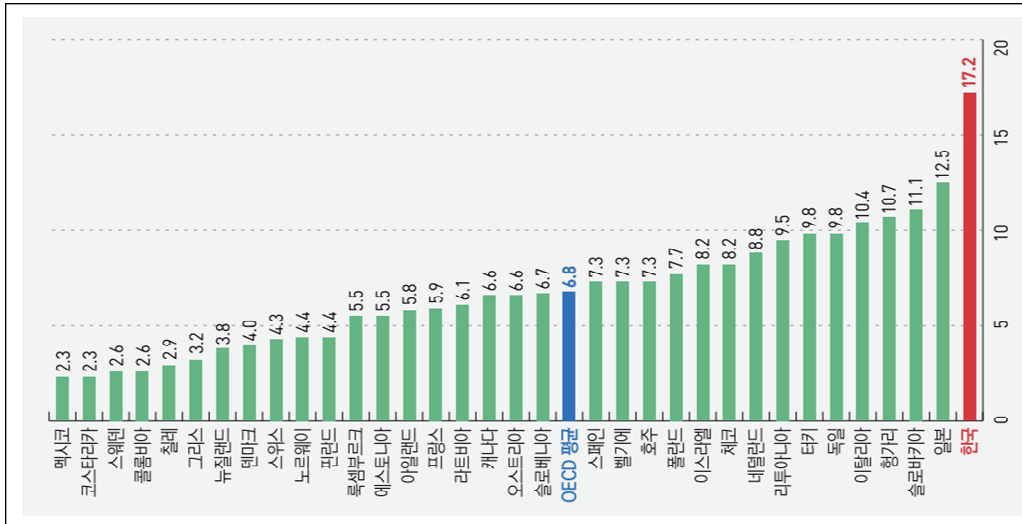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원인은 [그림 4-1-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은 결과,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계의 직접부담 비중이 30.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둘째 원인은 한국인들의 의료 이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년 17.2회로 OECD 평균(6.8회)의 두 배가 넘는다(OECD, 2021g). 이는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한다.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1차 의료기관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한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한국인의 건강 지표는 매우 복잡적이다.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기준 83.3세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OECD, 2021g). 그러나 스스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OECD, 2021g). 아프다고 인식하는 만큼 병원을 찾을 가능성도 크다.

[그림 4-3-1]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 (2019년 기준)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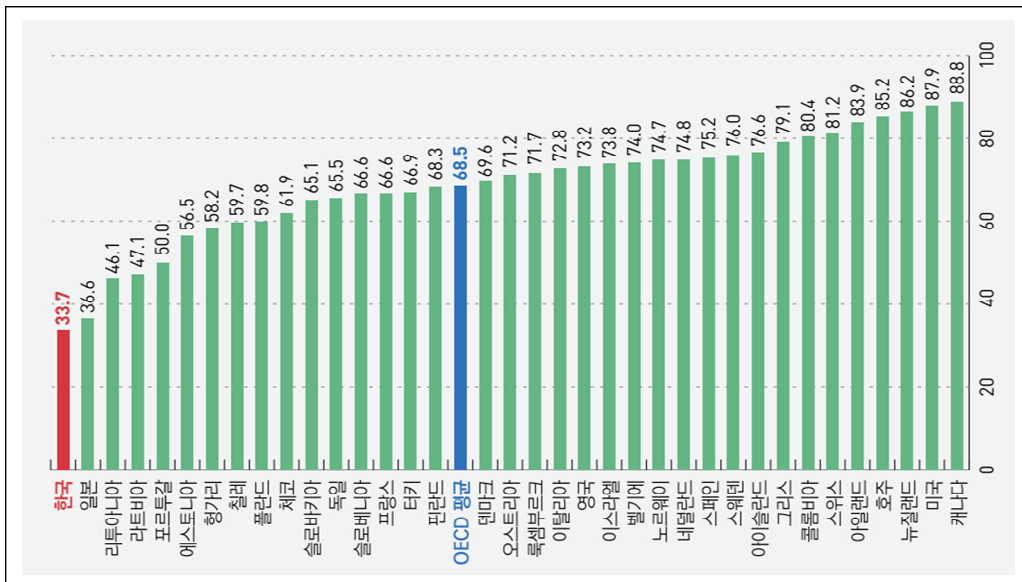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2019년 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는 2017년, 프랑스, 일본은 2018년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102, 그림 18; OECD(2021g)

[그림 4-3-2]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9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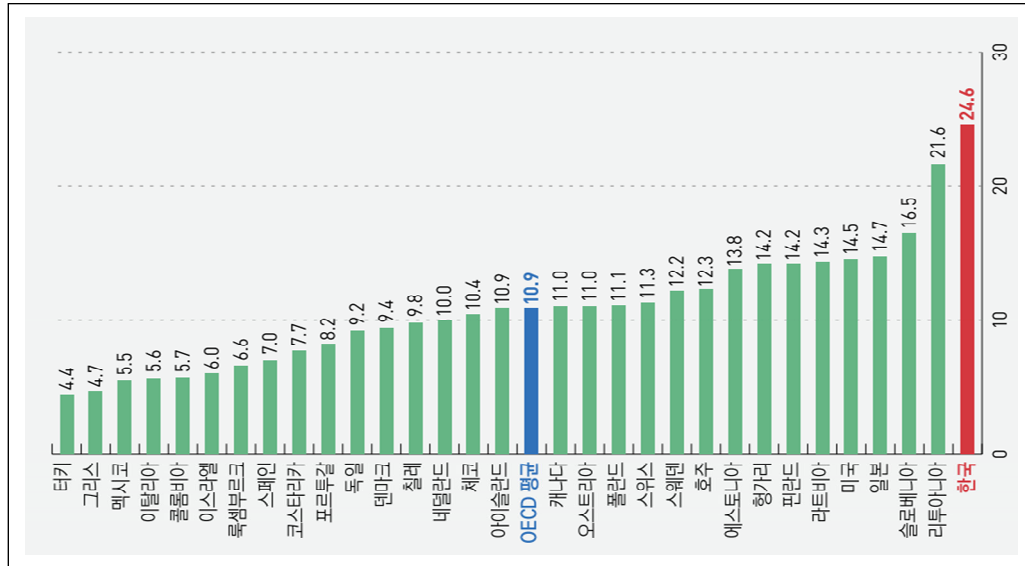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2019년 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
 호주, 칠레는 2017년, 아이슬란드, 영국, 미국은 2018년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52, 그림 5-1; OECD(2021g)

[그림 4-3-3]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9년 기준)

(단위: 명/인구 100,000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p.45, 그림 3-1; OECD(2021g)

셋째 원인과 관련해서, 한국인의 불안한 건강 수준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건강지표는 자살률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OECD, 2021g). 자살은 보통 남성이 더 많이 하는데, 여성의 경우, 10만 명당 14.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일본(8.6명), 스웨덴(7.4명), 슬로베니아(7.1명), 네덜란드(7.0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남성의 경우, 리투아니아(39.9명)에 이은 두 번째(36.5명)인데 두 나라를 빼고 30명을 넘는 나라는 없었다. 두 나라에 근접한 국가로는 라트비아(28.1명), 슬로베니아(27.3명)가 있고, OECD 평균은 17.8명이었다. 자살은 병은 아니지만, 복잡한 병인(病因)이 뒤섞인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된 사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건강지표의 하나로 간주됐다(Knox, Conwell, Caine, 2004). 한국의 자살 통계는 한국인의 위험한 정신건강 수준은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한국 가계의 높은 의료비 지출 수준을 둘러싼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

면, 이와 관련한 정책 과제도 함께 유추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의 건강 수준을 낮추는 사회적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의료비 지출 수준,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비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초래하는 의료의 전달체계 개편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은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제5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육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육비 지출 부담

제3절 나가며

제 5 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육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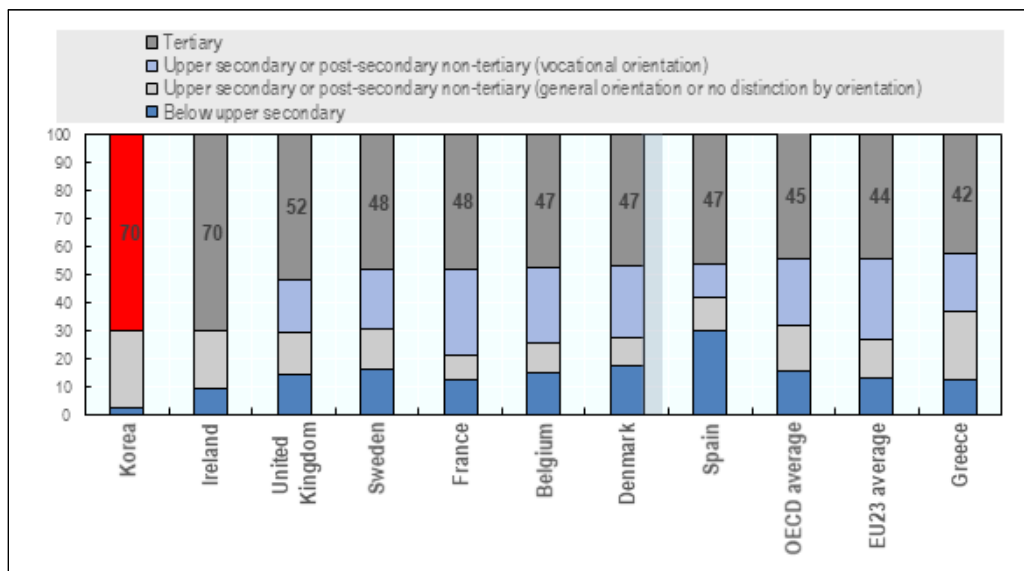
1. 교육과 교육비 부담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이를 둘러싼 ‘비용’만큼 큰 쟁점이 되는 소재도 드물 것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교육의 힘이 지대했던 만큼 교육의 긍정적 의미도 크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와 관련한 불평등, 불공정성 논란과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 투자의 과잉과 학교 서열화로 인해 학력주의와 성과주의가 과열됨으로써 올바른 시민을 키워내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펼치는 장으로서의 학교와 교육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이 같은 과도한 교육열과 학교 서열화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한국의 ‘학력 과잉’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 25세에서 34세까지의 학력 수준은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25세에서 34세까지의 인구 중 70%가 대학 이상 고등 수준(tertiary)의 학력을 가졌으며, 28%가 중등 수준(secondary)의 학력을 가졌다(OECD, 2020). 물론 많은 성인이 대학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큰 장점일 수 있다. 고학력이 높은 인적 수준이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한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고도로 성숙한 민주적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높은 교육 수준을 ‘학력 과잉’으로 해석할 여지

를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림 5-1-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연구의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아일랜드(70%)¹⁰⁾와 영국(52%)을 제외하고는 40%대의 고등교육 취득률을 나타내며, OECD 평균과 유럽연합(EU) 23개국 평균도 각각 45%, 4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림 5-1-1] 비교 국가의 25-34세의 교육 성취 (2019년)



자료: OECD. (2020, Figure A1.1.), <https://doi.org/10.1787/888934161843> (2021. 9. 18.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그림.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대학 입학과 이후의 소득 획득을 위해 경쟁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사교육의 성격도 대학 입학시험과는 큰 관련이 없다(이신용, 2018)는 점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교육 모범국으로 불리는 핀란드 역시 사회복지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사회경제

10) 아일랜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지만 미국, 영국, 한국 등과 달리 대학의 서열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은 모두 평균적이고 균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C%EB%9E%9C%EB%93%9C#%EA%B5%90%EC%9C%A1>, 2021. 10. 11. 인출).

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사교육의 수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영 외, 2017). 반면, 미국, 일본, 한국 등 성과주의 사회에서 학력은 높은 사회적 보상, 경제적 안정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대소득이 높은 한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교육에 대한 과열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OECD 34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과 사교육 시간 간의 관계를 비교한 김경년과 김안나(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교육 시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국가에서는 개인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개인이 분담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의 삶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한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년 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5장에서는 교육-노동시장-복지의 레짐별 차이가 어떻게 교육 경쟁과 교육비 부담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를 가구 교육비 부담의 국간 간 비교를 통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 8개국-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과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을 좀 더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했다.

2. 교육비 지출

OECD 통계(stats.OECD)에서 국가 단위의 민간교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외의 민간-가구, 법인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총칭하는 용어다. 즉, 공식 교육-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에 투입되는 민간 부담분을 의미한다(OECD, 2020: 266).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교육비’는 가구가 공교육 이외의 교육에 투여하는 각종 비용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가정학습지, 개인과외,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

에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한 국가의 전체 교육비 지출은 공식 교육을 위한 공공 부담분과 민간 부담분, 그리고 순수 사교육비의 총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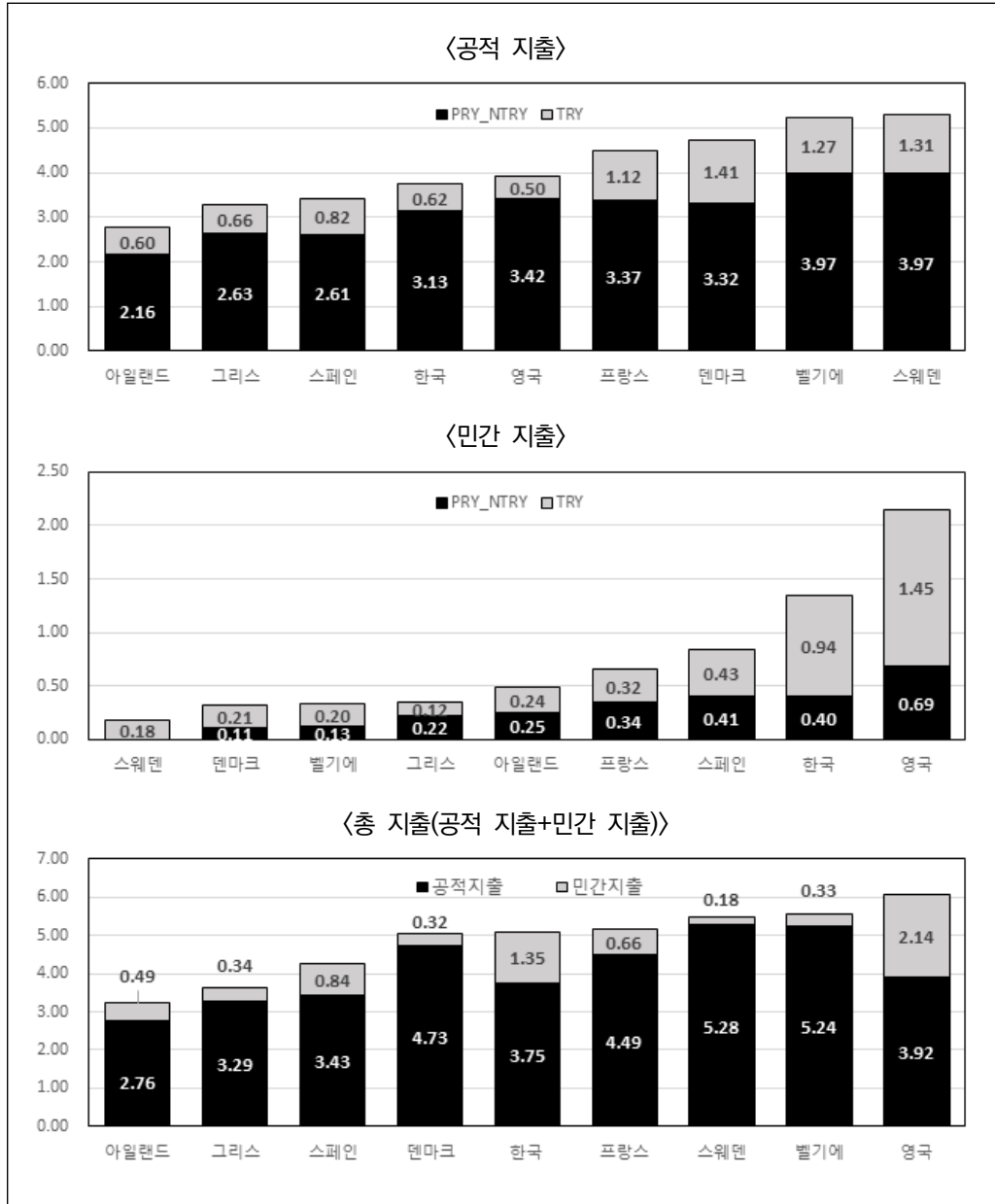
한편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가구 미시자료상의 교육비는 가구 소비지출(consumption expenditure)을 국제 표준분류방식(COICOP, 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따라 구분한 12개 비목 중 하나로,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드는 비용과 학원 및 보습교육 등 사교육비를 합한 금액을 포함한다. 즉,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위에서 언급한 민간교육비 중에서 가계 부담분과 순수 사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가. 공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OECD 통계에서 교육비 지출(spending on education)은 공교육기관과 교육비 보조금에 투여되는 공적 지출과 민간 지출을 합한 금액이다. [그림 5-1-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GDP 대비 공적 교육비 지출의 비중은 대체로 노르딕 복지국가와 유럽대륙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고, 영미, 남유럽 복지국가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노르딕과 유럽대륙 복지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의 1%를 초과하는 데 비해, 나머지 국가에서는 0.5~0.8%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자의 나라들에서 고등교육 또한 공공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록금 대부분이 면제되는 무상에 가까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데 비해, 후자의 나라들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자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5-1-2] 비교 국가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단위: GDP 대비 %)



주: 교육비 지출은 공식 교육, 즉 초중등(primary, primary to post-secondary non-tertiary levels)과 고등(tertiary levels)교육에 드는 비용이다.

자료: OECD (2021i),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indicator). doi: 10.1787/f99b45d0-en;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indicator). doi: 10.1787/6e70bede-en (Accessed on 05 October 2021)(2021. 10. 5. 인출)를 활용하여 자체 계산 및 그림.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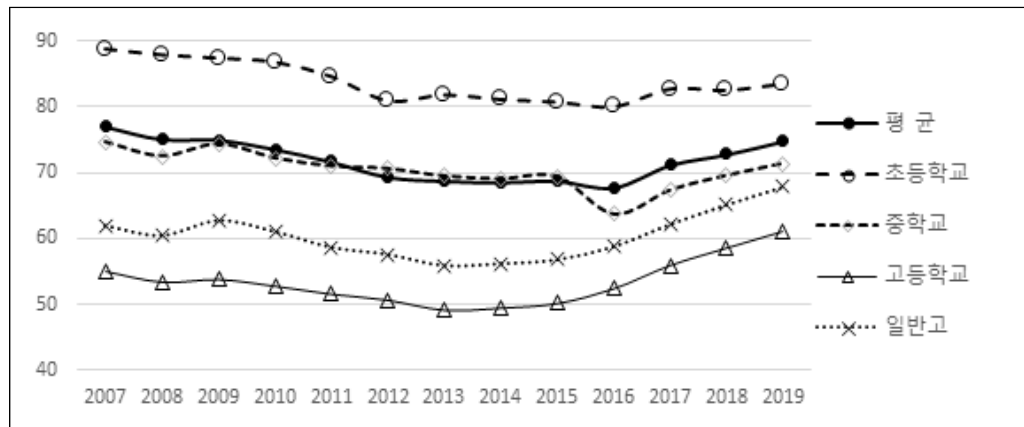
민간 교육비 지출이 공적 교육비 지출과 거의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통해서 이를 추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 대한 GDP 대비 민간 지출 역시 국가 간에 큰 격차를 보인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분은 각각 GDP의 0.18%와 0.21%에 불과한데, 영국은 1.45%에 이른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GDP의 0.94%를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스웨덴과 덴마크는 공교육에 드는 비용의 각각 96.7%와 94.1%를 국가가 부담하는 데 비해, 영국과 한국은 각각 64.7%와 73.6%만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즉, 비교 대상국 대부분이 초중등 교육까지는 대체로 공공재이자 집합재로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등교육에서는 국가 간에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교육 참여율과 교육비 지출

한국은 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유독 교육 투자와 가계의 교육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사교육 현황조사 보고서 및 TIMSS 1995년, 2003년 조사의 8학년, 12학년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종재, 이희숙(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등교육 단계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한국 77%, 일본 75.7%, 대만 81.2%, 베트남 76.7%, 캐나다 20%, 미국 11%, 독일 21%, 그리스 8%로, 아시아 국가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 2~5세 영유아의 사교육 참여 현황을 조사한 김은영 외(2017)의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주당 평균 이용 프로그램 수와 평균 이용 횟수에서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PISA 자료와 각국의 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의

사교육 정책이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한구, 정지선, 김승보(2009)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12.8%로 대만의 6.7%, 일본의 4.3%를 크게 상회했다. 그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만과 일본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감소 추세인데 반해, 한국은 이 기간에 오히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사교육 참여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13), 2021. 10. 5. 인출)을 활용하여 그림 작성.

실제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그림 5-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대 중반까지 74.8%로 4명의 학생 중 약 3명은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 중학생 71.4%, 고등학생 61.0%(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67.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사교육 참여율이 차츰 감소하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하여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사교육비 총액 역시 유사한 궤적을 보였다. 2011년에 20조 원을 상회하던 사교육비는

2015년 17.8조 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21조 원에 이르렀다.¹¹⁾ 초저출산율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한다면 아동당 사교육비 지출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사교육 수요와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국가별 교육제도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일우, 박명희, 2013; 이종재, 이희숙, 2008). OECD 26개국의 2002년 가구 사교육비 지출액을 분석한 올프와 졸른호퍼(Wolf & Zohlhöfer, 2009)는 보수정당의 의석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국가주의적 성향¹²⁾이 약할수록, 재정 분권화를 지향하고 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사교육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한국은 이상치에 해당할 만큼 높은 교육비 지출액을 보였다. 저자들은 한국이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육 분야에 물질적, 비물질적 투자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80% 이상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어 사적인 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와 통계치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8개 유럽 국가들의 가구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1) 통계청(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003&conn_path=I3, 2021. 10. 5. 인출)

12) 공공분야의 GDP 대비 정부지출액으로 측정됨.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육비 지출 부담

1. 가구유형별 교육비 지출

〈표 5-2-1〉과 [그림 5-2-1]은 전체 가구, 16세 미만 아동 1명과 부부가구, 16세 미만 아동 2명과 부부가구¹³⁾의 세 가지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의 비율을 보여준다. 세 가구유형 모두에서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컸다. 노르딕 두 개 국가(스웨덴과 덴마크)와 유럽대륙 두 개 국가(벨기에와 프랑스)에서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5-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교육비 비율

(단위: %)

구분	소비지출 대비 비율		
	전체 가구	3인 가구 (부모+자녀1)	4인 가구 (부모+자녀2)
스웨덴	0.0	0.0	0.1
덴마크	0.7	0.7	0.6
벨기에	0.7	0.4	1.0
프랑스	0.8	0.8	1.5
스페인	2.0	2.6	3.7
그리스	4.0	5.5	8.5
아일랜드	3.1	2.1	2.4
영국	2.7	2.6	4.3
한국	11.1	9.0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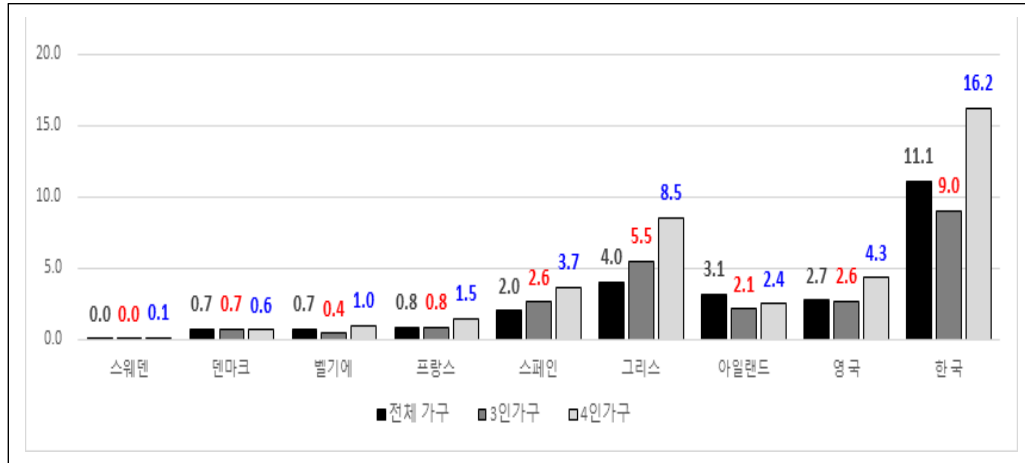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13) 다른 지출 비목과 달리 노인단독가구는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비 지출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구유형 대신 3인 가구를 분석하였다.

[그림 5-2-1]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남유럽 두 개 국가(스페인과 그리스)와 영어권 두 개 국가(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교육비 지출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대체로 5% 이내였다. 다만 그리스 4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는 8.5%로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에서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유형에 따라 9.0~16.2%로 유럽 국가들과 극히 대조를 보인다.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교육비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벨기에와 프랑스 역시 1% 내외였다.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과 유사하게 그리스의 4인 가구만 유일하게 유럽 국가 중에서 교육비 비중이 5%를 넘었다. 한국의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은 소비지출 대비 비중보다는 낮았지만, 전체 가구 6.7%, 3인 가구 5.3%, 4인 가구 10.5%로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표 5-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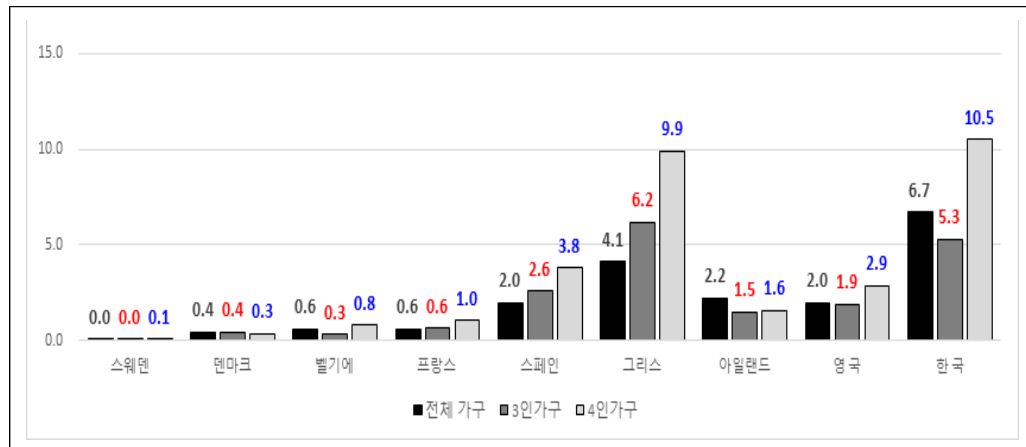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3인 가구 (부모+자녀1)	4인 가구 (부모+자녀2)
스웨덴	0.0	0.0	0.1
덴마크	0.4	0.4	0.3
벨기에	0.6	0.3	0.8
프랑스	0.6	0.6	1.0
스페인	2.0	2.6	3.8
그리스	4.1	6.2	9.9
아일랜드	2.2	1.5	1.6
영국	2.0	1.9	2.9
한국	6.7	5.3	10.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5-2-2]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이러한 결과는 1절에서 설명한 두 가지 요인 모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르딕과 유럽대륙 복지국가들은 공히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순수 사교육비 지출 역시 극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가구에서 교육비가 가구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페인과, 특히 영국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이 각각 GDP의 0.84%와 2.14%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그리스는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 수준이 GDP의 0.49%로 그리 높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결과이다.¹⁴⁾ 한국은 비교 대상 9개국 중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가구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부담률은 전체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각각 11.1%, 9.0%, 16.2%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6.7%, 5.3%, 10.5%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는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 비중이 GDP의 1.35%로 영국 다음으로 높다는 점과, 특히 공교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참여율과 비용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비 지출은 교육과 사회 이동, 공정성

14) 그리스의 2013년 기준 균등화된 중위 가치분소득은 11,718 달러(미국 달러 ppp 기준)로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당 연도 우리나라의 균등화한 중위 가치분소득은 21,802달러였다(OECD, 2016. <http://dx.doi.org/10.1787/888933405112>에서 2021. 10. 11. 인출). 처분가능소득이 낮기 때문에 절대적 액수는 적더라도 가구 소득이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물론, 한 국가의 1인당 GDP를 합한 것이 국가의 GDP이고, GDP 대비 교육비 지출액이 적다는 것은 가구 단위의 평균 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다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사교육 시장에 관해서, 그리스인의 사교육 참여율이 90%를 넘는다는 자료도 제시되고 있다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이종재, 이희숙, 2008 재인용). 이 자료대로라면 그리스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이유가 일부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이슈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표 5-2-3>은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노르딕 2개국¹⁵⁾과 유럽대륙 2개국의 경우 교육비의 절대 비중 자체가 워낙 미미해서 분위별 차이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 해도 좋을 듯하다.

<표 5-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전체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0.1	0.0	0.0	0.1	0.1	0.0
덴마크	0.2	0.4	1.1	1.0	0.5	0.7
벨기에	0.7	0.8	0.6	0.7	0.8	0.7
프랑스	1.4	0.5	0.6	0.6	1.1	0.8
스페인	1.2	1.3	1.8	2.0	2.9	2.0
그리스	3.1	3.0	3.7	4.6	4.5	4.0
아일랜드	4.3	2.3	2.5	3.3	3.3	3.1
영국	1.7	1.1	2.9	3.1	3.6	2.7
한국	7.0	10.2	11.7	12.6	11.6	11.1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0.1	0.0	0.0	0.0	0.0	0.0
덴마크	0.2	0.3	0.7	0.6	0.2	0.4
벨기에	0.7	0.8	0.5	0.6	0.5	0.6
프랑스	1.6	0.4	0.5	0.4	0.6	0.6
스페인	1.9	1.5	1.8	1.9	2.2	2.0
그리스	6.6	3.6	4.0	4.6	3.7	4.1
아일랜드	5.0	1.9	1.9	2.3	1.8	2.2
영국	2.6	1.0	2.3	2.1	1.9	2.0
한국	6.2	7.2	7.6	7.6	5.7	6.7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15) 스웨덴의 경우 3인 가구 중 2분위 가구에 균등화된 교육비가 31126.11인 극단값이 포함됨으로써 전체 비율을 왜곡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참고로 3인 가구 전체의 교육비 지출 평균액은 11.30(극단값 제외 평균값)이다.

이에 비해, 남유럽 2개국과 영어권 2개국의 경우 하위 1분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1분위에서 4분위까지 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비 비중 또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분위로 갈수록 교육비 비중 또한 높아진다는 것은 절대액에서 더 큰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 분위의 가구에 학생이 있는 가구가 더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액면 그대로 상위 분위에서 하위 분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¹⁶⁾ 학생이 있는 가구의 분위별 분포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인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생이 있는 가구로 가구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2-4〉와 [그림 5-2-3]은 자녀가 한 명인 3인 가구의 소비지출과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와 마찬가지로 노르딕 2개국과 유럽대륙 2개국 모두 1% 내외의 극히 낮은 교육비 비중을 보여준다. 반면, 남유럽 2개국과 영어권 2개국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면서 대체로 높은 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교육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 6.2%에서 5분위 11.8%까지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소득이 상승할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통제함으로써 전체 가구 분석에서 가구유형별 분포의 차이로 인한 분위별 교육비 지출 차이의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한국에서 분위가 상승할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

16) 물론 자녀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례 수 등의 한계를 고려하면 자녀의 연령까지 통제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역시 상승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투자의 실질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분위별 연령 분포의 차이가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표 5-2-4〉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 (3인 가구: 부모+한 자녀)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0.2	0.0	0.0	0.0	0.1	0.0
덴마크	0.2	0.1	2.1	0.5	0.3	0.7
벨기에	0.1	0.4	0.7	0.4	0.2	0.5
프랑스	1.4	0.4	0.6	0.7	1.1	0.5
스페인	1.6	1.6	1.8	2.8	3.6	1.8
그리스	3.2	3.1	4.6	6.2	6.9	4.0
아일랜드	1.1	1.5	1.4	2.6	3.0	1.9
영국	0.8	0.8	3.2	2.4	4.1	2.3
한국	6.2	7.1	8.2	7.8	11.8	9.0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0.2	0.0	0.0	0.0	0.0	0.0
덴마크	0.2	0.0	1.3	0.3	0.1	0.4
벨기에	0.2	0.4	0.6	0.3	0.1	0.3
프랑스	1.8	0.4	0.5	0.5	0.6	0.6
스페인	2.9	2.0	1.9	2.6	2.9	2.6
그리스	6.9	4.6	6.3	6.5	6.3	6.2
아일랜드	1.3	1.3	1.1	1.8	1.6	1.5
영국	1.1	0.7	2.4	1.6	2.3	1.9
한국	5.7	5.2	5.2	4.8	5.7	5.3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표 5-2-5〉와 [그림 5-2-4]는 부모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를 대상으로 5분위별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을 계산한 결과이다. 자녀가 2명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분위에서 1% 미만으로 거의 교육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앞의 두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다만 프랑스에서 하위 1분위의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와 3.0%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윗 분위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경우 3인 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교육비 지출 부담이 소비지출의 5.2~8.9%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영국의 경우 중산층보다는 하위 계층(1분위)과 상위 계층(5분위)에서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비교 대상국 중에서 GDP 대비 민간 부담 교육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로, 2.14%에 이른다. 물론 큰 비중(1.45%)은 대학 교육비 부담이지만 초중등 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분도 GDP의 0.69%에 이른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영국은 주로 부유한 자녀가 다니는 유료 사립학교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률도 다른 분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¹⁷⁾

한국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분위에서 10%를 초과하며 평균 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비교 대상국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이 높은 그리스(7.3%)에 비해서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17) 영국 아동 중 약 7%가 유료 사립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산된다.(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England, 2021. 10. 11. 인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가구 부담분이 높은 수준인데다 사교육이 과도하게 팽창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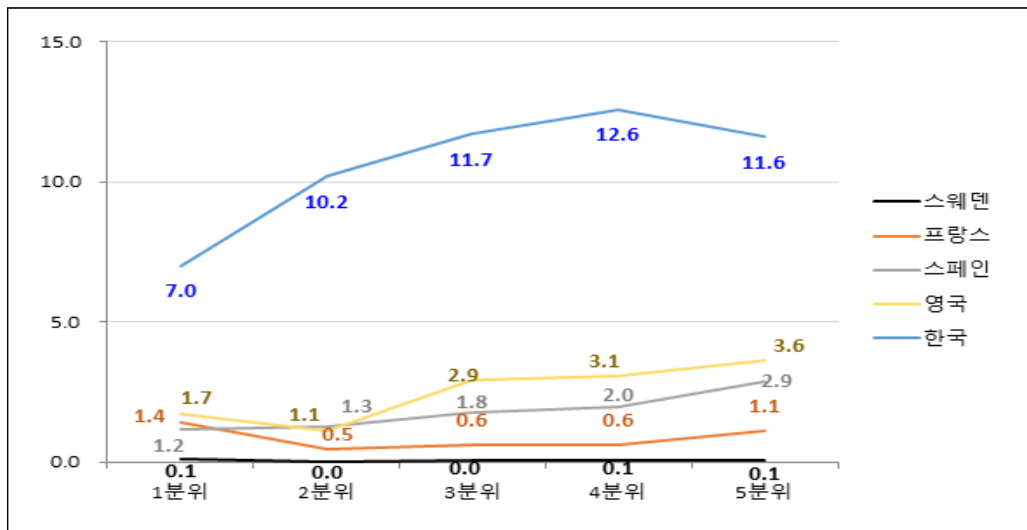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0.0	0.0	0.0	0.2	0.0	0.0
덴마크	0.6	0.4	0.5	0.8	0.6	0.6
벨기에	1.2	1.8	0.7	0.9	0.7	1.0
프랑스	2.4	0.6	1.1	1.1	2.1	1.5
스페인	1.8	2.1	3.1	4.0	5.4	3.7
그리스	5.9	6.6	9.8	8.2	10.2	8.5
아일랜드	1.3	1.6	3.1	1.9	3.3	2.4
영국	4.0	0.9	1.9	3.7	7.9	4.3
한국	13.5	13.9	16.9	17.1	16.8	16.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5-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12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표 5-2-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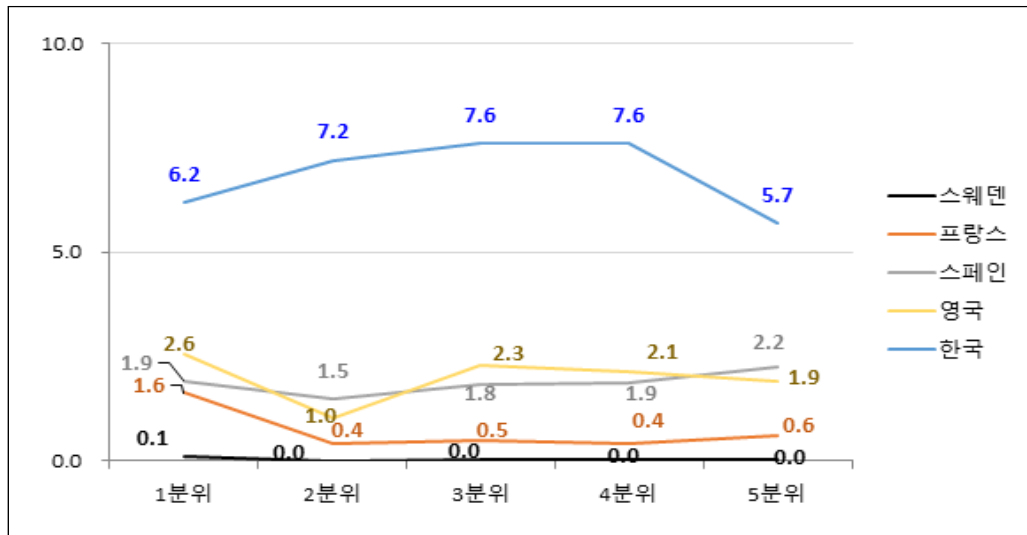
(단위: %)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0.0	0.0	0.0	0.2	0.0	0.1
덴마크	0.6	0.3	0.3	0.4	0.3	0.3
벨기에	1.3	1.6	0.6	0.7	0.5	0.8
프랑스	3.0	0.6	0.9	0.8	1.1	1.0
스페인	2.8	2.7	3.4	3.9	4.5	3.8
그리스	14.7	8.8	12.0	8.8	9.4	9.9
아일랜드	1.4	1.3	2.3	1.3	1.6	1.6
영국	6.2	0.8	1.4	2.5	3.9	2.9
한국	12.6	10.1	12.2	11.1	8.6	10.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5-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 (4인 가구: 부모+두 자녀)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마지막으로, 〈표 5-2-6〉은 총소비지출에서 10%,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교육비 과지출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소득분위별로

산출한 결과이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스웨덴은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다.

〈표 5-2-7〉 소득분위별 교육비 과지출 가구의 비율(전체 가구)

(단위: %)

구분	국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	스웨덴	0.12	0.00	0.00	0.00	0.17	0.06
	덴마크	0.43	0.93	2.64	2.79	1.02	1.56
	벨기에	2.06	1.73	0.76	1.13	1.86	1.51
	프랑스	2.89	0.89	0.95	1.17	2.99	1.78
	스페인	2.16	2.69	4.01	4.82	8.08	4.36
	그리스	7.96	8.89	11.60	17.51	14.87	12.17
	아일랜드	7.19	5.59	7.64	10.11	9.46	8.00
	영국	2.58	2.07	3.85	3.99	9.93	4.49
한국	21.58	39.40	44.65	47.37	43.11	39.23	
구분	국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소비지출 대비 20% 이상	스웨덴	0.00	0.00	0.00	0.00	0.00	0.00
	덴마크	0.00	0.00	0.00	0.00	0.00	0.00
	벨기에	0.52	0.23	0.34	0.15	0.41	0.33
	프랑스	1.42	0.26	0.16	0.23	0.67	0.55
	스페인	0.38	0.51	1.02	0.84	1.71	0.89
	그리스	1.88	3.12	3.37	7.04	4.35	3.95
	아일랜드	3.52	1.82	1.07	1.97	2.45	2.17
	영국	1.68	1.05	2.27	2.44	5.63	2.62
한국	10.59	18.26	21.82	23.71	23.17	19.51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덴마크의 경우 1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3분위와 4분위에서 2%를 초과하지만, 20% 이상을 교육비는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0%로 나타났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하위

1분위와 5분위에서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1~2%대를 기록하였을 뿐,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분위에서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지출 비중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총소비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의 비율이 12.17%, 20% 이상인 가구의 비율도 3.95%에 이르러 비교 대상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와 영국도 1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8.00%와 4.49%, 20%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2.17%와 2.62%로 노르딕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영국에서 5분위의 교육비 과지출 가구 비율은 10%와 20% 기준으로 각각 9.93%와 5.63%로 다른 분위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영국은 귀족이나 고소득층 자녀가 주로 다니는 이튼 스쿨 같은 등록금이 비싼 기숙형 사립학교가 있고, 대학 등록금도 비싸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고소득층일수록 오히려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교육비 과부담 가구 비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소비지출의 1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의 비율은 39.23%에 이르고, 3, 4, 5분위에서는 40%가 넘었다.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그 비율이 높은 그리스(10.25%)에 비해서도 거의 네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20% 이상을 교육비로 쓰는 가구도 19.51%에 이르렀으며, 3, 4, 5분위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초과했다.

제3절 나가며

5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가구 교육비 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은 11.1%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그리스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4.0%로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노르딕 복지국가 2개국(스웨덴과 덴마크)과 유럽대륙 2개국(벨기에와 프랑스)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에도 채 미치지 않았다. 둘째, 3, 4인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분위가 높아 질수록 약간 상승하는 추세였다.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교육에 누적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와 20%를 넘는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한국에서 각각 39.23%와 19.51%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 그리스의 경우 각각 10.25%와 2.54%였다.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에서 교육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은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3, 4, 5분위의 과부담 가구 비율이 1, 2분위에 비해 더 높았다. 그야말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피라미드식’ 혹은 ‘스카이캐슬식’의 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이루어낸 수단이었으며, 개인 차원에서는 계층 상승의 중요한-거의 유일한-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사용되는 ‘우골탑’이나 ‘개룡남’ 같은 용어가 이를 대변해준다.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적 시민의식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교육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육은 그야말로 해결하기

난제들로 얽혀 있다. 가구 교육비 지출의 국가 간 비교 결과는 그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가구 교육비 지출이 너무 크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비 지출이 크다는 것은 다시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는 국가적 비효율의 문제이다. 외국에 비해 훨씬 큰 금전적,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국가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지출의 불균형 분배 문제이다. 복지국가는 생애주기 전체에서 소득 분배를 통해 소비를 평탄화(안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활동기의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는 노년기를 준비할 여력을 낮춤으로써-사회보험료를 통해서건 사적 저축을 통해서건-미래 빈곤 가능성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교육비 지출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낮은 행복도와 저출산 문제이다. 교육에 대한 ‘과몰입’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 부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투여,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의 다양한 부담 증가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2018년 기준으로 평균 6.6점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류정희 외, 2019). 또한, 오늘날 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자녀 양육비 부담은 초저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윌렘 아데마(Willem Adema)는 포괄적인 영유아 교육·돌봄 시스템이 존재하는데도 한국이 초저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원인으로 사교육비를 꼽았다.¹⁸⁾ 마지막으로 불평등과 사

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블로그, OECD, 아동·가족 정책의 걸림돌로 사교육을 지목하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현장 (하) | 작성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1693400670>, 2021. 11. 16. 인출)

회이동의 문제이다. 산업화 시기 동안 교육은 계층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은 계층 이동의 수단이기보다는 계층 고착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여유진, 2019). 이 장의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례해서 혹은 누적해서 더 많은 교육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좋은 라벨’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결국, 경제·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교육에 대한 과잉 투자를 완화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교육 개혁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여기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결론부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6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통·통신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제3절 나가며

제 6 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통·통신비 부담

제1절 들어가며

1. 가계지출에서 교통·통신비 부담의 의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1999년에 제도가 시행되어 2015년에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지출을 기반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된 이후부터는 소득을 기반으로 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해당 기준의 비목 중 하나인 교통·통신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가계지출에서 교통·통신비 부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최저생계비 항목에서 ‘최저 교통·통신비’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사회적 교류를 위한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 이용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태완 외, 2017, p.283). 최저생계비의 최초 계측연도인 1999년에 최저생계비 비목에서 교통·통신비가 차지한 비중은 6.2%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는 9~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로 설정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며, ‘최저’ 생활의 기준으로 각 항목의 품질을 중품 또는 중저품으로 설정하고 있다(김문길, 김태완 외, 2020, p.248). 이러한 점에서 가구 구성 혹은 가구 특성, 활용하는 구성품에 따라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계에서 소비하는 생계비의 10% 수준은 작지 않은 비중이라 할 수 있다.

〈표 6-1-1〉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비 (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단위: 원, %)

구분	1999	2004	2007	2010	2013	2017	2020	
							금액	구성비
식료품비	40.7	40.2	37.6	37.7	37.1	38.0	771,345	36.1
주거비	19.4	17.7	17.2	15.8	17.8	16.7	340,582	16.0
수도광열비	5.7	5.8	6.7	7.4	7.1	6.1	102,349	4.8
가구집기비	3.5	3.2	3.0	2.9	2.8	2.7	53,463	2.5
피복신발비	4.8	4.2	4.0	4.1	4.2	4.4	98,499	4.6
보건의료비	4.7	4.4	4.4	4.5	4.2	4.1	91,239	4.3
교육비	4.7	4.3	4.5	4.7	4.6	4.6	105,694	5.0
교양오락비	2.2	2.3	2.0	1.9	1.9	2.0	78,071	3.7
교통통신비	6.2	9.3	10.5	10.2	9.4	9.6	192,032	9.0
기타소비지출	5.8	6.2	6.1	5.9	5.6	5.4	139,273	6.5
비소비지출	2.2	2.4	4.2	4.8	5.2	6.3	161,945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34,492	100.0

자료: 김문길, 김태완 외(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p39, p564 재구성.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계측¹⁹⁾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과 급여기준이 설정되었는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되었고,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졌다. 이때 급여별 선정기준선을 생계급여 30%선, 의료급여 40%선, 주거급여 43% 선 등 도출하기 위해 급여별로 포함되어야 할 기본 혹은 부가적인 소비품목을 고려하였다. 생계급여 기준선의 경우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 욕구, 즉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에 필수불가결한 품목을 기본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의류 및 신발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비, 연료비를 비롯해, 교통비와 통신비가 해당한다(노대명 외, 2013, pp.80-81).

19)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기준선이 소득 기반의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2017년, 2020년에도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다.

〈표 6-1-2〉 기본품목에 해당하는 항목들 (가계동향조사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제작하기 위해 구입한 재료비와 제작, 유지, 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상·하수도 폐기물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
연료비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
교통	승객 및 화물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지출
통신	의사·지식·정보 등을 격지에서 주고받는 데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자료: 노대명 외(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p.81.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 혹은 경제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이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통신을 통한 정보의 교환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교통·통신비는 가구의 필수 생활영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지출영역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신비 비중이 가구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국 가계지출에서 교통·통신비용의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 국가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통신비용 부담 수준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 활용한 유럽의 HBS 및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가계지출 중 교통비에 포함되는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구입, 기타·운송기구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 관련 비용과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 교통 관련서비스 관련 비용 즉,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비용 등이다. 그리고 통신비에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

사의 교통 및 통신비의 세부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비의 경우 자동차 구입비와 운송기구 연료비가 60~70%를 차지한다. 통신비의 경우 2013년까지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이후 통신서비스의 비중이 80% 이하로 감소하면서 통신장비 비중이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3〉 교통비 및 통신비 항목별 비중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통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구입	22.5	22.6	20.3	27.8	24.2	25.1	24.6	25.0
기타운송기구구입	0.5	0.5	0.6	0.6	0.5	0.4	0.6	0.5
운송기구유지및수리	6.2	6.4	6.0	5.9	6.2	6.2	6.0	6.5
운송기구연료비	44.2	43.7	46.9	40.7	42.5	43.3	43.7	43.5
기타개인교통서비스	3.3	3.4	3.1	3.6	4.9	4.4	4.0	3.7
철도운송	2.3	2.5	2.5	2.3	2.2	2.0	1.8	1.7
육상운송	10.8	10.6	10.4	9.6	8.7	7.7	7.5	7.4
기타운송	8.8	9.0	9.1	8.5	9.6	9.7	10.6	10.7
기타교통관련서비스	1.3	1.4	1.2	1.0	1.0	1.3	1.2	1.2
통신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편서비스	0.2	0.2	0.2	0.1	0.2	0.2	0.2	0.2
통신장비	5.1	3.9	2.0	1.5	1.3	1.9	4.5	6.2
통신서비스	94.7	95.9	97.9	98.4	98.6	97.9	95.4	93.6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통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동차구입	29.5	32.0	30.7	44.5	40.1	31.2	36.9	
기타운송기구구입	0.7	0.6	0.5	0.4	0.3	0.5	0.7	
운송기구유지및수리	6.0	6.2	6.4	6.4	7.3	7.9	8.6	
운송기구연료비	40.1	36.2	35.5	28.0	30.8	32.7	30.9	
기타개인교통서비스	3.6	4.0	4.2	3.2	3.4	5.7	5.4	
철도운송	1.6	1.6	1.9	1.8	1.9	2.1	1.7	
육상운송	6.6	6.5	6.5	5.8	6.2	6.6	6.1	
기타운송	10.7	11.6	12.9	8.1	8.6	11.7	7.4	
기타교통관련서비스	1.3	1.4	1.4	1.8	1.5	1.5	2.3	
통신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우편서비스	0.2	0.2	0.2	0.3	0.2	0.2	0.2	
통신장비	15.5	15.0	13.1	23.2	26.3	23.0	22.7	
통신서비스	84.4	84.8	86.7	76.6	73.5	76.8	77.1	

주: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 1인 이상)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필자 분석

2. 한국의 교통·통신비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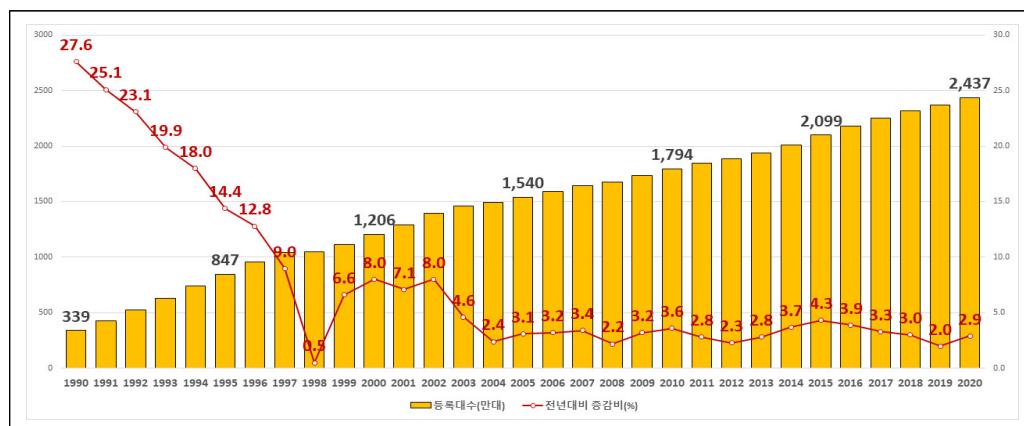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자료 분석에 앞서 선행연구 혹은 가용한 자료 등을 활용해 한국의 교통비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가별 비교를 통해 한국의 교통·통신비 수준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만, 수행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 활용하는 항목에 대해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한국의 교통비 부담 수준

교통비에서 자동차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는 22.5%, 2015년 이후에는 30% 이상이다(〈표 6-1-3〉 참조).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기준 339만 대에서 2015년 2천만 대를 넘어, 2020년 기준 2,437만 대에 이른다. 즉,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6-1-1]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전년 대비 증감비

(단위: 만 대, %)



자료: e-나라지표 - 자동차 등록 현황(국토교통부(시도별 자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에서 2021.11.11. 다운로드)

1998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 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 소유 증가세가 감소하였던 시기가 있으나 자동차의 절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비교적 고가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내구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소유하는 물품이 되었다. 2천만 가구임을 고려한다면 평균 1가구 1차량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국가별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주요 유럽 국가의 경우 1.4~1.8명으로 한국(2.7명)보다 자동차 이용률 혹은 보급률이 높았다.

〈표 6-1-4〉 주요 국가 자동차 1대당 인구수 (2011년 기준)

(단위: 백만 대, 백만 명,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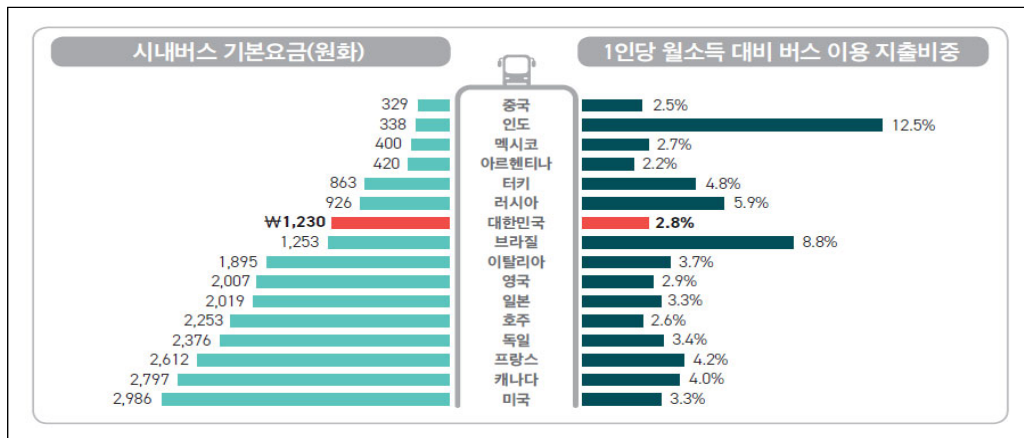
국가	자동차 등록대수	인구수	자동차 1대당 인구수
미국	239	315	1.3
중국	78	1,346	17.2
일본	75	127	1.7
독일	45	82	1.8
이탈리아	42	60	1.4
러시아	41	141	3.4
프랑스	38	62	1.7
영국	35	62	1.7
브라질	32	194	6.0
멕시코	30	110	3.6
스페인	28	45	1.6
캐나다	21	34	1.6
인도	21	1,198	57.7
폴란드	20	38	1.9
인도네시아	19	230	12.2
한국	18	49	2.7

자료: e-나라지표 - 자동차 등록 현황(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11 세계자동차통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에서 2021.11.11. 다운로드)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13명²⁰⁾으로 보급률이 더 증가하였으며,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자동차 관련 비용 이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요금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주영, 황순연, 고두환, 오연선(2017)은 국제 비교를 위해 16개국의 요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대중교통 비용을 비교 연구하였다.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12.5%)였고, 가장 낮은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2.2%였다, G7에 해당하는 국가는 약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8%로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림 6-1-2] 시내버스 기본요금 및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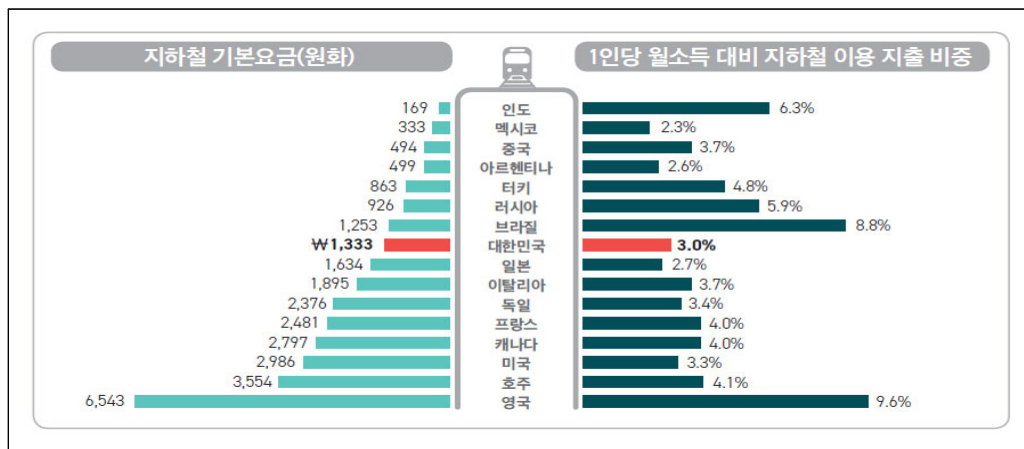
자료: 김주영, 황순연, 고두환, 오연선(2017), 통계로 본 교통 - 2017 교통 주요 이슈에 관한 인사이트, 한국교통연구원, p.15.

1인당 월소득 대비 지하철 요금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9.6%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2.3% 수준을 보였다. G7에

2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1.20.), '20.12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 대, 친환경차 80만 대 돌파. p.2.

해당하는 국가는 일본(2.7%), 영국(9.6%)을 제외하고 약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3%로 월소득 대비 지하철 이용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3] 지하철 기본요금 및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



자료: 김주영, 황순연, 고두환, 오연선(2017), 통계로 본 교통 - 2017 교통 주요 이슈에 관한 인사이트, 한국교통연구원. p.15.

나. 한국의 통신비 부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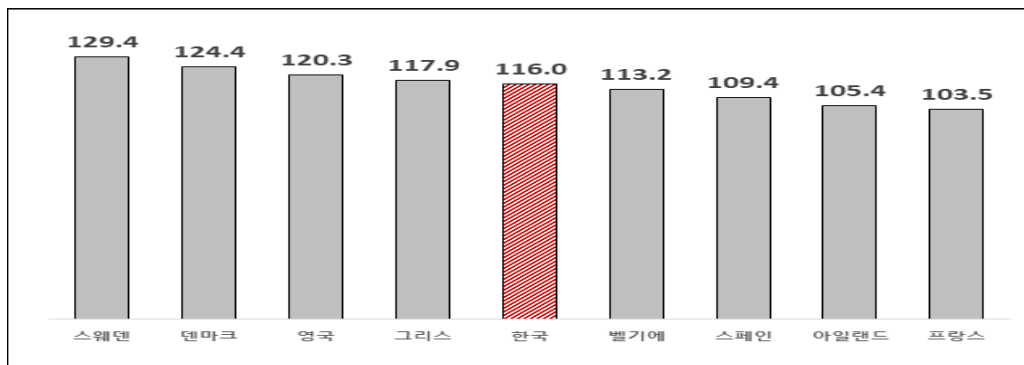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의 통신비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신비에는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이 포함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비의 대부분이 통신장비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통신 관련-이동전화, 인터넷 등-이용률에 대해 살펴보면, 이동전화 가입 건수는 2015년 기준 인구 100명당 116건으로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률 또한 2015년 기준 89.9%로 국민의 90%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HBS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다소 과거인 2015년

기준 자료로 살펴봤다는 점을 밝혀둔다. 물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동전화 가입 건수는 인구 100명당 137.5건으로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인터넷 이용률은 96.5%로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6-1-4] 이동전화 가입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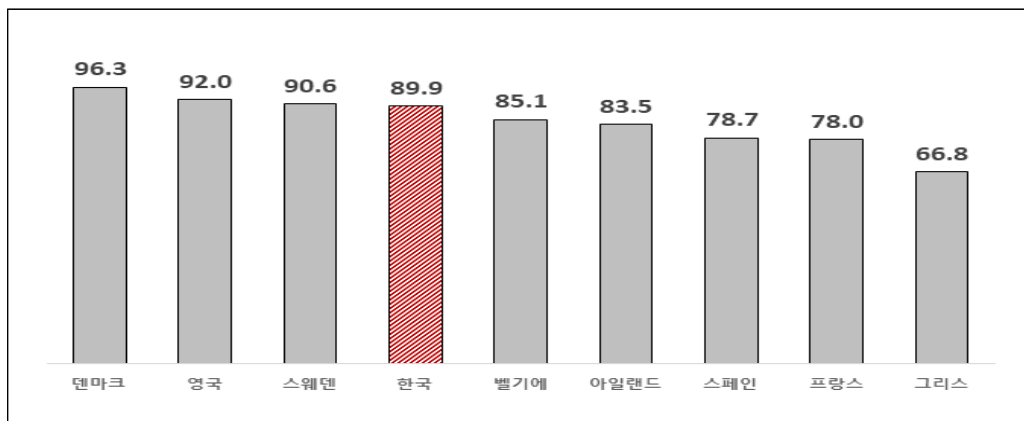
(단위: 건/100명)



주: 2015년 기준.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137.5건으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이동전화 가입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0&conn_path=I3에서 2021.10.18. 인출

[그림 6-1-5]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주: 1) 2015년 기준.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96.5%로 덴마크와 함께 비교 국가 중 높은 수준임.
 2) 케이블 모뎀, DSL, 주택/건물에 광섬유 연결, 기타 고정 (유선) 광대역 가입, 위성 광대역 및 지상파 고정 무선 광대역이 포함되며,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합계를 측정.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이동전화 가입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0&conn_path=I3에서 2021.10.18. 인출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 하면서, 가구 특성 혹은 소득 수준별로 통신비용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계지출의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금액의 수준을 OECD Communications Outlook(2013) 보고서²¹⁾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25개국 중에서 세 번째, 소비지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통신비 금액이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민계정²²⁾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비중은 5.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난 10년간 지속 1위). 2019년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비중(5.2%)은 33개국 평균(2.4%) 대비 2.1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5〉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 및 ICT 지출 비중

(단위: USD, %)

월평균 가계통신비			ICT 지출비중		
한국		OECD 25개국 평균	한국		OECD 29개국 평균
순위	통신비		순위	비중	
3위 / 25개국	\$ 148 (135.3%)	\$ 110	2위 / 29개국	6.04% (138.1%)	4.38%

주: 괄호는 OECD 평균 대비 비율이며, 2011년 기준
 자료: OECD(2013),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21) OECD는 2013년까지 ‘OECD Communications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통신비 지출액을 발표하였으나, 2015년 ‘Digital Economic Outlook’으로 개편하면서 이슈의 민감성, 데이터 취합 소요 비용 및 시간 효율성 제고 등의 이유로 제외하였다.

22) 〈참고표〉 가계통신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한국	6.2	6.2	6.1	5.9	5.4	5.3	5.6	5.6	5.4	5.2
② 한국 제외 평균	3.0	2.9	2.9	2.8	2.7	2.7	2.7	2.6	2.5	2.4
① / ②	2.1	2.1	2.1	2.1	2.0	2.0	2.1	2.2	2.1	2.1

주: National Accounts >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자료: 나상우. (2021),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현황 및 경감방안, 한국가계의 생계비 지출 경감 방안 연구진 세미나(2021.04.26.) 발표자료,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

1. 가구유형별 교통·통신비 지출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과 비교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소비지출 대비 15.6%로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12.4%로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전체 가구 기준에 비해 교통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15.3%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 국가유형별로 보면, 사민주의 국가(스웨덴, 덴마크), 자유주의 국가(영국, 아일랜드), 보수주의 국가(프랑스, 벨기에),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유럽(스페인, 그리스)과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교통비 부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교통비는 경제활동, 등하교 등 이동에 대한 활동량과 관련성이 높은 지출비목으로 노인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연령층이나 등하교를 하는 학생이 있는 4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노인단독가구의 교통비 부담 수준과 마찬가지로 국가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4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표 6-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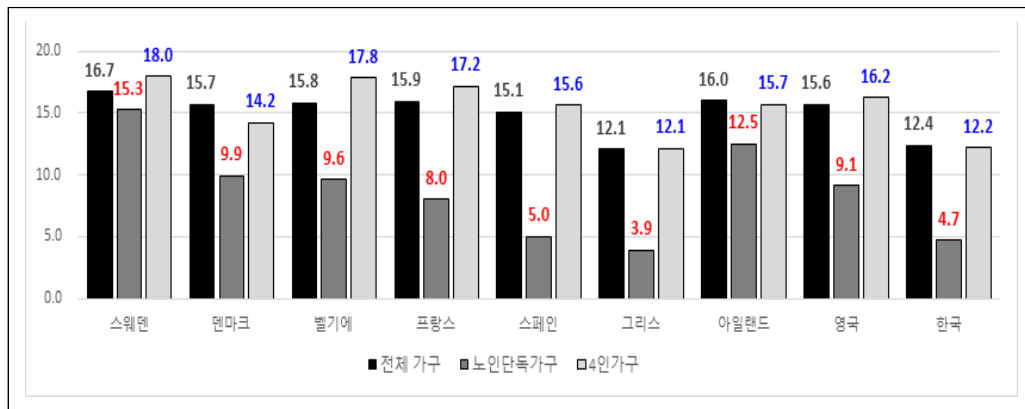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비지출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16.7	15.3	18.0
덴마크	15.7	9.9	14.2
벨기에	15.8	9.6	17.8
프랑스	15.9	8.0	17.2
스페인	15.1	5.0	15.6
그리스	12.1	3.9	12.1
아일랜드	16.0	12.5	15.7
영국	15.6	9.1	16.2
한국	12.4	4.7	12.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1]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러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와 한국 간의 교통비 부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소득 대비 교통비 지출 부담이 10% 이상(단, 덴마크는 9.6%)인 반면, 한국의 경우 소득 대비 교통비 지출 부담은 7.5%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스웨덴에서 소득 대비 비율이 12.9%로 가장 높

았으며, 한국이 가장 낮은 비율(3.3%)을 보인다. 소득 대비 교통비의 비율이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높게 나타나며, 남유럽 국가와 한국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4인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와 비슷한 양상, 노인단독가구와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 남유럽 국가에서 소득 대비 교통비 지출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이상의 비율로 나타난다.

〈표 6-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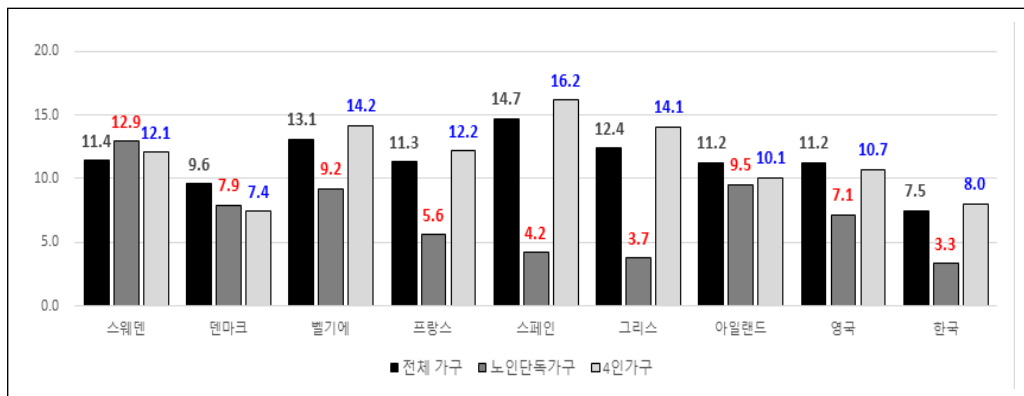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11.4	12.9	12.1
덴마크	9.6	7.9	7.4
벨기에	13.1	9.2	14.2
프랑스	11.3	5.6	12.2
스페인	14.7	4.2	16.2
그리스	12.4	3.7	14.1
아일랜드	11.2	9.5	10.1
영국	11.2	7.1	10.7
한국	7.5	3.3	8.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2]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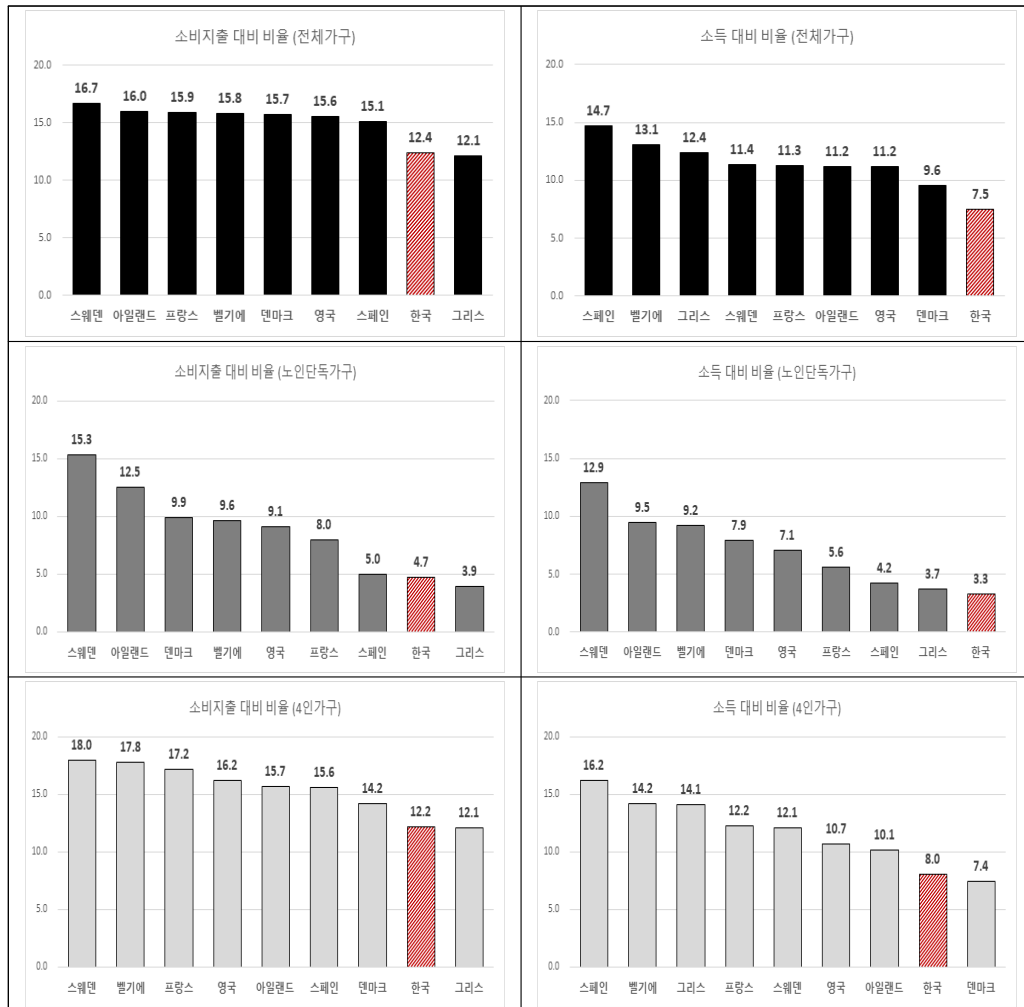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14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6-2-3] 에서 한국의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3]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은 유럽 국가와 한국의 통신비 부담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비교 국가와 한국 간의 통신비 부담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한국이 5.7%로 비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4% 이하로 국가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OECD Communications Outlook(2013)에서와 동일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기준에 비해 모든 국가에서 통신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국가(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다. 특징적인 점은 한국의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혹은 4인 가구와 달리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노인단독가구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전체 혹은 4인 가구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통신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인 가구 유형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국가들은 2~4%대를 보인다.

〈표 6-2-3〉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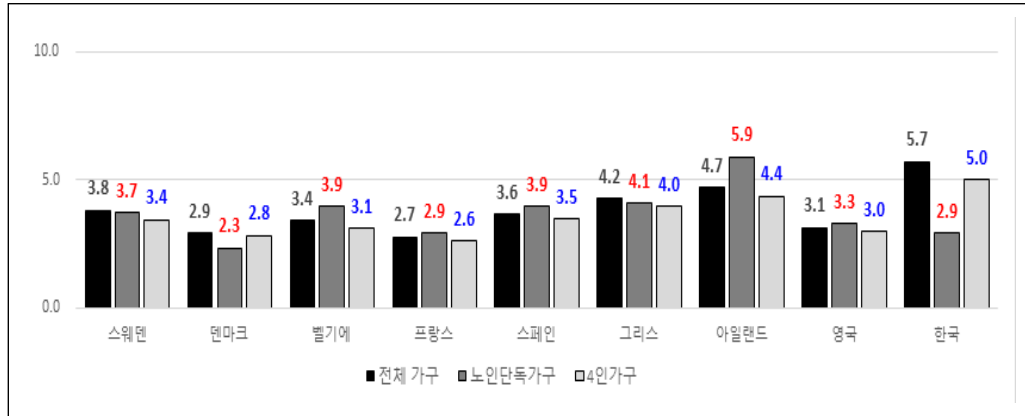
구분	소비지출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3.8	3.7	3.4
덴마크	2.9	2.3	2.8
벨기에	3.4	3.9	3.1
프랑스	2.7	2.9	2.6
스페인	3.6	3.9	3.5
그리스	4.2	4.1	4.0
아일랜드	4.7	5.9	4.4
영국	3.1	3.3	3.0
한국	5.7	2.9	5.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4]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은 대부분 3% 내외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한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른 비교 대상 국가들과 달리,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단독가구는 비교 국가들에 비해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낮았다.

<표 6-2-4>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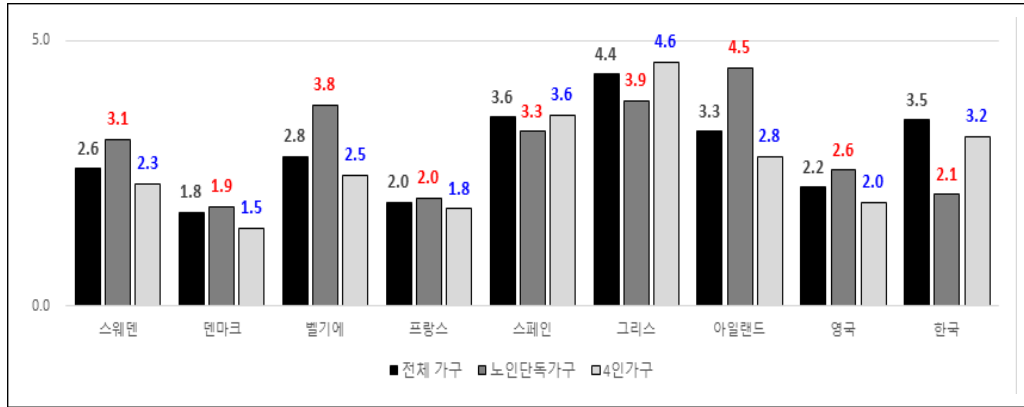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소득 대비 비율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스웨덴	2.6	3.1	2.3
덴마크	1.8	1.9	1.5
벨기에	2.8	3.8	2.5
프랑스	2.0	2.0	1.8
스페인	3.6	3.3	3.6
그리스	4.4	3.9	4.6
아일랜드	3.3	4.5	2.8
영국	2.2	2.6	2.0
한국	3.5	2.1	3.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5]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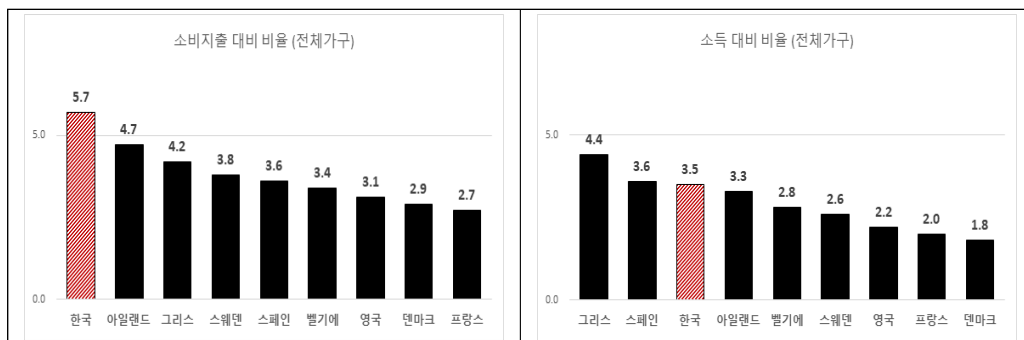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전체 가구 혹은 4인 가구에서 가장 높고, 노인단독가구는 중간 수준이다.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은 전체 가구 혹은 4인 가구의 경우 남유럽 국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다만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그림 6-2-6]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단위: %)



148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2. 소득분위별 교통·통신비 지출

가. 교통비

다음에서는 소득분위별로 교통비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비용 이외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한국 또한 소득분위에 따라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의 차이를 보인다.

〈표 6-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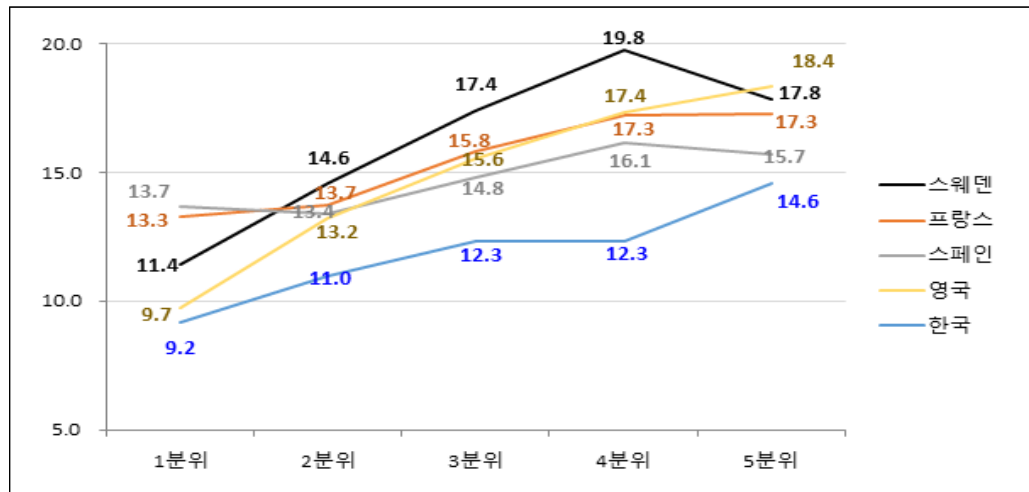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11.4	14.6	17.4	19.8	17.8	16.7
덴마크	10.2	12.1	14.9	19.5	18.4	15.7
벨기에	12.3	14.2	16.1	16.3	17.7	15.8
프랑스	13.3	13.7	15.8	17.3	17.3	15.9
스페인	13.7	13.4	14.8	16.1	15.7	15.1
그리스	8.5	9.2	10.6	13.5	14.6	12.1
아일랜드	11.6	13.8	16.2	17.0	18.3	16.0
영국	9.7	13.2	15.6	17.4	18.4	15.6
한국	9.2	11.0	12.3	12.3	14.6	12.4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7]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의 분위별 차이가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와 영국이었다. 영국의 경우 소득 1분위의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은 9.7%로, 5분위의 18.4%보다 1.9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경우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의 차이와는 달리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은 소득분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격차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표 6-2-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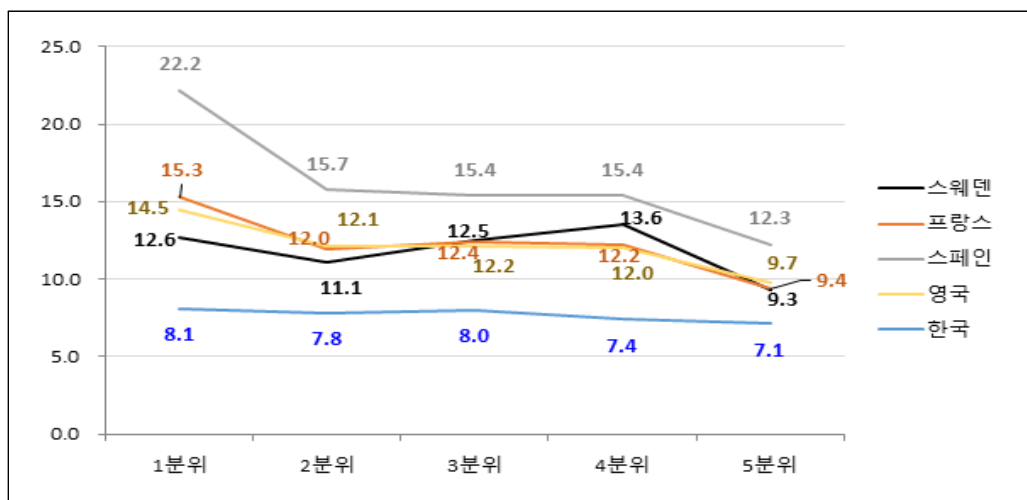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12.6	11.1	12.5	13.6	9.3	11.4
덴마크	10.2	9.0	9.7	11.2	8.5	9.6
벨기에	13.6	13.6	14.3	13.3	11.9	13.1
프랑스	15.3	12.0	12.4	12.2	9.4	11.3
스페인	22.2	15.7	15.4	15.4	12.3	14.7
그리스	18.1	11.1	11.6	13.3	11.7	12.4
아일랜드	13.4	11.3	12.0	11.7	10.1	11.2
영국	14.5	12.1	12.2	12.0	9.7	11.2
한국	8.1	7.8	8.0	7.4	7.1	7.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8]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가구유형별로 보면, 먼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민주의 국가(스웨덴, 덴마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자유주의 국가(아일랜드, 영국)의 경우에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별 차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도 남유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1분위 노인단독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은 4.2%로 5분위의 절반에 해당한다. 고분위의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요금 감면 정책을 적용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10.6	19.6	10.2	16.4	30.9	15.3
덴마크	7.1	8.6	11.3	22.6	19.3	9.9
벨기에	8.0	11.0	5.3	14.0	15.5	9.6
프랑스	7.5	6.9	7.5	8.8	9.8	8.0
스페인	5.8	2.9	3.5	6.6	8.4	5.0
그리스	2.2	3.1	3.8	4.7	7.0	3.9
아일랜드	8.8	13.4	18.0	18.3	16.0	12.5
영국	5.7	8.6	12.1	13.5	15.7	9.1
한국	4.2	4.0	4.9	3.8	10.9	4.7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11.6	19.6	5.7	11.6	12.6	12.9
덴마크	6.7	7.5	8.8	18.8	6.9	7.9

15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벨기에	9.2	11.3	5.0	12.1	8.6	9.2
프랑스	7.4	5.5	5.2	5.6	5.1	5.6
스페인	7.3	2.7	2.9	6.1	5.3	4.2
그리스	3.1	3.2	3.6	4.0	4.8	3.7
아일랜드	8.0	10.6	11.8	12.6	8.4	9.5
영국	6.0	7.0	8.4	8.0	7.3	7.1
한국	3.4	2.6	2.7	2.2	4.7	3.3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4인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노인단독가구와 눈에 띄게 다른 특징은 저분위일수록 소비지출 혹은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와 영국, 프랑스의 경우 1분위에서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이 20~25% 정도로,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분위별 교통비 부담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6-2-8〉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4인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6.8	13.3	20.4	20.9	17.0	18.0
덴마크	14.9	11.3	12.3	15.9	14.8	14.2
벨기에	9.2	17.5	20.2	18.3	17.7	17.8
프랑스	17.2	14.9	17.9	17.5	17.4	17.2
스페인	15.8	16.4	15.4	16.4	14.6	15.6
그리스	9.7	10.4	11.4	13.1	13.6	12.1
아일랜드	11.4	14.1	14.9	17.7	16.7	15.7
영국	14.2	14.4	16.1	16.8	17.3	16.2
한국	10.2	11.5	13.3	11.1	13.5	12.2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6.2	9.4	14.3	14.9	9.6	12.1
덴마크	14.5	6.4	6.9	8.2	6.2	7.4
벨기에	9.5	16.0	17.8	13.8	11.8	14.2
프랑스	21.4	13.3	14.3	12.4	9.5	12.2
스페인	25.5	20.9	17.0	16.1	12.1	16.2
그리스	24.0	13.9	14.0	14.1	12.5	14.1
아일랜드	12.1	11.4	11.0	11.4	8.1	10.1
영국	22.2	12.0	11.8	11.6	8.5	10.7
한국	9.5	8.4	9.6	7.2	6.9	8.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나. 통신비

마지막으로 소득분위별로 통신비 부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모든 소득분위에서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저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은 6%대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앞에서 한국의 통신비 부담 수준을 분석했을 때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이 OECD 국가들 중에서 2, 3위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 1, 5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의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보수주의(프랑스, 벨기에) 국가의 경우 그 격차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며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15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표 6-2-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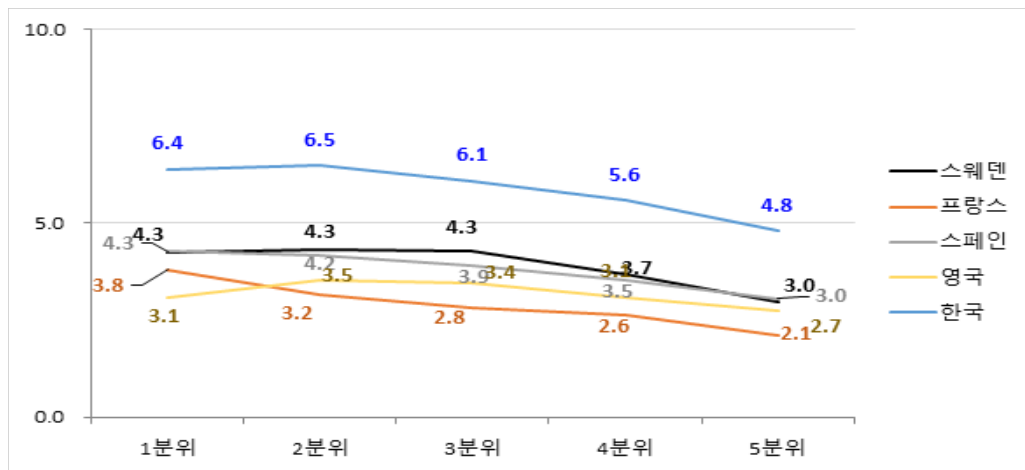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4.3	4.3	4.3	3.7	3.0	3.8
덴마크	3.2	3.2	3.0	3.0	2.4	2.9
벨기에	4.5	3.9	3.6	3.1	2.7	3.4
프랑스	3.8	3.2	2.8	2.6	2.1	2.7
스페인	4.3	4.2	3.9	3.5	3.0	3.6
그리스	4.2	4.5	4.8	4.3	3.8	4.2
아일랜드	5.3	5.2	5.0	4.6	4.0	4.7
영국	3.1	3.5	3.4	3.1	2.7	3.1
한국	6.4	6.5	6.1	5.6	4.8	5.7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9]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과 달리,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은 국가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부담이 크고, 특히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2-10〉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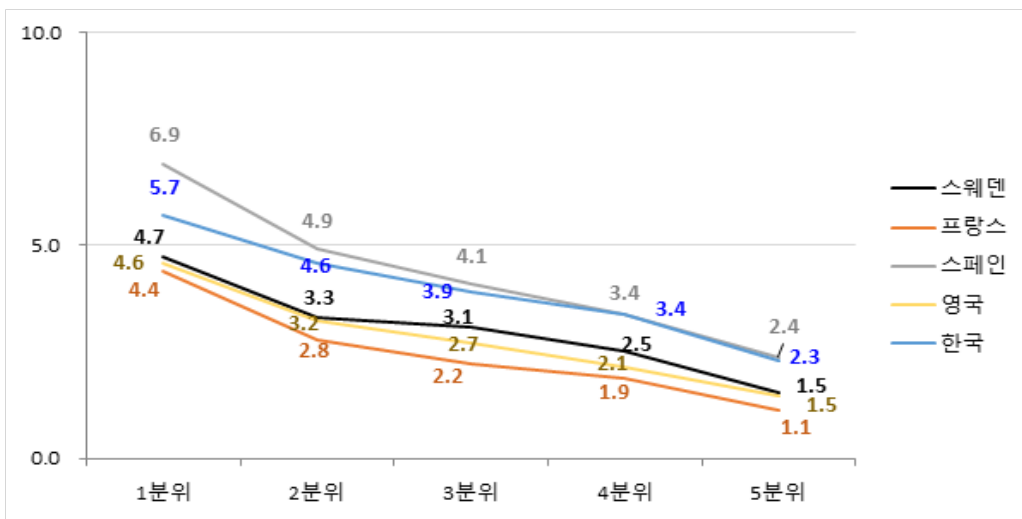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4.7	3.3	3.1	2.5	1.5	2.6
덴마크	3.2	2.4	2.0	1.7	1.1	1.8
벨기에	5.0	3.7	3.2	2.6	1.8	2.8
프랑스	4.4	2.8	2.2	1.9	1.1	2.0
스페인	6.9	4.9	4.1	3.4	2.4	3.6
그리스	9.0	5.5	5.2	4.2	3.0	4.4
아일랜드	6.1	4.3	3.7	3.1	2.2	3.3
영국	4.6	3.2	2.7	2.1	1.5	2.2
한국	5.7	4.6	3.9	3.4	2.3	3.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6-2-10]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가구유형별로 보면, 먼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소비 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다.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며,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와 자유주의 국가(아일랜드, 영국)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

진다. 한국의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았다. 소득이 낮음에도 소득 고분위에 비해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통신비의 부담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저소득 가구의 통신비 지출 구조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2-1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노인단독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7	3.9	3.8	4.5	2.9	3.7
덴마크	2.4	2.5	2.5	1.3	1.6	2.3
벨기에	4.0	3.8	4.2	4.0	3.5	3.9
프랑스	3.4	3.1	3.0	2.6	2.4	2.9
스페인	4.4	4.2	4.1	3.3	3.7	3.9
그리스	4.2	4.1	4.0	3.7	4.2	4.1
아일랜드	6.6	5.5	5.6	4.7	4.6	5.9
영국	3.5	3.5	3.3	2.6	2.0	3.3
한국	3.0	2.9	2.6	2.1	2.6	2.9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7	3.9	3.8	4.5	2.9	3.7
덴마크	2.4	2.5	2.5	1.3	1.6	2.3
벨기에	4.0	3.8	4.2	4.0	3.5	3.9
프랑스	3.4	3.1	3.0	2.6	2.4	2.9
스페인	4.4	4.2	4.1	3.3	3.7	3.9
그리스	4.2	4.1	4.0	3.7	4.2	4.1
아일랜드	6.6	5.5	5.6	4.7	4.6	5.9
영국	3.5	3.5	3.3	2.6	2.0	3.3
한국	2.5	1.8	1.4	1.2	1.1	2.1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4인 가구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와 달리 소득분위별 통신비 부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1분위의 경우 7.2%, 5분위의 경우 4.1%로 나타난다.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을 살펴보면 저분위가 고분위보다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이 높고, 특히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컸다. 노인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소득분위별 통신비 부담 비중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절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2-12〉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4인 가구)

(단위: %)

소비지출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4	4.5	4.5	3.1	2.2	3.4
덴마크	3.2	3.4	3.2	3.0	2.0	2.8
벨기에	4.4	3.6	3.2	3.1	2.4	3.1
프랑스	3.6	3.3	2.8	2.5	1.8	2.6
스페인	4.3	4.2	3.8	3.2	2.7	3.5
그리스	4.2	4.8	4.4	3.9	3.3	4.0
아일랜드	5.2	4.9	4.9	4.2	3.5	4.4
영국	3.0	3.7	3.4	2.6	2.6	3.0
한국	7.2	6.2	5.1	4.5	4.1	5.0
소득 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1	3.2	3.2	2.2	1.2	2.3
덴마크	3.1	1.9	1.8	1.5	0.8	1.5
벨기에	4.6	3.3	2.8	2.3	1.6	2.5
프랑스	4.5	2.9	2.2	1.8	1.0	1.8
스페인	6.9	5.3	4.2	3.2	2.2	3.6
그리스	10.3	6.3	5.4	4.2	3.0	4.6
아일랜드	5.6	3.9	3.6	2.7	1.7	2.8
영국	4.6	3.1	2.5	1.8	1.3	2.0
한국	6.7	4.5	3.7	2.9	2.1	3.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제3절 나가며

한국의 교통비 및 통신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의 HBS 자료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 8개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비교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단, 덴마크는 9.6%)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이용 비용 이외에 자동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영국의 경우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차이가 소득분위별로 가장 컸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 또한 소득분위별로 교통비 부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은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의 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고, 한국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사민주의 국가(스웨덴, 덴마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자유주의 국가(아일랜드, 영국)의 경우에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소득분위별 차이를 보였다.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이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별 차이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 또한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모든 분위에서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요금 감면 정책을 적용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통비는 경제활동, 등하교 등 이동 활동량과 관련성이 높은 지출 비목으로 노인단독가구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연령층이나 등하교를 하는 학생이 있는 4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국가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노인단독가구와 특히 다른 특징은 저분위일수록 소비지출 혹은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들(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이 있다는 것이다.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와 영국, 프랑스의 경우 1분위에서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이 20~25% 정도로 다른 비교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분위별 교통비 부담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통신비 부담을 비교해보면 비교 국가와 한국 간의 통신비 부담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한국의 경우 5.7%로 비교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5%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국가유형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은 소비지출 대비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남유럽 국가(그리스, 스페인)에서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커졌고, 특히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전체 가구와 비교해 통신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 국가(아일랜드, 영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다. 소득분위에 따른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국가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와 자유주의 국가(아일랜드, 영국)에서 그 특징은 특히 두드러진다.

4인 가구 유형에서는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 통신비 부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소득분위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한국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이 1분위의 경우 7.2%, 5분위의 경우 4.1%로 나타난다.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을 살펴보면 저분위가 고분위보다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이 높고, 특히 남유럽 국가(스페인, 그리스)와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컸다.

다만, 국가별로 통신비 범위가 상이하고, 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여 국가 간 비교 및 분석이 쉽지 않다. 또한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 사용량, 가입 여부 및 가입자 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별 상황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 및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제7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핵심생계비 부담

제1절 가구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제2절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제 7 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핵심생계비 부담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유럽 8개국의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통신비의 지출 부담 수준을 3~6장에서 확인했다. 7장에서는 네 가지 영역의 지출 부담분을 묶어서 이를 ‘핵심생계비’라고 하고 9개 나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고자 한다. ‘핵심생계비’의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이다. 과연 가계의 핵심생계비의 하위 범주에 네 가지 범주만 포함되느냐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다른 소비지출 범주도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비나 의류비는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 항목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혹은 사회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분야에 한정해서 가계의 지출 수준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인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에 교통·통신 분야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선행 연구인 김기태 외 (2019)의 선례가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제1절 가구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표 7-1-1〉 및 〈그림 7-1-1〉에서 이 보고서가 규정하는 핵심생계비의 국가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모는 가계의 소비지출이다. 이를 통해 국가별 핵심생계비의 몇 가지 지출 경향이 알 수 있다. 첫째, 한국(47.2%)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견줘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다른 나라들의 2분의 1 수

준으로 낮았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와 의료비(6.8%)에서 모두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p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비교 대상인 국가들 가운데서는 덴마크(43.3%)와 스웨덴(42.6%)에서 한국 다음으로 핵심생계비의 부담 수준이 높았다. 북유럽 국가에서 가계 지출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두 나라 모두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각각 21.4%, 19.7%로 높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북유럽의 집합적 소비 분화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크게 낮춘 것은 사실이었으나, 주거·수도·광열비를 잡지 못한 것이 가계의 지출 부담을 높였다.

프랑스는 핵심생계비 비율이 36.7%로 가장 낮았다. 주거·수도·광열비 비율(15.4%), 의료비(1.8%), 교육비(0.8%) 등에서 지출 부담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가계의 핵심생계비 가운데 주거·수도·광열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비중이 소비지출의 20% 전후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흔히 북유럽 국가에서는 보편적 사회보장 모델이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주거·수도·광열비가 가계의 ‘밑 빠진 독’이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수치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주거·수도·광열비가 15% 전후를 차지했다. 한국(11.2%)은 예외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은 보편적인 의료보장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의료비 부담 비율을 2.5% 이내로 관리했다. 한국의 6.8% 수준과는 대조되는 수치였다. 또한 북유럽과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유형 국가에서 교육비를 1% 이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반면,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11.1%로 매우

높았다. 비교 대상인 유럽 국가 가운데 교육비 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그리스(4.0%)보다도 7.1%p가 높았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한국의 사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7-1-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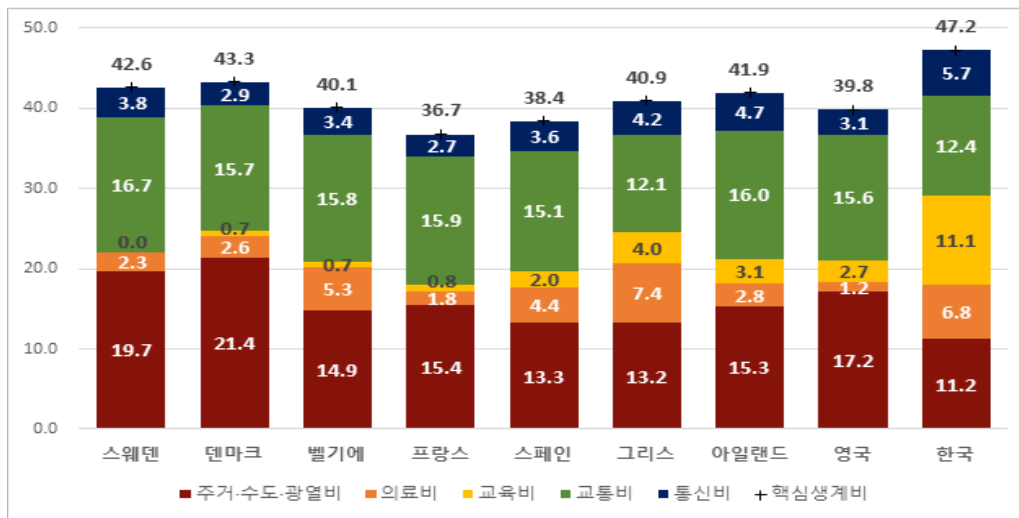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핵심생계비
스웨덴	19.7	2.3	0.0	16.7	3.8	42.6
덴마크	21.4	2.6	0.7	15.7	2.9	43.3
벨기에	14.9	5.3	0.7	15.8	3.4	40.1
프랑스	15.4	1.8	0.8	15.9	2.7	36.7
스페인	13.3	4.4	2.0	15.1	3.6	38.4
그리스	13.2	7.4	4.0	12.1	4.2	40.9
아일랜드	15.3	2.8	3.1	16.0	4.7	41.9
영국	17.2	1.2	2.7	15.6	3.1	39.8
한국	11.2	6.8	11.1	12.4	5.7	47.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1-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표 7-1-2〉 및 〈그림 7-1-2〉에서는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영국은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의 비율이 각각 28.6%로 동일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26.2%)와 덴마크(26.4%)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그리스(42.1%)와 스페인(37.4%)이 상대적으로 핵심생계비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국가에서 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의 비율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는 소득을 분모에 놓았을 때 핵심생계비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두 나라는 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낮거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모가 작아지면서, 핵심생계비 비율이 상승했다.

한국과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이 같은 영국의 지출 영역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국이 주거·수도·광열(12.3%), 교통(11.2%)이 주된 지출 영역이었다면, 한국은 교통(7.5%), 주거·수도·광열(6.8%), 교육(6.7%)이 고르게 가계에 부담을 주었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 영역에서 절감한 비용 대부분을 교육에 사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7-1-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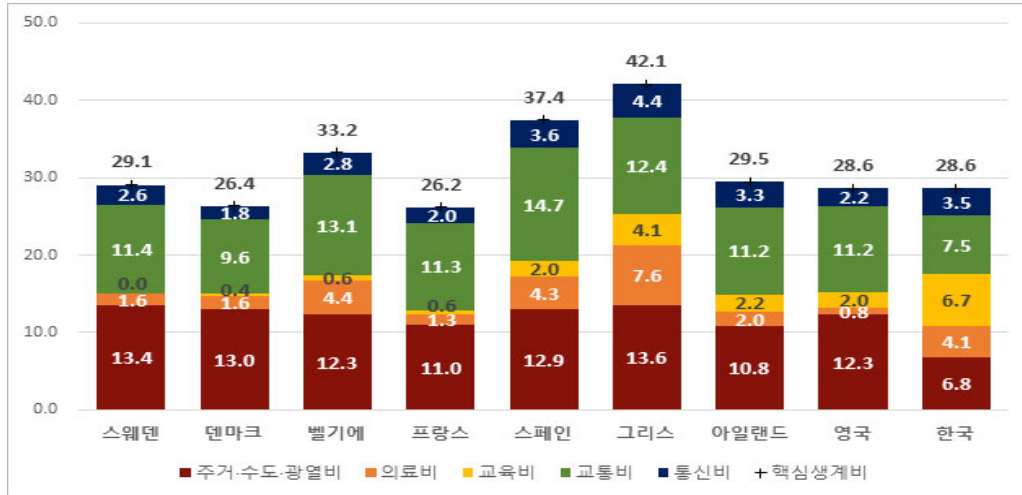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구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13.4	1.6	0.0	11.4	2.6	29.1
덴마크	13.0	1.6	0.4	9.6	1.8	26.4
벨기에	12.3	4.4	0.6	13.1	2.8	33.2
프랑스	11.0	1.3	0.6	11.3	2.0	26.2
스페인	12.9	4.3	2.0	14.7	3.6	37.4
그리스	13.6	7.6	4.1	12.4	4.4	42.1
아일랜드	10.8	2.0	2.2	11.2	3.3	29.5
영국	12.3	0.8	2.0	11.2	2.2	28.6
한국	6.8	4.1	6.7	7.5	3.5	28.6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1-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노인단독가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비 지출은 거의 없었다. 노인들의 주된 소비 영역은 주거·수도·광열과 의료 및 교통이었다. 소비지출을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단독가구의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체 가구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았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25.3%)이 낮았지만, 의료비 부담(14.9%)이 상당히 높았다. 남부 유럽 2개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에서 노인단독가구의 지출 고부담 영역은 주거·수도·광열 다음으로 교통이었다. 반면, 남유럽과 한국에서는 주거·수도·광열 다음으로 부담이 큰 지출 영역이 의료였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은 한국이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프랑스(25.6%), 스페인(30.9%), 아일랜드(32.8%)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16.5%)와 아일랜드(15.6%) 독거노인들의 경우, 한국(17.9%) 독거노인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낮게 나타난 점이 이채롭다. 참고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귀속임대로

(imputed rent)를 주거·수도·광열비에 포함할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노인들의 경우, 자가 소유자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독거노인은 의료비(10.5%) 부담 수준이 높았는데, 그리스(13.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7-1-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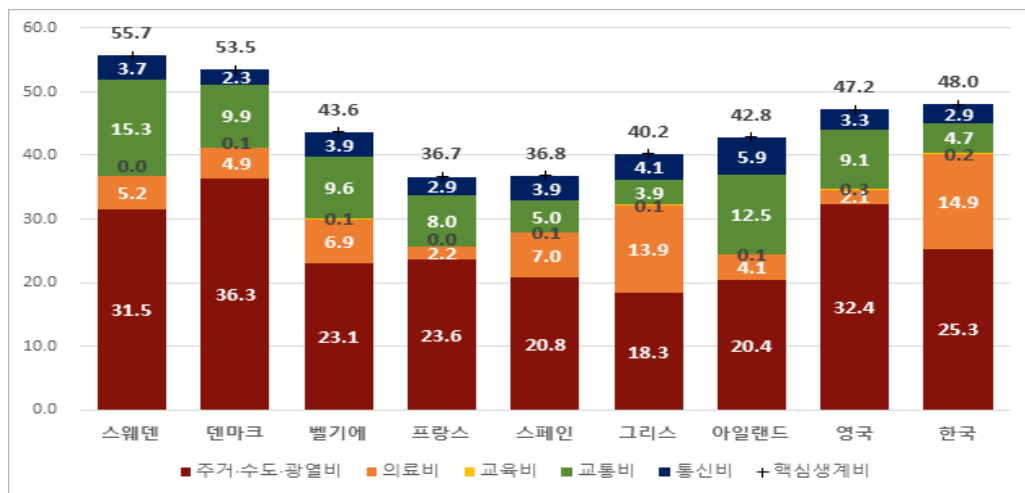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31.5	5.2	0.0	15.3	3.7	55.7
덴마크	36.3	4.9	0.1	9.9	2.3	53.5
벨기에	23.1	6.9	0.1	9.6	3.9	43.6
프랑스	23.6	2.2	0.0	8.0	2.9	36.7
스페인	20.8	7.0	0.1	5.0	3.9	36.8
그리스	18.3	13.9	0.1	3.9	4.1	40.2
아일랜드	20.4	4.1	0.1	12.5	5.9	42.8
영국	32.4	2.1	0.3	9.1	3.3	47.2
한국	25.3	14.9	0.2	4.7	2.9	48.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1-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표 7-1-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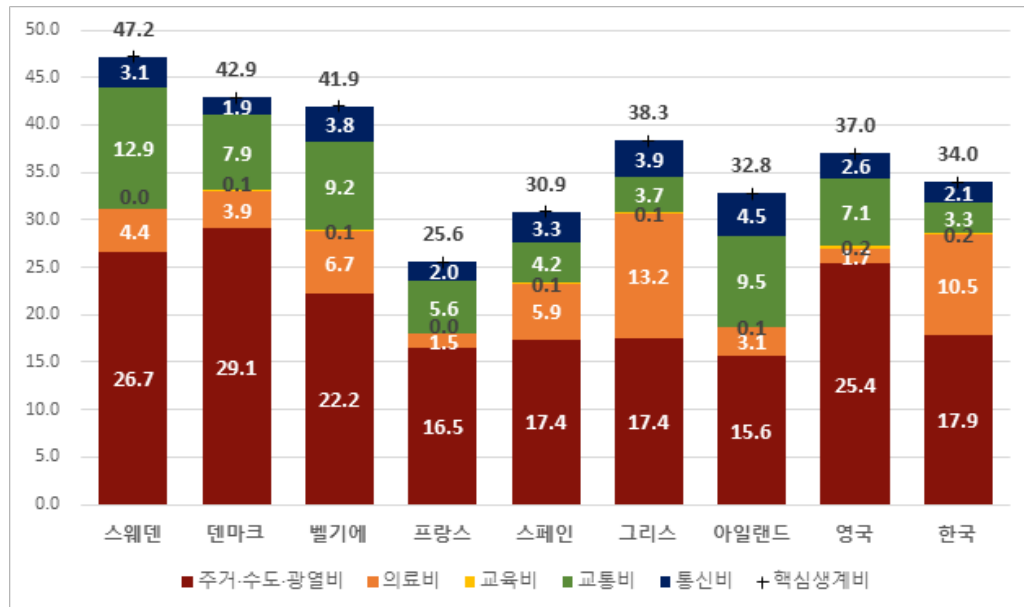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주거·수도· ·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핵심생계비
스웨덴	26.7	4.4	0.0	12.9	3.1	47.2
덴마크	29.1	3.9	0.1	7.9	1.9	42.9
벨기에	22.2	6.7	0.1	9.2	3.8	41.9
프랑스	16.5	1.5	0.0	5.6	2.0	25.6
스페인	17.4	5.9	0.1	4.2	3.3	30.9
그리스	17.4	13.2	0.1	3.7	3.9	38.3
아일랜드	15.6	3.1	0.1	9.5	4.5	32.8
영국	25.4	1.7	0.2	7.1	2.6	37.0
한국	17.9	10.5	0.2	3.3	2.1	34.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1-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이 48.5%로 가장 높았다. 한국 4인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9.5%로 유일하게 한 자리대였지만, 교육비가 1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비는 한국 가계의 ‘밑 빠진 독’이었다. 특히, 한국은 초·중·고 사교육비 지출액이 지난 2019년 21조 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액인 1,924조 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20).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2만 1천 원이었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는 42만 9천 원이 지출됐다. 이는 5장에서 살펴본 OECD(2021i) 통계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비교 대상 가운데 통신비, 의료비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4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그리스(8.5%)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통비 부담 비율은 5.0%, 의료비 지출 비율은 5.6%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그리스(41.8%)가 두 번째로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비(12.1%), 주거·수도·광열비(12.0%), 교육비(8.5%) 부담이 겹쳐서 나타난 결과였다. 반면, 프랑스가 핵심생계비 비율이 34.4%로 가장 낮게 나왔다. 주거·수도·광열비(11.3%), 의료비(1.8%) 등을 전반적으로 낮게 관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한국과 그리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핵심생계비의 지출 수준이 36.7%(영국)~38.8%(아일랜드) 사이에서 조밀하게 분포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의료비를 1.6%로, 교육비를 0.0~0.6%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즉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통해서, 두 영역에서 가계지출을 절감하는 데 성공한 반면, 14%가 넘는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가계의 ‘밑 빠진 독’이었다. 덴마크의 4인 가구는 소비지출액 가운데 17.6%를 주거·수도·광열비로 지출해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1-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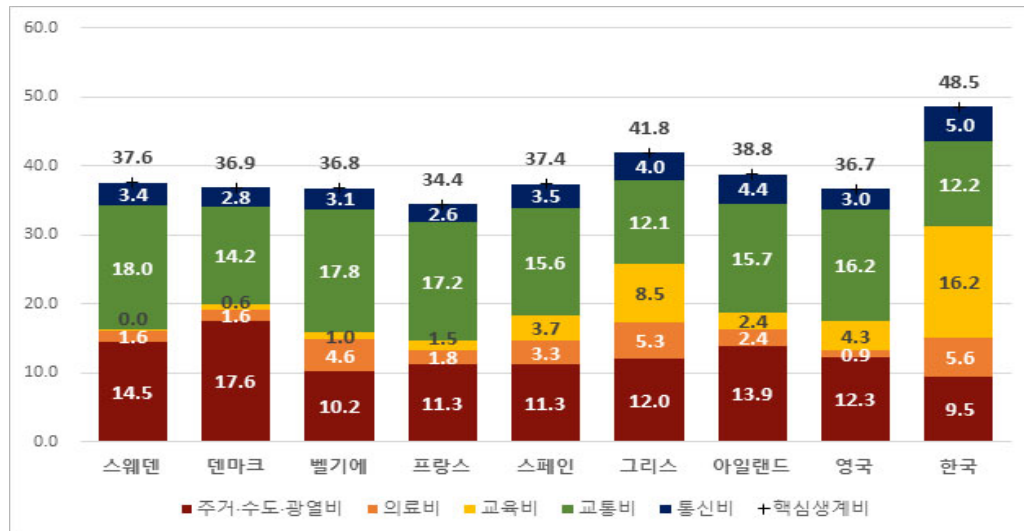
구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핵심생계비
스웨덴	14.5	1.6	0.0	18.0	3.4	37.6
덴마크	17.6	1.6	0.6	14.2	2.8	36.9
벨기에	10.2	4.6	1.0	17.8	3.1	36.8
프랑스	11.3	1.8	1.5	17.2	2.6	34.4
스페인	11.3	3.3	3.7	15.6	3.5	37.4
그리스	12.0	5.3	8.5	12.1	4.0	41.8
아일랜드	13.9	2.4	2.4	15.7	4.4	38.8
영국	12.3	0.9	4.3	16.2	3.0	36.7
한국	9.5	5.6	16.2	12.2	5.0	48.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1-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4인 가구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를 살펴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표 7-1-6〉 참고). 분모가 되는 소득의 분포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덴마크(19.3%), 프랑스(24.4%)가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낮았다.

17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표 7-1-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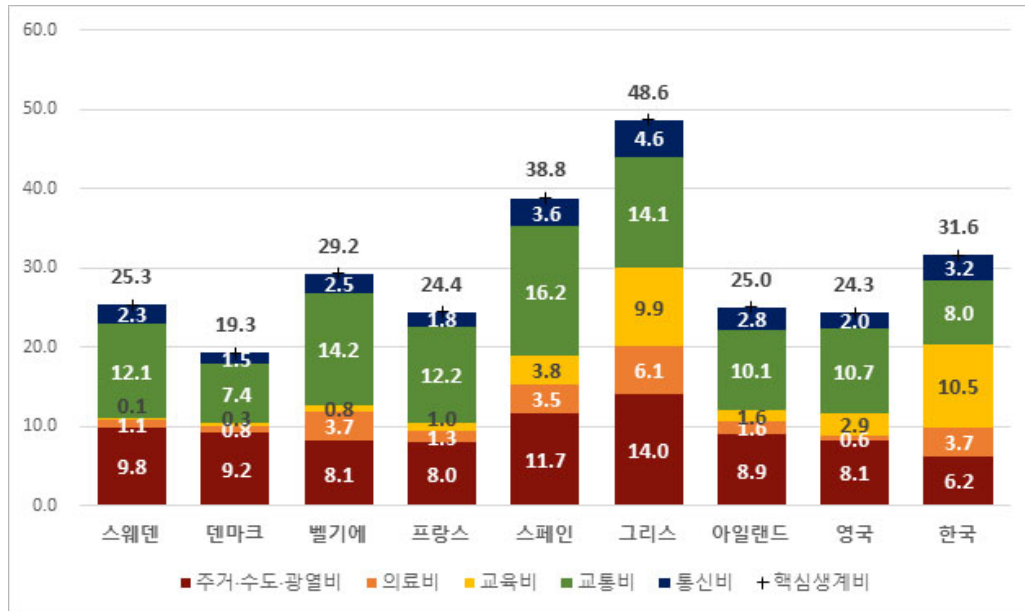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생계비 구성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9.8	1.1	0.1	12.1	2.3	25.3
덴마크	9.2	0.8	0.3	7.4	1.5	19.3
벨기에	8.1	3.7	0.8	14.2	2.5	29.2
프랑스	8.0	1.3	1.0	12.2	1.8	24.4
스페인	11.7	3.5	3.8	16.2	3.6	38.8
그리스	14.0	6.1	9.9	14.1	4.6	48.6
아일랜드	8.9	1.6	1.6	10.1	2.8	25.0
영국	8.1	0.6	2.9	10.7	2.0	24.3
한국	6.2	3.7	10.5	8.0	3.2	31.6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1-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제2절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다음으로, 9개 국가의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소비지출 대비해서 보았을 때, 분위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국가였다.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3.0%p였다. 그리스(0.6%p)에서 차이가 매우 작은 반면, 영국(13.0%), 벨기에(12.9%)에서 분위별 차이가 컸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9.5%), 덴마크(11.2%)에서 1~5분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작지 않았다.

〈표 7-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47.7	47.1	42.7	41.3	38.2	42.6
덴마크	50.2	46.1	42.0	42.8	39.0	43.3
벨기에	49.3	42.6	40.0	37.3	36.4	40.1
프랑스	41.9	38.5	37.3	35.8	33.9	36.7
스페인	41.5	38.5	38.5	38.1	37.2	38.4
그리스	41.0	40.6	41.5	41.4	40.4	40.9
아일랜드	48.3	43.3	41.3	40.5	39.7	41.9
영국	49.8	41.7	38.8	37.3	36.8	39.8
한국	49.1	47.6	47.3	47.3	46.1	47.2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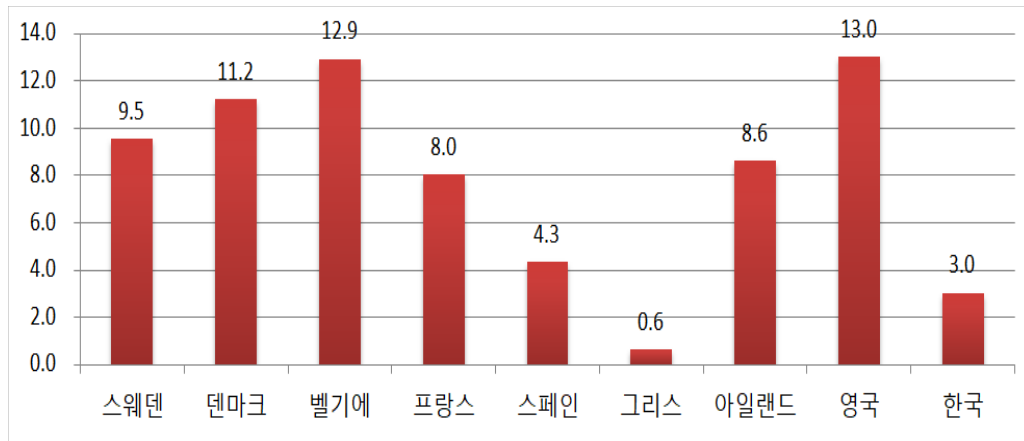
한국에서 분위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주거·수도·광열비의 격차(1분위 17.1% 대비 5분위 9.0%)에도 불구하고, 교육비(1분위 7.0% 대비 5분위 11.6%)와 교통비(1분위 9.2% 대비 5분위 14.6%)에서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 부담이 올라간 것이 전체 분위별 차이를 상쇄했기 때문이었다. 교통비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많은 국가에서 관찰됐다. 영국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주거·수도·광열비 격차가 1분위

17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에서 34.5%, 5분위에서 10.8%로 매우 크게 나타난 점이 전체 핵심생계비의 분위별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됐다.

[그림 7-2-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5분위 차이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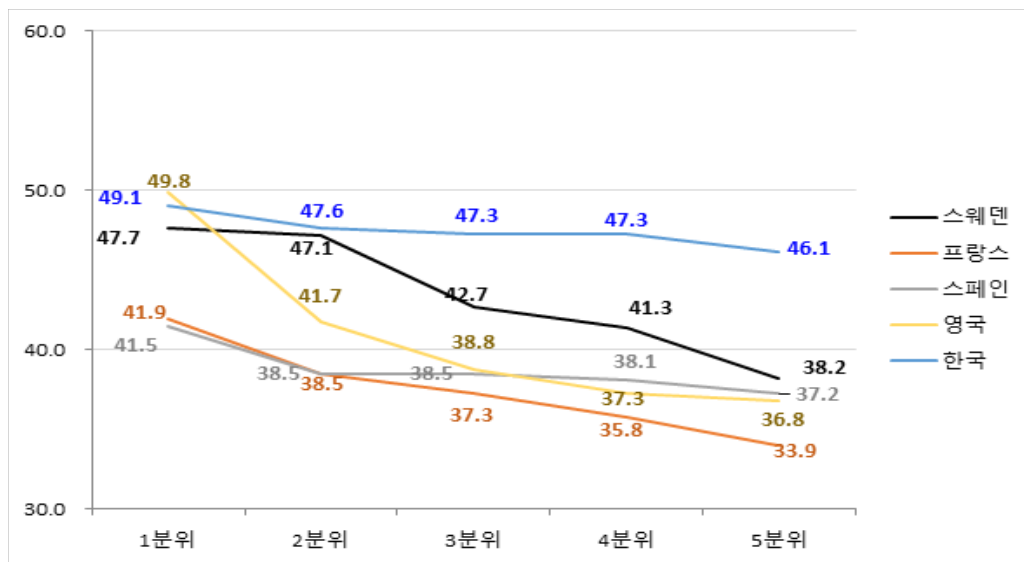
(단위: %p)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2]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표 7-2-2〉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주거·수도·광열비	29.5	24.9	19.1	15.5	15.4	19.7
	의료비	2.4	3.4	1.9	2.3	1.9	2.3
	교육비	0.1	0.0	0.0	0.1	0.1	0.0
	교통비	11.4	14.6	17.4	19.8	17.8	16.7
	통신비	4.3	4.3	4.3	3.7	3.0	3.8
	핵심생계비	47.7	47.1	42.7	41.3	38.2	42.6
덴마크	주거·수도·광열비	33.2	27.5	20.4	16.8	15.7	21.4
	의료비	3.3	2.9	2.5	2.6	2.1	2.6
	교육비	0.2	0.4	1.1	1.0	0.5	0.7
	교통비	10.2	12.1	14.9	19.5	18.4	15.7
	통신비	3.2	3.2	3.0	3.0	2.4	2.9
	핵심생계비	50.2	46.1	42.0	42.8	39.0	43.3
벨기에	주거·수도·광열비	26.1	17.8	14.3	11.8	10.6	14.9
	의료비	5.7	5.9	5.5	5.4	4.6	5.3
	교육비	0.7	0.8	0.6	0.7	0.8	0.7
	교통비	12.3	14.2	16.1	16.3	17.7	15.8
	통신비	4.5	3.9	3.6	3.1	2.7	3.4
	핵심생계비	49.3	42.6	40.0	37.3	36.4	40.1
프랑스	주거·수도·광열비	21.8	19.2	16.2	13.3	11.7	15.4
	의료비	1.6	1.9	1.9	1.9	1.8	1.8
	교육비	1.4	0.5	0.6	0.6	1.1	0.8
	교통비	13.3	13.7	15.8	17.3	17.3	15.9
	통신비	3.8	3.2	2.8	2.6	2.1	2.7
	핵심생계비	41.9	38.5	37.3	35.8	33.9	36.7
스페인	주거·수도·광열비	18.4	15.1	13.0	12.2	11.4	13.3
	의료비	4.0	4.6	5.0	4.3	4.2	4.4
	교육비	1.2	1.3	1.8	2.0	2.9	2.0
	교통비	13.7	13.4	14.8	16.1	15.7	15.1
	통신비	4.3	4.2	3.9	3.5	3.0	3.6
	핵심생계비	41.5	38.5	38.5	38.1	37.2	38.4
그리스	주거·수도·광열비	17.9	15.9	13.8	12.4	10.3	13.2
	의료비	7.2	7.9	8.6	6.5	7.1	7.4
	교육비	3.1	3.0	3.7	4.6	4.5	4.0
	교통비	8.5	9.2	10.6	13.5	14.6	12.1
	통신비	4.2	4.5	4.8	4.3	3.8	4.2
	핵심생계비	41.0	40.6	41.5	41.4	40.4	40.9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아일랜드	주거·수도·광열비	25.0	19.7	15.0	12.5	10.8	15.3
	의료비	2.2	2.4	2.6	3.0	3.2	2.8
	교육비	4.3	2.3	2.5	3.3	3.3	3.1
	교통비	11.6	13.8	16.2	17.0	18.3	16.0
	통신비	5.3	5.2	5.0	4.6	4.0	4.7
	핵심생계비	48.3	43.3	41.3	40.5	39.7	41.9
영국	주거·수도·광열비	34.5	22.7	15.7	12.5	10.8	17.2
	의료비	0.8	1.2	1.1	1.3	1.3	1.2
	교육비	1.7	1.1	2.9	3.1	3.6	2.7
	교통비	9.7	13.2	15.6	17.4	18.4	15.6
	통신비	3.1	3.5	3.4	3.1	2.7	3.1
	핵심생계비	49.8	41.7	38.8	37.3	36.8	39.8
한국	주거·수도·광열비	17.1	12.9	10.9	10.2	9.0	11.2
	의료비	9.4	7.0	6.3	6.6	6.1	6.8
	교육비	7.0	10.2	11.7	12.6	11.6	11.1
	교통비	9.2	11.0	12.3	12.3	14.6	12.4
	통신비	6.4	6.5	6.1	5.6	4.8	5.7
	핵심생계비	49.1	47.6	47.3	47.3	46.1	47.2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9개 국가의 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보면, 분위에 따른 비율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고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핵심생계비의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편, 한국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했다. 모든 비목에서 분위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떨어졌지만, 하향세가 다른 국가에 견줘서는 완만했고,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1분위(43.5%)와 5분위(22.5%)의 차이는 21.0%로 가장 낮았다. 그리스(54.7%)와 영국(54.6%)에서 소득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다. 그리스는 1분위(87.1%)와 5분위(32.4%)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졌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에서 5분위와 1분위의 차이가 4%p를 넘지 않았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제외하고

보면, 스웨덴에서는 교통비에서 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고(1분위 12.6% 대비 5분위 9.3%), 덴마크는 의료비에서 분위별 차이가 가장 컸다(1분위 3.3% 대비 5분위 1.1%). 이들 분야에서 가계지출 수준을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분위별 격차도 크지 않도록 관리했다. 유일한 문제가 주거·수도·광열비였는데, 지출 수준도 높았고, 격차도 컸다. 스웨덴은 1분위(32.6%)와 5분위(8.0%)의 차이가 24.6%p였다. 프랑스와 영국 등 다른 복지국가에서도 분위별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 영역은 주거·수도·광열비였다.

〈표 7-2-3〉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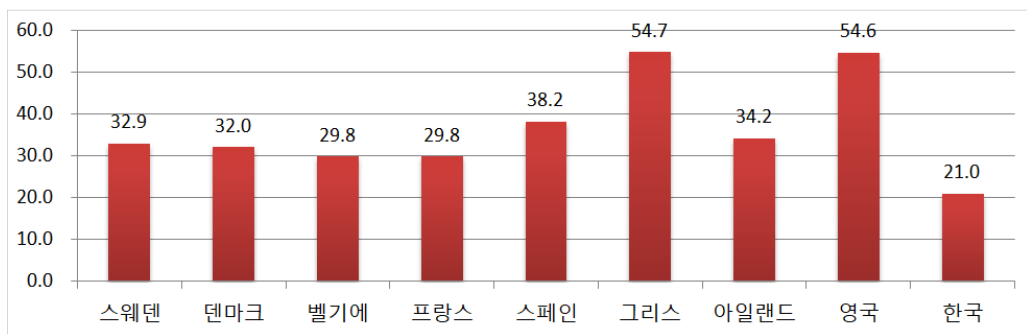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52.8	36.0	30.5	28.3	19.9	29.1
덴마크	50.0	34.5	27.4	24.6	18.0	26.4
벨기에	54.3	40.8	35.5	30.6	24.5	33.2
프랑스	48.2	33.6	29.3	25.4	18.4	26.2
스페인	67.2	45.2	40.0	36.3	29.0	37.4
그리스	87.1	49.2	45.4	40.7	32.4	42.1
아일랜드	56.1	35.4	30.8	27.7	21.9	29.5
영국	74.1	38.2	30.3	25.8	19.5	28.6
한국	43.5	33.6	30.6	28.4	22.5	28.6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3]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5분위 차이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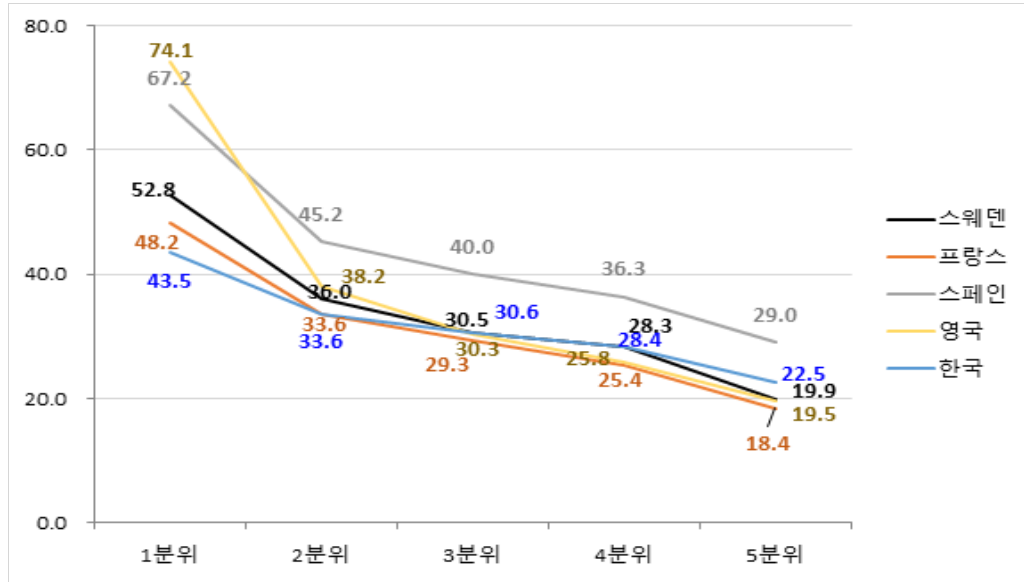
(단위: %p)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표 7-2-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주거·수도·광열비	32.6	19.0	13.7	10.6	8.0	13.4
	의료비	2.7	2.6	1.3	1.6	1.0	1.6
	교육비	0.1	0.0	0.0	0.0	0.0	0.0
	교통비	12.6	11.1	12.5	13.6	9.3	11.4
	통신비	4.7	3.3	3.1	2.5	1.5	2.6
	핵심생계비	52.8	36.0	30.5	28.3	19.9	29.1
덴마크	주거·수도·광열비	33.1	20.6	13.3	9.7	7.2	13.0
	의료비	3.3	2.2	1.6	1.5	1.0	1.6
	교육비	0.2	0.3	0.7	0.6	0.2	0.4
	교통비	10.2	9.0	9.7	11.2	8.5	9.6
	통신비	3.2	2.4	2.0	1.7	1.1	1.8
	핵심생계비	50.0	34.5	27.4	24.6	18.0	26.4
벨기에	주거·수도·광열비	28.8	17.1	12.7	9.7	7.1	12.3
	의료비	6.2	5.6	4.9	4.4	3.1	4.4
	교육비	0.7	0.8	0.5	0.6	0.5	0.6
	교통비	13.6	13.6	14.3	13.3	11.9	13.1
	통신비	5.0	3.7	3.2	2.6	1.8	2.8
	핵심생계비	54.3	40.8	35.5	30.6	24.5	33.2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프랑스	주거·수도·광열비	25.1	16.8	12.7	9.5	6.3	11.0
	의료비	1.9	1.6	1.5	1.4	1.0	1.3
	교육비	1.6	0.4	0.5	0.4	0.6	0.6
	교통비	15.3	12.0	12.4	12.2	9.4	11.3
	통신비	4.4	2.8	2.2	1.9	1.1	2.0
	핵심생계비	48.2	33.6	29.3	25.4	18.4	26.2
스페인	주거·수도·광열비	29.7	17.7	13.5	11.6	8.9	12.9
	의료비	6.5	5.4	5.2	4.1	3.3	4.3
	교육비	1.9	1.5	1.8	1.9	2.2	2.0
	교통비	22.2	15.7	15.4	15.4	12.3	14.7
	통신비	6.9	4.9	4.1	3.4	2.4	3.6
	핵심생계비	67.2	45.2	40.0	36.3	29.0	37.4
그리스	주거·수도·광열비	38.1	19.3	15.1	12.2	8.3	13.6
	의료비	15.3	9.6	9.4	6.4	5.7	7.6
	교육비	6.6	3.6	4.0	4.6	3.7	4.1
	교통비	18.1	11.1	11.6	13.3	11.7	12.4
	통신비	9.0	5.5	5.2	4.2	3.0	4.4
	핵심생계비	87.1	49.2	45.4	40.7	32.4	42.1
아일랜드	주거·수도·광열비	29.0	16.1	11.2	8.6	6.0	10.8
	의료비	2.5	1.9	1.9	2.1	1.8	2.0
	교육비	5.0	1.9	1.9	2.3	1.8	2.2
	교통비	13.4	11.3	12.0	11.7	10.1	11.2
	통신비	6.1	4.3	3.7	3.1	2.2	3.3
	핵심생계비	56.1	35.4	30.8	27.7	21.9	29.5
영국	주거·수도·광열비	51.4	20.8	12.3	8.6	5.7	12.3
	의료비	1.1	1.1	0.9	0.9	0.7	0.8
	교육비	2.6	1.0	2.3	2.1	1.9	2.0
	교통비	14.5	12.1	12.2	12.0	9.7	11.2
	통신비	4.6	3.2	2.7	2.1	1.5	2.2
	핵심생계비	74.1	38.2	30.3	25.8	19.5	28.6
한국	주거·수도·광열비	15.1	9.1	7.0	6.1	4.4	6.8
	의료비	8.4	4.9	4.1	3.9	3.0	4.1
	교육비	6.2	7.2	7.6	7.6	5.7	6.7
	교통비	8.1	7.8	8.0	7.4	7.1	7.5
	통신비	5.7	4.6	3.9	3.4	2.3	3.5
	핵심생계비	43.5	33.6	30.6	28.4	22.5	28.6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다음으로, 9개 국가의 개별 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층이 몰려 있는 1분위와 고소득층인 5분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1분위의 지출 부담에 대한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통신 같은 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자격은 보편적이지만,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일정한 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비용절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분위의 지출 부담 수준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분위를 보면,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의 비율은 한국이 49.1%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는데, 세 나라는 그리스(41.0%), 스페인(41.5%), 프랑스(41.9%)였다. 나머지 다섯 나라는 48.3%(아일랜드)~50.2%(덴마크) 사이에 분포했다.

한국의 1분위는 주거·수도·광열비(17.1%)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다수의 국가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20%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주거·수도·광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가벼웠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저소득층이 다른 국가의 저소득층을 보면서, 본인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가볍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1분위에 부담을 가중하는 비목은 의료비(9.4%)였다. 1분위의 의료비 부담이 한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는 그리스인데, 그 수치는 7.2%였다. 영국(0.8%), 프랑스(1.6%), 스웨덴(2.4%)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낮게 유지했다. 한국의 1분위에서 교육비 부담이 7.0%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1분위의 지출 부담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였다. 덴마크의 경우, 의료비 부담은 3.3%, 교육비 부담은 0.2%로 낮게 관리했지만, 1분위의 거주

비 부담이 33.2%로 가장 높았고, 교통비 부담 역시 10.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7-2-5〉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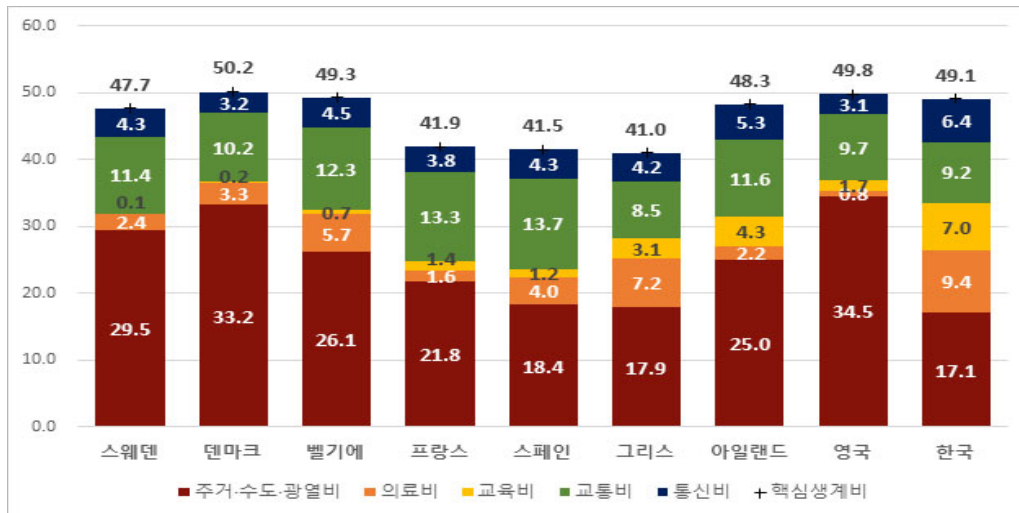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29.5	2.4	0.1	11.4	4.3	47.7
덴마크	33.2	3.3	0.2	10.2	3.2	50.2
벨기에	26.1	5.7	0.7	12.3	4.5	49.3
프랑스	21.8	1.6	1.4	13.3	3.8	41.9
스페인	18.4	4.0	1.2	13.7	4.3	41.5
그리스	17.9	7.2	3.1	8.5	4.2	41.0
아일랜드	25.0	2.2	4.3	11.6	5.3	48.3
영국	34.5	0.8	1.7	9.7	3.1	49.8
한국	17.1	9.4	7.0	9.2	6.4	49.1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5]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보편적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저소득 계층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덴마크 다음으로 1분위의 핵심생계비 부담이 큰 나라는 영국(49.8%)이었는데, 이들도 소비지출 가운데 34.5%를 주거·수도·광열비로 썼다.

5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은 한국이 46.1%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9.0%로 여전히 낮았지만, 교육비 부담 비율이 1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부유층이 사교육에 상당한 액수를 지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5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내역을 보면, 1분위와 대조되는 대목은 교통비 지출 부담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1분위가 교통비로 9.2%를 썼다면, 5분위는 14.6%를 소비했다. 1분위가 주로 교통 운임으로 지출했다면, 5분위는 자동차 구입비로 주로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경향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표 7-2-6〉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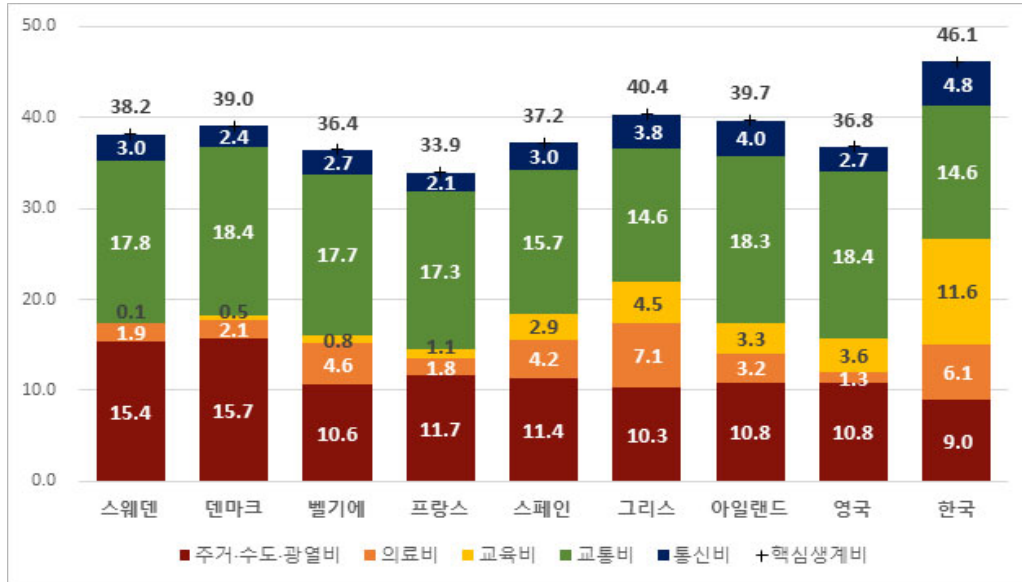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15.4	1.9	0.1	17.8	3.0	38.2
덴마크	15.7	2.1	0.5	18.4	2.4	39.0
벨기에	10.6	4.6	0.8	17.7	2.7	36.4
프랑스	11.7	1.8	1.1	17.3	2.1	33.9
스페인	11.4	4.2	2.9	15.7	3.0	37.2
그리스	10.3	7.1	4.5	14.6	3.8	40.4
아일랜드	10.8	3.2	3.3	18.3	4.0	39.7
영국	10.8	1.3	3.6	18.4	2.7	36.8
한국	9.0	6.1	11.6	14.6	4.8	46.1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6]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1분위의 핵심생계비 비율을 분석할 때 소득을 분모에 놓고 산출하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이 경우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소득 대비 1분위의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비율은 43.5%였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15.1%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다른 나라 저소득층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모두 25%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가벼운 편이었다. 한국 1분위의 교통비가 8.1%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점도 눈에 띈다.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비 부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모든 분위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의 고분위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 등으로 교통비를 지출하는 동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지출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의 저소득

18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층의 의료비(8.4%), 교육비(6.2%), 통신비(5.7%) 부담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7-2-7〉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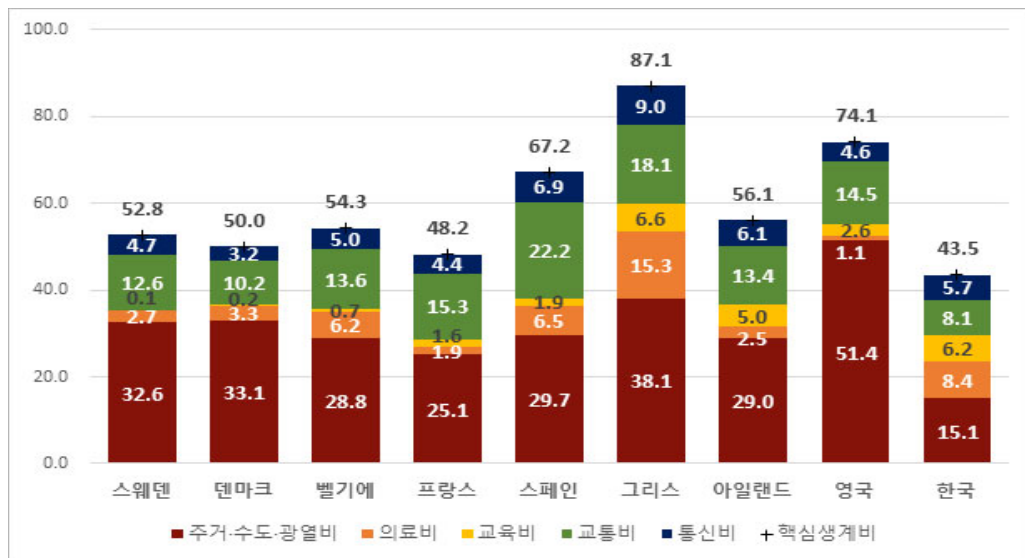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32.6	2.7	0.1	12.6	4.7	52.8
덴마크	33.1	3.3	0.2	10.2	3.2	50.0
벨기에	28.8	6.2	0.7	13.6	5.0	54.3
프랑스	25.1	1.9	1.6	15.3	4.4	48.2
스페인	29.7	6.5	1.9	22.2	6.9	67.2
그리스	38.1	15.3	6.6	18.1	9.0	87.1
아일랜드	29.0	2.5	5.0	13.4	6.1	56.1
영국	51.4	1.1	2.6	14.5	4.6	74.1
한국	15.1	8.4	6.2	8.1	5.7	43.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7]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마지막으로, 5분위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한국은 22.5% 수준으로, 그리스(32.4%)보다는 낮고, 프랑스(18.4%)보다는 높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 밖에 9개 국가의 노인단독가구 및 4인 가구의 분위별 소비지출/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분석했다. 그 내용은 [부록 2]에서 제시했다.

〈표 7-2-8〉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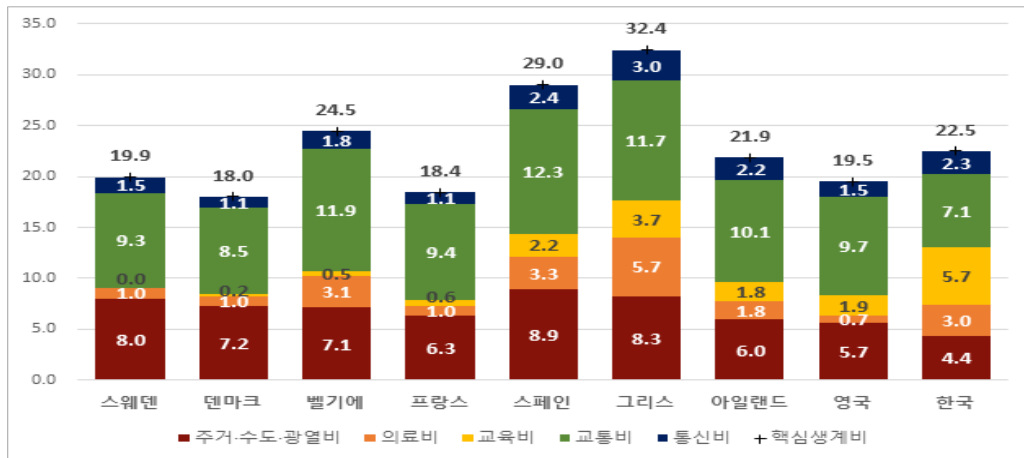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핵심생계비
스웨덴	8.0	1.0	0.0	9.3	1.5	19.9
덴마크	7.2	1.0	0.2	8.5	1.1	18.0
벨기에	7.1	3.1	0.5	11.9	1.8	24.5
프랑스	6.3	1.0	0.6	9.4	1.1	18.4
스페인	8.9	3.3	2.2	12.3	2.4	29.0
그리스	8.3	5.7	3.7	11.7	3.0	32.4
아일랜드	6.0	1.8	1.8	10.1	2.2	21.9
영국	5.7	0.7	1.9	9.7	1.5	19.5
한국	4.4	3.0	5.7	7.1	2.3	22.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그림 7-2-8]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제8장

소비지출 불평등 요인 분해

제1절 소비지출 불평등 분해 방법

제2절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불평등도

제3절 가구유형별 각 비목의 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

제 8 장 소비지출 불평등 요인 분해

현대 소비사회(consumer society)에서 소득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계층 간, 생애주기 간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소비지출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²³⁾ 한편, 복지국가는 직접적인 공적 서비스 제공이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 이러한 계층 간, 생애주기 간 소비의 평탄화(smoothing)를 추구해 왔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모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재, 공공재, 메리트재, 집합재적 성격의 재화일수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대중교통, 사회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도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즉 기여도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⁴⁾ 이 장에서는 8개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소비지출 불평등 수준 및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몫(비중)을 지니분해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3) 물론 소득에 의해서만 소비지출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소비지출의 함수이지 절대적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비지출은 소비성향, 소비욕구와 필요, 가구 구성, 자산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4) 복지국가의 현금성 지원-사회수당, 사회보장급여, 현금성 공공부조 급여 등-은 소비지출 불평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복지국가의 현물성 급여나 서비스는 소득 불평등을 통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상(像)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소비지출 불평등을 모두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소비지출 불평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절 소비지출 불평등 분해 방법²⁵⁾

각 소비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친 영향, 즉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러만과 이차키(Lerman & Yitzhaki, 1985)의 공변량방법을 이용한 지니계수 분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총소비지출 지니계수를 각 비목의 상대적 비중, 지니계수, 지니상관계수로 분해함으로써 특정 비목의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지니계수 분해 공식은 아래와 같다.

$$G = \sum_{k=1}^K \left[\frac{\text{cov}(x_k, F)}{\text{cov}(x_k, F_k)} \cdot \frac{2\text{cov}(x_k, F_k)}{m_k} \cdot \frac{m_k}{m} \right] = \sum_{k=1}^K R_k G_k S_k$$

여기에서, R_k 는 비목 k의 순위와 총소비지출 순위 간 지니상관계수, G_k 는 비목 k의 상대 지니계수, 즉 집중지수이며, S_k 는 비목 k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Lerman & Yitzhaki, 1984). 예컨대 교육비가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기여하는 정도를 C_e 라고 할 때 C_e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C_e = R_e \times G_e \times S_e$$

여기에서, R_e 는 총소비지출과 교육비와의 순위상관관계(지니상관계수)를 나타내며, G_e 는 교육비의 지니계수, 그리고 S_e 는 교육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즉 교육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25) 지니분해 방법에 대해서는 여유진(2002), 여유진 외(2015, pp.285-286)을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미치는 기여도(C_e)는 교육비의 지니계수(G_e)에 교육비와 총소비지출 간의 지니상관계수(R_e), 그리고 교육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S_e)을 곱한 값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12개 소비지출 비목별로 해당 비목의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다. 12개 비목의 기여도를 더하면 총소비지출의 지니계수와 동일한 값이 산출된다. 요컨대 총소비지출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ext{총소비지출 지니계수} = C_f + C_a + C_c + C_h + C_n + C_m + C_t + C_o + C_r + C_e + C_u + C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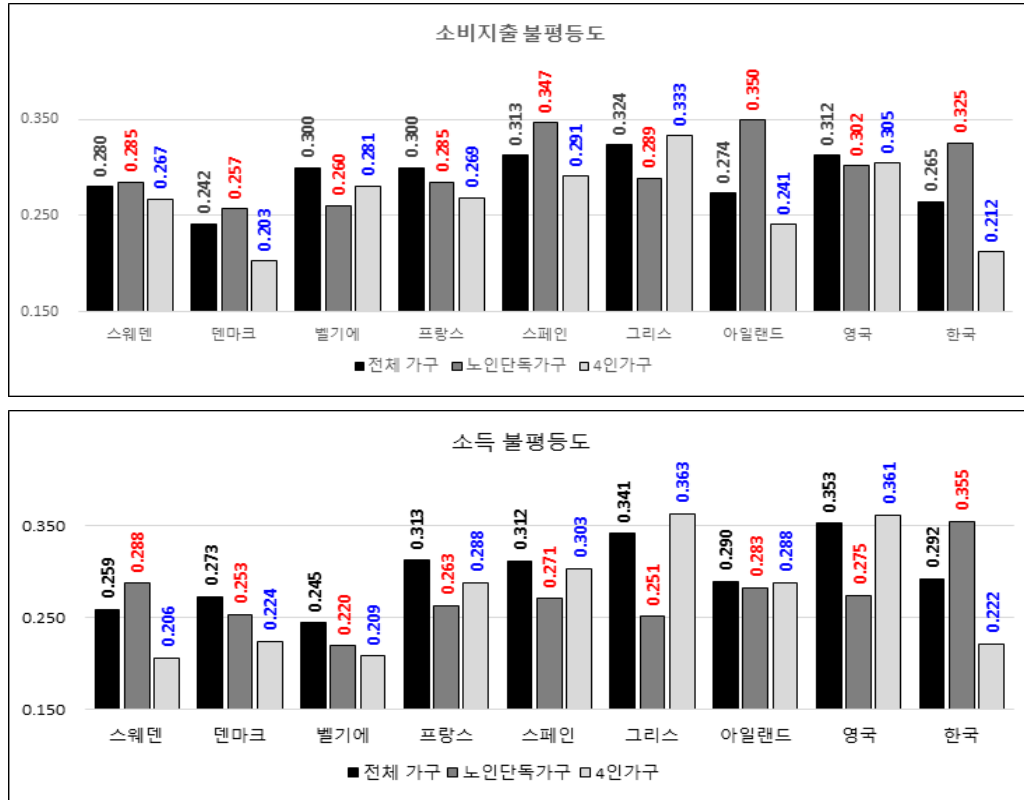
(C_f 식료품, C_a 주류 및 담배, C_c 피복 및 신발, C_h 주거 및 수도광열, C_n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C_m 은 보건, C_t 는 교통, C_o 는 통신, C_r 은 오락문화, C_e 는 교육, C_u 는 음식 및 숙박, C_s 는 기타 소비지출의 지니 기여도)

제2절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불평등도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 즉 지니분해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도와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그림 8-2-1]과 [그림 8-2-2]에서 제시했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지니계수는 덴마크(0.242)에서 가장 낮고, 한국(0.265), 아일랜드(0.274), 스웨덴(0.280)이 그 뒤를 이었다. 유럽대륙 복지국가 2개국인 프랑스와 벨기에는 공히 0.3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를 보였다. 남유럽 2개국과 영국은 소비지출 불평등도가 0.3을 초과하여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를 보였으며, 특히 그리스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0.324로 비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도를 기록했다.

[그림 8-2-1] 소비지출과 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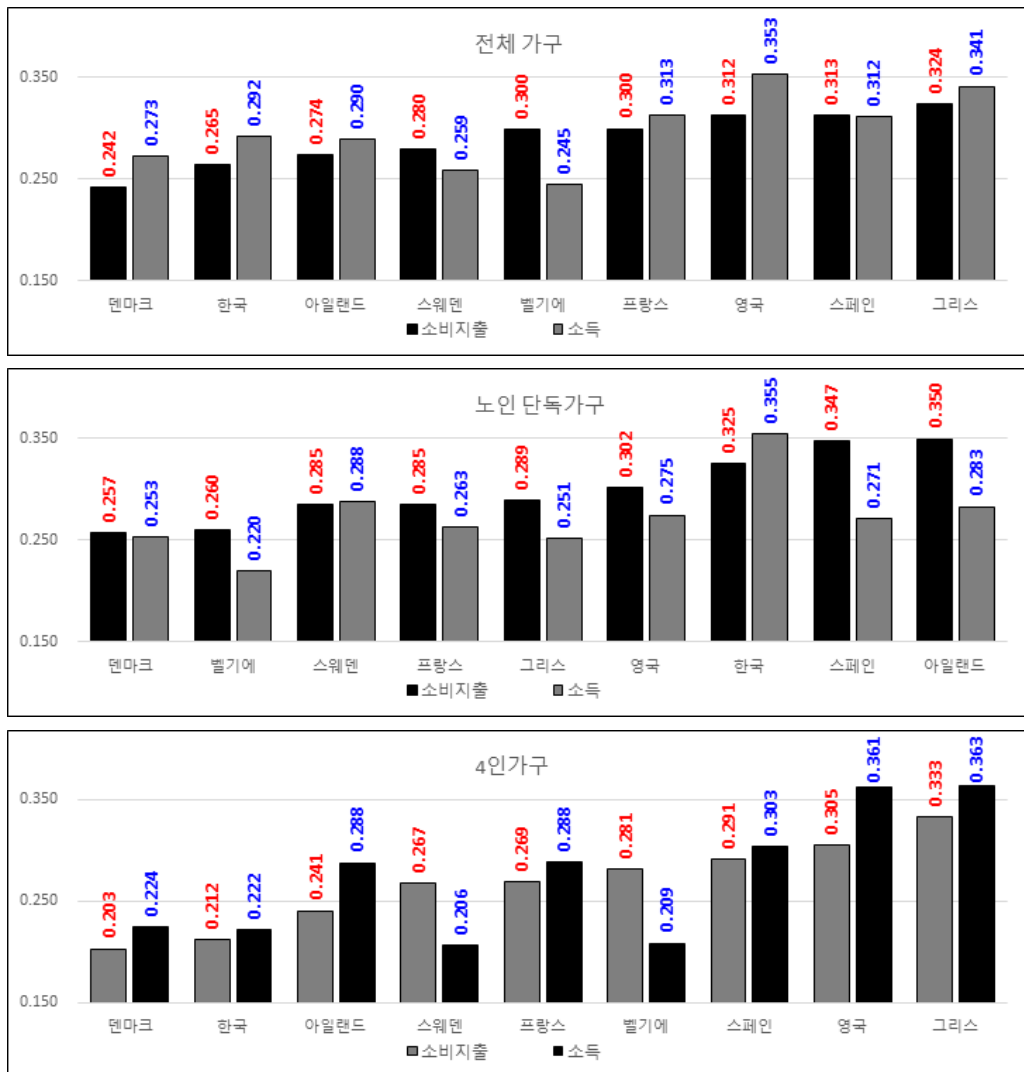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한편, 전체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벨기에(0.245)에서 가장 낮았고, 노르딕 2개국인 스웨덴(0.259)과 덴마크(0.273)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0.292로 비교 대상국 중 불평등도가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²⁶⁾ 그리스(0.341)와 영국(0.353)은 소비지출에 이어 소득 불평등도도 비교 대상국 중에서 높은 불평등도를 보였다. 대체로 전체 가구 소비지출과 소득 불평

26)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빈곤율, 불평등도 등 전반적인 분배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2로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높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vw_cd=MT_ZTITLE&list_id=C2_1_4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1. 11. 7. 인출).

등도는 노르딕, 유럽대륙, 영어권과 남유럽 복지국가의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낮은 편에 속했고, 소득 불평등도는 중간 정도의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한 가계동향조사에서의 분배지표가 최근 국가 공식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8-2-2] 가구유형별 소득지출 및 소득 기준 불평등도 순위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노인단독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은 덴마크(0.257), 벨기에(0.260), 스웨덴(0.285), 프랑스(0.285)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불평등도를 보였던 그리스(0.289)와 영국(0.302)은 노인의 소비지출 불평등도에서는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전체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를 보였던 한국(0.325), 스페인(0.347), 아일랜드(0.350)는 높은 불평등도를 기록했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은 벨기에(0.220)에서 가장 평등했고, 이어서 그리스(0.251), 덴마크(0.253), 프랑스(0.263), 스페인(0.271), 영국(0.275), 아일랜드(0.283), 스웨덴(0.288)의 순이었다. 스웨덴의 경우 의외로 노인 소득불평등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개 유럽 국가에서 노인단독가구 소득 불평등도는 모두 0.3을 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노인단독가구 소비지출 불평등도가 0.355로 비교 대상 9개국 중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0.3이 넘는 유일한 나라였다. 한국에서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소득 불평등도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치 않다.²⁷⁾ 한국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미성숙하였을 뿐 아니라 공적 연금의 수준이 낮고 사각지대가 넓다. 반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준이 비교적 높고, 노후에도 수입을 유지하는 자영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노후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²⁸⁾

최근까지도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다루어지는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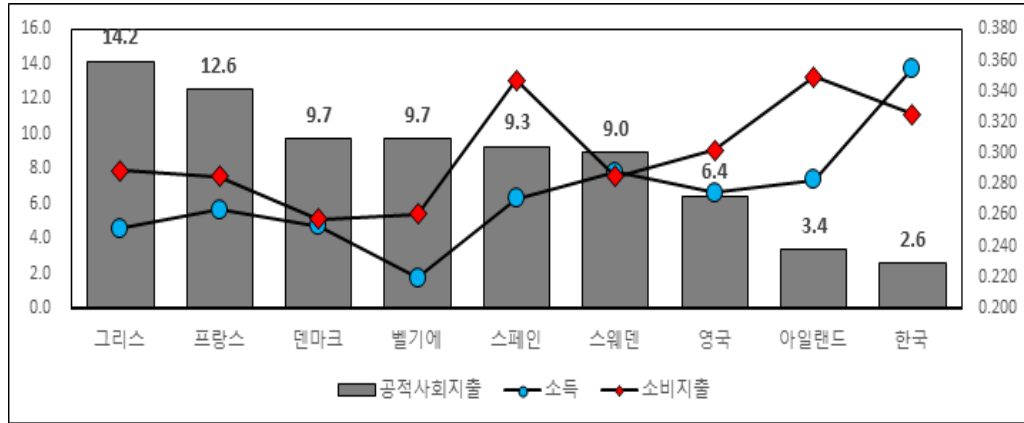
27) 2015년 기준 전체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했을 때 0.427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빈곤율은 43.2%였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6&vw_cd=MT_ZTITLE&list_id=C2_1_4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1. 11. 7. 인출).

28)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과 불평등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유진, 남찬섭, 조한나(2018)의 5장을 참조하라.

된 4인 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덴마크(0.203)에서 가장 낮았고 그 뒤를 한국(0.212)이 이었다. 소비지출 불평등도가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0.333)와 영국(0.305)이었다. 4인 가구 소득 불평등도는 스웨덴(0.206)에서 가장 낮았으며, 벨기에(0.209)와 한국(0.222)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스(0.363)와 영국(0.361)은 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에서도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한국의 전체 가구 소비지출과 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비교 대상 9개국 중 중간 수준이었다. 노인단독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세 번째로 높았고, 소득 불평등도는 비교 대상국들과 상당한 격차가 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4인 가구 소득과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공히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이는 그리스와 거의 대척점을 이루는 결과이다. 근로연령계층의 불평등도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불평등도, 가구원 중 취업자 수, 가구 구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비해 퇴직연령계층의 불평등도는 공적 연금 등의 공적 사회지출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의 2015년 기준 노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4.2%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해당 연도 한국의 노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은 GDP의 2.6%에 불과했다. 물론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불평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8-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의 노인에 대한 공적사회지출은 GDP 대비 9.3%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지출 불평등도 역시 높다. 이러한 예외 사례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적인 자원의 투입 규모 자체가 노인 빈곤은 물론이고 불평등도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8-2-3] 참조).

[그림 8-2-3] 노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 수준과 노인단독가구 소득 지니계수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공적 사회지출은 2015년 기준 통계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OECD.Stat(2021. 11. 7. 인출).

제3절 가구유형별 각 비목의 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²⁹⁾

소비지출은 생애주기별 또는 가구유형별로 일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독립한 미혼 청년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이, 아동이 있는 가구는 교육비, 외식비, 레저 비용 등에 대한 지출이, 노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분석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인구 구조나 가구유형 분포를 간과하면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분석에서는 전체 가구와 함께,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니분해는 해당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비목의 지니계수, 해당 비

29) 지니분해에서 가중치 부여방식의 차이로 인해 총지출에서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의 산출치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므로 여기에서는 지니분해 결과치를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목과 총소비지출 간의 상관계수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가지는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니분해 결과 각 비목의 상대적·절대적 기여율이다.³⁰⁾

1. 전체 가구

가. 비목별 비중

[그림 8-3-1]은 9개국에서 12개 비목 각각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보고서에서 중점을 둔 핵심 지출 비목을 중심으로 차이를 살펴보면,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의 국가간 비중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수도·광열비의 경우 노르딕 2개 국가인 덴마크(21.4%)와 스웨덴(19.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영국도 1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서 주거·수도·광열비는 1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11.2%로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임대 시장에서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전세-최근에는 반전세 포함-라는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냉난방비 등 연료비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공동주택-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차이와 긴 겨울로 인해 노르딕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냉난방비의 소모가 많은 것도 주거·수도·광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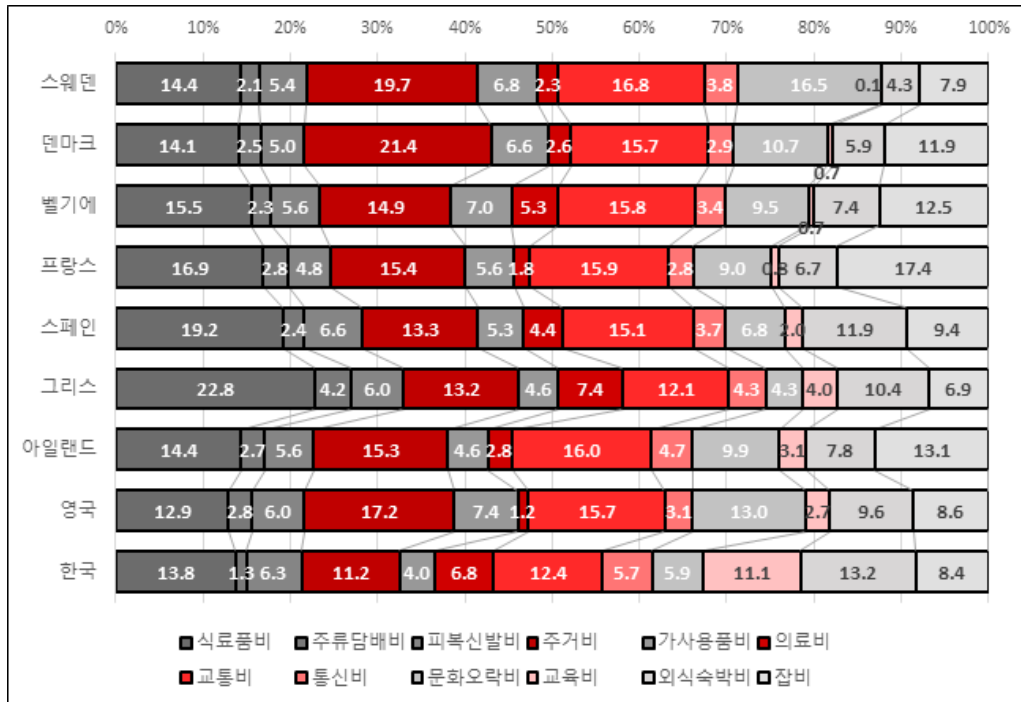
30) 국가별 지니분해 결과는 [부록 4]로 제시하였다.

여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3장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비교 대상 국가들의 교통·통신비 비중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6~20%였다.

[그림 8-3-1]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의료비 비중의 경우, 복지국가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서비스(NHS)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이 1.2%로 가장 낮았고 프랑스(1.8%), 스웨덴(2.3%), 덴마크(2.6%), 아일랜드(2.8%)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6.8%), 그리스(7.4%)에서 의료비가 가구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도 공적 의

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지만,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구 지출이 높다.³¹⁾ 또한 민간 의료 공급자의 비중과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³²⁾ 공급자·소비자 유인 의료 이용이 공공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비 비중 역시 국가 간 편차가 상당히 큰 비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르딕 복지국가와 유럽대륙 복지국가에서 교육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0에 가까운 낮은 수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은 11.1%로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다음으로 높은 그리스(4.0%)와도 큰 격차를 보였다.

나. 상대적·절대적 기여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보고서에서 핵심생계비로 정한 비목들 중 교육비와 의료비, 통신비 비중이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국가별 각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도(지니계수)에서 각 비목의 상대적·절대적 기여도에도 반영된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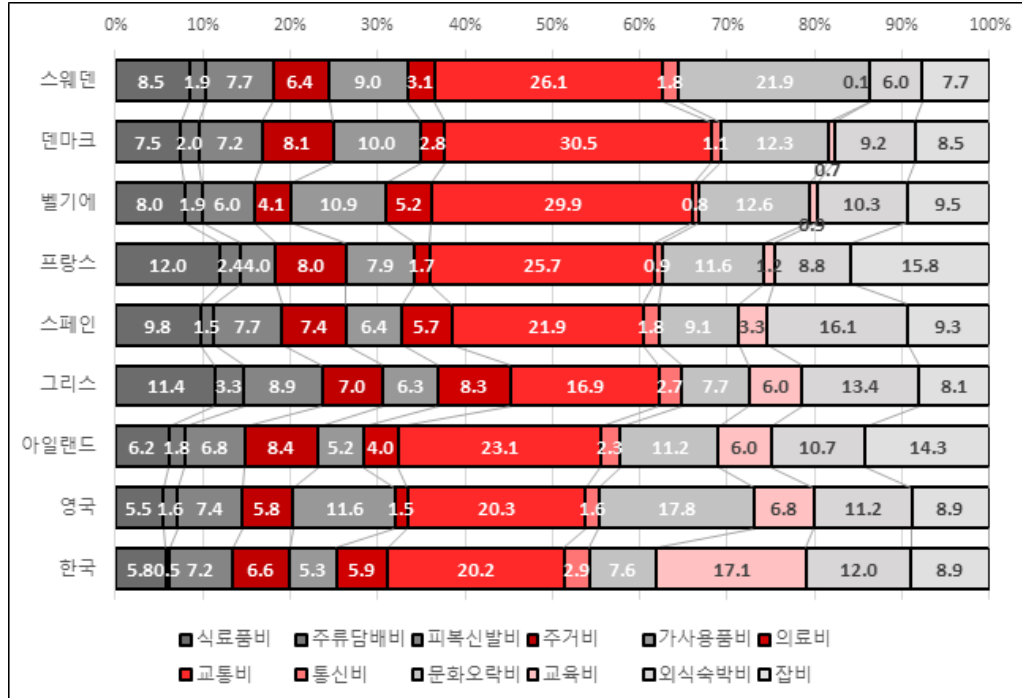
31) 한국의 본인부담금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36.8%로 OECD 35개국 평균인 2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OECD, 2017a).

32)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OECD 공식 통계상 66.8%에 이른다. 국민 약 3명 중 1명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의미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스웨덴 0.1%, 덴마크 36.5%, 벨기에 81.6%, 프랑스 95.5%, 스페인 15.7%, 그리스 11.5%, 아일랜드 45.4%, 영국 10.6%이다(OECD, 2017b).

33) 상대적 기여도란 총 지니계수를 100%로 환산했을 때 각 비목이 총 지니계수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절대적 기여도란 총 지니계수의 값에서 각 비목의 몫을 의미한다. 전자는 지니계수의 국가별 차이가 사장되는 단점이 있지만 각 비목의 비중을 동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후자는 국가별 지니계수의 차이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두 지표 모두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8-3-2]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 (전체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우선 핵심생계비 비목 중에서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비목은 비교 대상 9개국 모두에서 교통비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덴마크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0.5%를 설명해서,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벨기에(29.9%), 스웨덴(26.1%)의 순이었다. 반면 그리스에서는 교통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16.9%만을 설명함으로써 낮은 기여도를 보였다. 한국은 20.2%로 교통비가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의 약 5분의 1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지니분해의 다른 한 요소인 총소비지출과의 지니상관계수 또한 0.6~0.8대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핵심생계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교통비는 성격상 상당 부분 계층과 취향의 차이를 나타내는 ‘제공재’이면서 선택재에 가까운

비목이다. 다른 핵심생계비 비목에 비해서는 교통비가 불평등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당한(unjust)' 것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고소득자가 비싼 승용차를 타고 저소득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서-접근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한- 그것이 부정의한 사회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비교 대상국 중 많은 나라에서 교통비 다음으로 불평등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생계비의 항목은 주거·수도·광열비이다. 주거·수도·광열비는 대체로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의 6~8% 내외를 설명하고 있다.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아일랜드(8.4%), 덴마크(8.1%), 프랑스(8.0%) 등에서 8%대이고, 그다음은 스페인(7.4%), 그리스(7.0%대)로 7%대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은 나라는 벨기에(4.1%)와 영국(5.8%)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6.6%로 중간 수준이다. 주거비는 다른 재화와 달리 '역계층적'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주택 자체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이를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주로 상류층 자가 소유자-과 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사용권만을 그때그때 구매해야 하는 사람-주로 저소득층 임대인- 간에 주거비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거의 효용(utility)을 감안고려하여 전가임대료(imputed rent) 방식으로 자가를 월세로 전환하여 주거비를 산출하여 산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기여율은 낮게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주거·수도·광열비 자체의 지니계수와 총소비지출과의 지니상관계수가 대부분 나라에서 0.2~0.4대에 불과해서 다른 지출 비목에 비해서는 낮다. 예컨대, 주거·수도·광열비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영국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와

총소비지출 간의 지니상관계수가 0.235에 불과한데, 이는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은 국가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낮은 영국은 1.5%에 불과한 데 비해, 기여도가 가장 높은 그리스는 8.3%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의료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5.9%로 높은 편에 속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적 개입이 강하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어느 정도 평등이 보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이면서 메리트재적인 성격이 강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잘 아다시피 본인부담률이 높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민간에 의해 제공되며 민간보험이 발달해 있는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가 이뤄지면서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르딕 국가와 유럽대륙 국가에서 교육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해 매우 낮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나라에서 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서 교육은 집합적 재화이며 공공재, 메리트재로 인정되고 있고 대부분 공적 지출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가구의 교육비 부담 수준은 매우 낮다. 남유럽의 스페인, 그리스와 영어권의 아일랜드, 영국은 이들 나라보다는 교육비 부담이 크고 특히 의무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에서 개인 부담액이 상당하므로 노르딕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에 비해서는 교육비의 불평등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3.3~6.8% 수준으로 높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소비지출 불평등의 17.1%를 설명하며, 12개 비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더구나 초저출산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화 이래로 한국에서 교육은 계층 유지 혹은 계층 상승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대학 정원 자율화와 학교 서열화, 그리고 사교육 금지조치의 해제, 그리고 최근 들어 근로시장 이중구조화로 교육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2. 노인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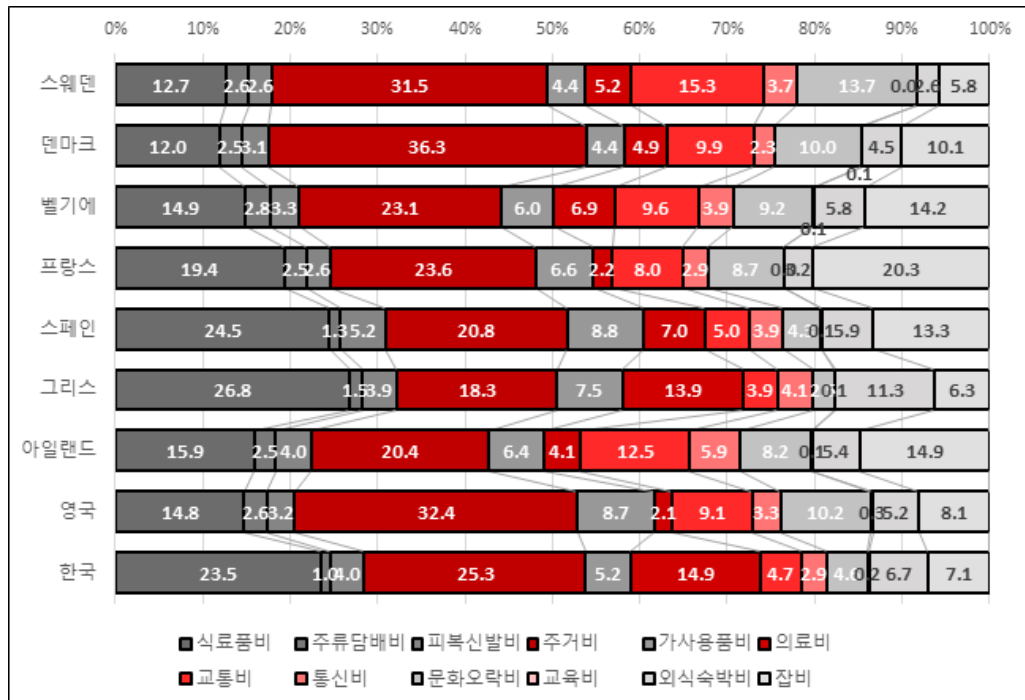
가. 비목별 비중

노인단독가구의 지출 패턴은 전체 가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주거·수도·광열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덴마크(36.3%), 스웨덴(31.5%), 영국(32.4%)의 순으로 높고, 3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18.3%)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에서도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20%대를 보였다. 한국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25.3%로 비교 대상국들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노인단독가구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 이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 기존 주택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택 유지·관리비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노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신체 특성상 냉난방비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빈곤율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은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주거·수도·광열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8-3-3]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노인단독가구의 지출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특징은 의료비 비중이 다른 가구유형보다 높다는 점이다. 의료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14.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그리스 13.9%, 스페인 7.0%, 벨기에 6.9%의 순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노인단독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율도 각각 2.1%와 2.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거·수도·광열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생계비의 비중은 경제활동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상대적·절대적 기여도

노인단독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모든 비교대상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몫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12개 비목 중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26.6%), 영국(25.3%), 덴마크(23.1%) 정도였다. 나머지 나라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9.9%(스웨덴)~14.9%(스페인)로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니분해를 구성하는 나머지 두 가지 요소-해당 비목의 지니계수와 총소비지출과의 지니상관계수-가 다른 비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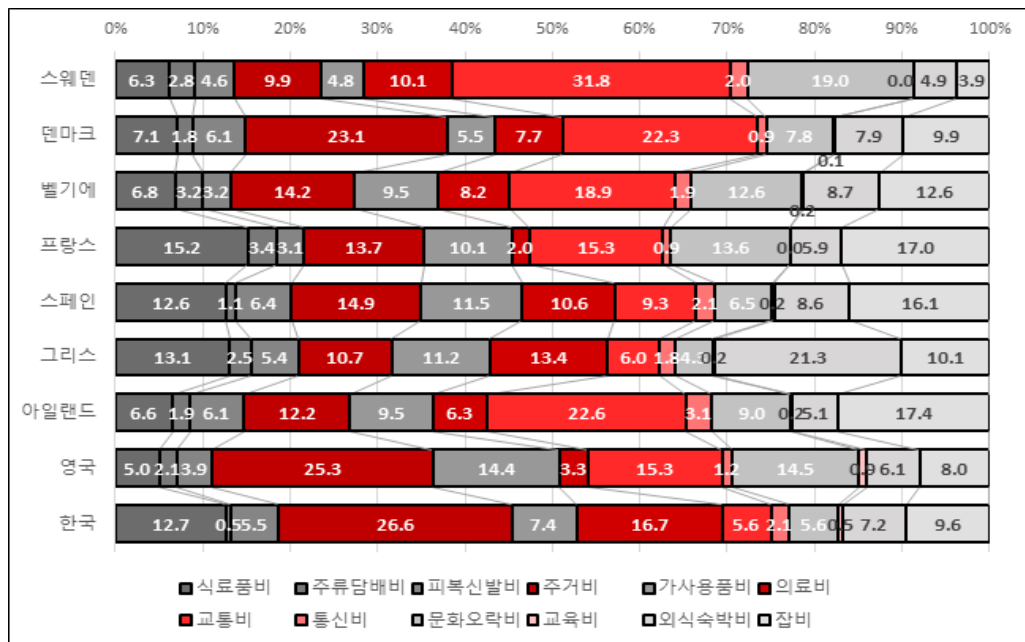
노인단독가구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편차가 매우 큰 비목은 교통비였다. 교통비는 스웨덴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1.8%를 설명할 정도로 높았으며, 덴마크에서도 22.3%로 비교적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한국과 그리스에서 교통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각각 5.6%와 6.0%에 불과했다. 한국의 경우 노인에게 대중교통비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불평등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 역시 국가 간 편차가 비교적 컸다. 의료비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의료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매우 낮은 영국(3.3%)과 프랑스(2.0%)였다. 반면, 남

유럽의 두 나라인 스페인(10.6%)과 그리스(13.4%)에서 의료비의 총소비 지출 불평등 기여율이 10%를 넘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의료비의 총소비지출 기여분은 16.7%로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고, 12개 비목 중에서도 두 번째 높은 비목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높은 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자부담율과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8-3-4]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3. 부부와 두 자녀 가구(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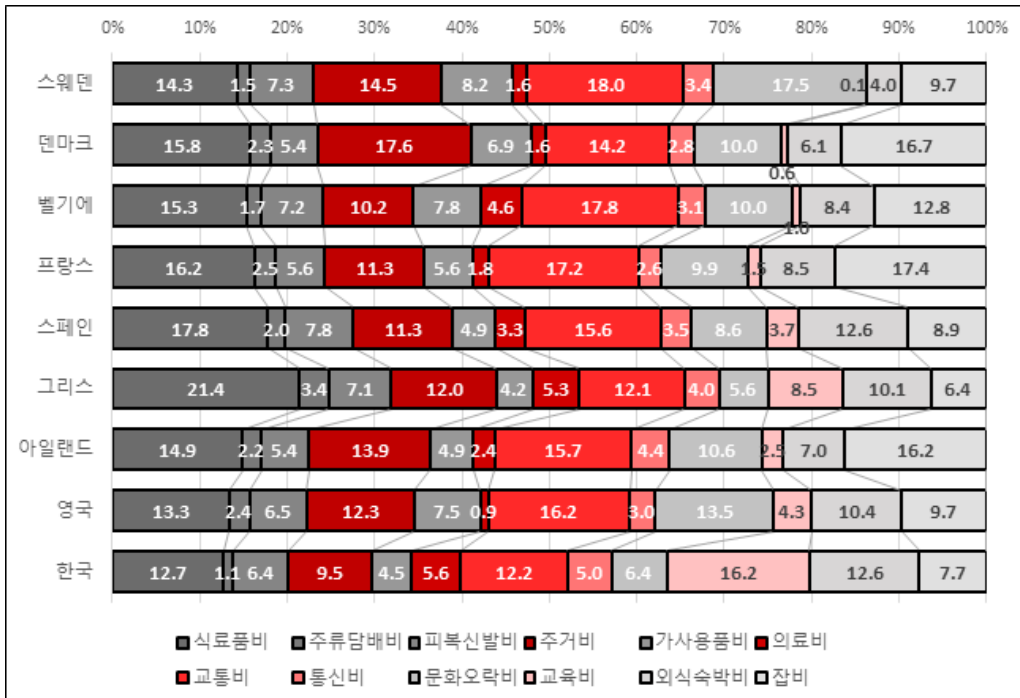
가. 비목별 비중

마지막으로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소비 패턴은-전형적인 가구답게-전체 가구의 소비 패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4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은 전체 가구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고, 교통비 비중은 약간 더 높았다. 한국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9.5%)이고, 교육비 비중(16.2%)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석 결과이다.

[그림 8-3-5]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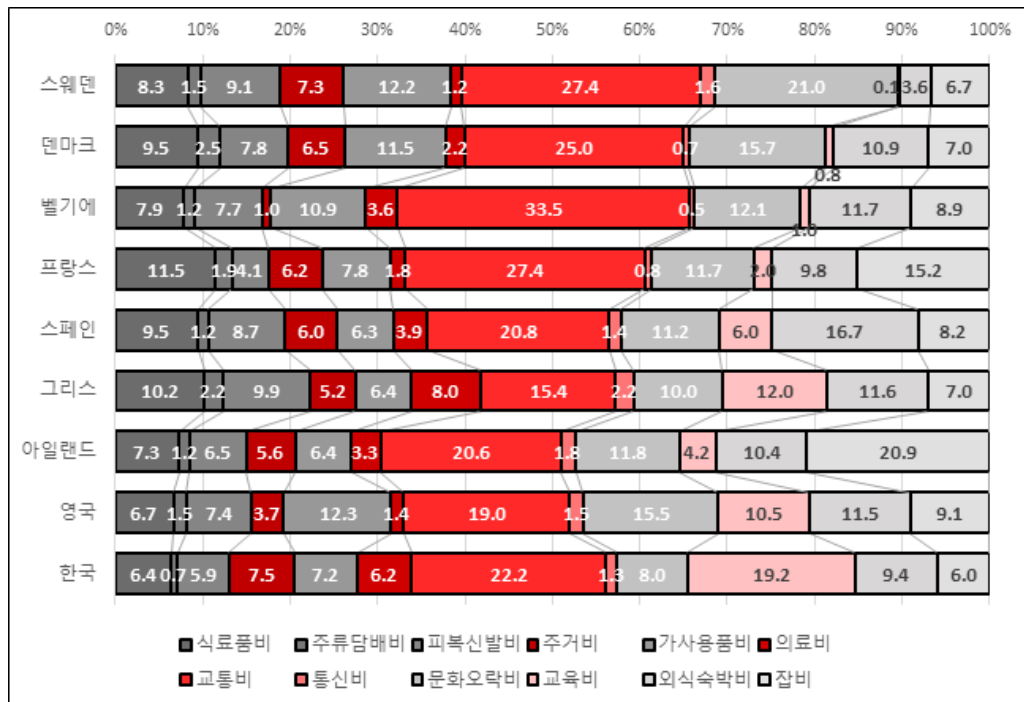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나. 상대적·절대적 기여도

지니분해 결과, 모든 국가에서 소비지출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목은 교통비로 나타났다. 특히, 벨기에에서 교통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는 33.5%에 이르렀다. 반면 그리스(15.4%)에서 교통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경우 교통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22.2%로 비교 대상국 중에서 중간 수준이었다.

[그림 8-3-6]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도를 설명하는 비중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5~7%대 수준이었다. 영국은 유독 낮아 주거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7%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주거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7.5%로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비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교육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국가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에서 교육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한국이 19.2%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 노르딕 국가에서는 여전히 0에 가까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국에 이어 그리스와 영국에서 교육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가 각각 12.0%와 10.5%로 높게 나타났다.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제 9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 및 격차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 기존 복지제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재분배 제도를 제안하는 등 복지국가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소득보장’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가계의 지출 경감’이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계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가계의 지출 감소 정책은 기존의 의료, 주거, 교육 등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 더해서, 생계 유지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통과 통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의 가계지출 경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이른바 현금 복지에 대한 사회 일부의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 의료, 교통, 통신, 교육 영역에서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편적 성격을 띠며 사회 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료나 교통 등의 서비스는 대상은 보편적이지만, 실질적인 수요자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가계의 지출 감소 정책이 상품 혹은 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해 이뤄진다면,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역들에 대한 적절한 공적 규제, 지원, 전달 등은 이른바 ‘공동구매’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계의 소득이 일정 수준 보장되어도 지

출 분야의 공공화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계가 비싼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득보장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가계의 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복지국가들과의 가계지출 수준에 대해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지금까지 가계의 지출 수준을 비목별로 국제 비교한 연구는 희소했다. 김기태 외(2019)는 한국과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의 의료, 주거, 교육 영역에 대한 지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값싼 주거 부담 및 주거 관련 부채 상환 부담 수준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 수준을 낮춘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이 연구는 일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패널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으로부터 유럽 28개 국가 가계의 지출항목을 담은 유럽가구지출설문(Household Budget Survey) 자료를 확보하고, 한국의 가계동향조사의 비목과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두 조사 모두 가계지출의 항목을 정하는 기준으로 국제기준인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를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2020). 따라서 한국과 다른 유럽 국가들과 수평적인 비교가 가능했다.

두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과 유럽의 네 가지 체제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를 각각 두 개씩 골라서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유럽의 여덟 나라는 각각 스웨덴과 덴마크(북유럽 모델), 프랑스와 벨기에(보수주의 모델), 영국과 아일랜드(자유주의 모델), 스페인과 그리스(남유럽 모델)였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해당 국가 통계청의 비협조, 자료의 일부 변수 값 부재 등의 이유로 누락됐다.

Esping-Andersen(1990) 등이 제안한 복지국가 유형화에 따르면, 북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의 형평한 분배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공공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북유럽의 복지국가에서 가계지출의 수준도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의료 및 교육 시장 등에서 공공화 수준이 더딘 한국에서는 그 부담이 가계에 가중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한국과 8개국의 가계지출 수준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9개국의 자료를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주거·수도·광열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의 비율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5개 비목별 지출 비용을 합한 ‘핵심생계비’를 다시 총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비율로 산출해서 비교했다. 다섯 개 비목을 ‘핵심생계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들 영역이 가계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 항목이면서 동시에 사회정책의 정책 개입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식료품 관련 지출은 제외했다.

비교의 대상은 9개국의 전체 가구, 노인단독가구, 4인 가구 및 5분위 집단이었다. 비교 대상 시기는 2015년이었다. 시기를 다소 오래된 과거로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유럽연합의 HBS 자료의 최신판 기준 연도가 2015년이다. 둘째, 가계동향에서 지출 및 소득 자료가 모인 연간 자료는 최근 연도에는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한국과 유럽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 수준을 비교했다. 주거·수도·광열비는 분석 대상이 된 5개 비목 가운데 가계의 지출 부담이 모든 나라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은 매우 낮았는데, 소비지출액 대비 11.2%였다. 한국 다음으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로 13.2% 수준이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은 대체로 15% 이상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을 나타냈다. 한국의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는 25.3%로, 그리스(18.3%)보다는 높고, 덴마

크(36.3%)보다는 낮았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9.5%로 가장 낮았다. 벨기에가 그다음으로 낮은 10.2%였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은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 스웨덴과 덴마크가 소비지출 대비 각각 19.7%, 21.4%였다.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분모를 소득으로 바꾸어서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부담을 분석해도, 한국은 전체 가구 기준 6.8%로 가장 낮았다. 아일랜드가 10.8%로 한국 다음으로 낮은 편이었다.

9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을 소득 기준 5분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한국은 모든 분위에 걸쳐서 유럽 국가들보다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이 낮았고, 분위에 따른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수준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를테면, 한국의 1분위는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17.1%로 한국의 5분위의 9.0%보다는 높았지만, 비교 대상인 8개국의 1분위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덴마크 33.2%~아일랜드 17.9%)보다 매우 낮았다.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부담 비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낮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전세제도의 영향으로, 한국의 세입자들은 월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다. 둘째, 한국의 집값 수준은 다른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측정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중간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임대료 수준은 집값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 수준은 낮은 편이다. 셋째, 주거·수도·광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의 수준은,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넷째, 한국의 주된 주거·수도·광열 공간인 아파트는 집수리 및 관리 비용이 매우 적게 들며, 이웃 간

단열 및 냉·난방 효과가 매우 크다. 이 같은 요인들이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장에서는 유럽연합의 HBS 자료와 한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국가별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했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6.8%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의료비 지출 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7.4%)였다. 노인단독가구(14.9%)나 4인 가구(5.6%)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은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을 분석할 때 소득을 분모에 두면, 한국은 4.1%로 그리스(7.6%), 벨기에(4.4%) 스페인(4.3%)보다 낮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평균 소득이 평균 소비지출보다 낮아서, 소득을 분모에 둘 경우에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이 높아졌다. 한국의 노인단독가구(10.5%)나 4인 가구(3.7%)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이 높았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에서 한국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 전반적으로 모든 분위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비교 대상인 대부분 국가의 대부분의 분위에서 나타나는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은 한국의 수치(6.1~9.4%)를 밑돌았다. 그리스의 일부 분위에서만 예외가 발견됐다. 둘째, 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 부담 수준의 격차가 한국에서 크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소득분위가 올라갈수록 의료비 부담 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셋째,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9.4%)이 다른 국가에 견줘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았다. 한국보다 평균 소비지출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은 그리스에서도 1분위의 비율이 7.2%로, 한국보

다는 낮았다.

한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 원인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은 결과, 가계의 직접 부담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가계의 직접부담 비중이 30.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OECD, 2021g).

둘째 원인은 한국인들의 의료 이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년에 17.2회로 OECD 평균(6.8회)의 두 배가 넘는다(OECD, 2021g). 셋째, 한국인의 건강 수준, 특히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한국은 일부 건강 지표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자살 발생 비율은 가장 높다(OECD, 2021g).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의 의료 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가구 소비지출과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 수준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공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분과 순수 사교육비를 합한 금액이다. 분석 결과, 교육비가 전체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1.1%)은 유럽 8개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북유럽 2개국(스웨덴, 덴마크)과 유럽 대륙 2개국(벨기에, 프랑스)은 소비지출의 1% 미만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으며, 남유럽(스페인, 그리스)과 영어권(아일랜드, 영국)도 교육비 지출 비중도 4%를 넘지 않았다. 다만,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에서 그리스는 소비지출의 8.5%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한국(16.2%) 다음으로 높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소득 5분위별 분석 결과에서도 노르딕 2개국과 유럽대륙 2개국의 분

위별 교육비 지출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었다. 모든 분위에서 1% 내외를 교육비로 지출했다. 또한, 1분위를 예외로 할 때, 한국을 포함한 그리스, 영국 등은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고소득층일수록 누적해서 더 많은 비용을 자녀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지출의 10%, 20% 이상을 교육비로 투자하는 가구의 비율은 한국이 각각 39.23%와 19.51%로, 비교 유럽 8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3, 4, 5분위의 과부담 가구 비율이 1, 2분위에 비해 더 높았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 수준이 유독 높은 배경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교육 참여율과 그 비용이 매우 높다. 2019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3.5%, 중학생 71.4%, 고등학생 61.0%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최근까지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둘째, 한국의 대학 입학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률(GDP의 0.94%) 또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이러한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대학 진학률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성과주의 문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6장에서는 유럽 국가와 한국의 소비지출,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을 살펴해보았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은 모든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비교 국가에서 대부분 소비지출 대비 10% 이상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교통비 항목에 대중교통 비용 이외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고소득 가구의 전체 교통비가 저소득 가구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소

비지출 대비 교통비 격차는 크게 나타난다. 자동차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교통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교통수당,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비 지원 등과 함께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 보조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통신비 부담 비교 결과, 비교 국가와 한국의 통신비 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은 한국이 5.7%로 비교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5%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 서비스별 가입률, 이용량, 단말기 가격·교체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은 낮지만, 이용량 증가, 높은 단말기 가격과 짧은 교체 주기가 가계통신비 부담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우 소득 저분위 가구의 통신비 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대상의 요금 감면이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넘어서 사회복지 수단으로 전환되고, 현행 감면제도가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신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성 통화료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등 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통신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온라인 혹은 비대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계층에 대하여 통신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7장에서는 3~6장에서 분석한 주거·수도·광열,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를 ‘핵심생계비’라고 명명하고, 이 지출액이 가계의 소비지출 및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핵심생계비의 소비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한국(47.2%)은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주거·수도·광열비(11.2%)가 다른 나라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게 나왔지만, 교육비(11.1%), 통신비(5.7%)와 의료비(6.8%) 모두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의 교육비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10%p 정도 높은 것이 한국 가계의 지출 부담을 가중했다. 비교 대상인 국가들 가운데서는 덴마크(43.3%)와 스웨덴(42.6%)에서 한국 다음으로 부담 수준이 높았다. 북유럽 국가에서 가계 지출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은 의료비와 교육비들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주거·수도·광열비 부담을 잡는 데는 대부분 한계를 보였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봐도, 한국은 영국과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의 비율이 2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교육비 지출은 거의 없었다. 노인들의 주된 소비 영역은 주거·수도·광열과 의료 및 교통이었다. 소비 지출을 대비해서 보면, 한국 노인단독가구의 지출(48.0%)이 스웨덴(55.7%)과 덴마크(53.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노인단독가구의 핵심생계비 부담 비율이 34.0%로 가장 낮았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이 48.5%가 가장 높았다. 한국 4인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비 부

담 비율이 9.5%로 유일하게 한 자리대 수준이었지만, 교육비가 16.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비는 한국의 ‘밑 빠진 독’이었다.

9개 국가의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소비지출 대비해서 보았을 때, 분위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국가였다.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3.0%p였다. 그리스(0.6%p)에서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난 반면, 영국(13.0%), 벨기에(12.9%)에서 분위별 차이가 컸다.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9.5%), 덴마크(11.2%)에서 1~5분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작지 않았다.

9개 국가의 각 분위의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지출 비율을 보면, 분위에 따른 비율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고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핵심생계비의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그 기울기가 완만하게 유지됐다. 모든 비목에서 분위가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떨어졌지만, 하향세가 다른 국가에 견줘서는 완만했고, 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8장에서는 지니분해를 통해 각 비목의 지출이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분해에 앞서 9개국의 소비지출 불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체 가구 소비지출 불평등도는 0.265로 비교 대상국들 중 덴마크(0.24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두 명의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소비지출 불평등도도 덴마크(0.203) 다음으로 낮은 수준(0.212)을 기록했다. 반면, 노인단독가구의 불평등도는 0.325로 비교 대상국들 중 아일랜드(0.350)와 스페인(0.347)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4인 가구와 대조를 보였다. 즉, 한국은 경제활동기 가구주 가구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노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지니분해 결과, 핵심생계비 비목 중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

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비목은 비교 대상 국가 모두에서 교통비로 나타났다. 교통비는 덴마크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0.5%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0.2%로 교통비가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의 약 5분의 1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다음으로 불평등에 크게 기여하는 항목은 주거·수도·광열비이다. 주거·수도·광열비는 대체로 전체 소비지출 불평등의 6~8% 내외를 설명한다.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아일랜드(8.4%), 덴마크(8.1%), 프랑스(8.0%) 등에서 8%대, 스페인(7.4%), 그리스(7.0%) 등에서 7%대이다. 우리나라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6.6%로 중간 수준이다. 의료비의 경우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은 국가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낮은 영국은 1.5%에 불과한 데 비해, 기여도가 가장 높은 그리스는 8.3%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의료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비중은 5.9%로 높은 편에 속했다. 교육비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불평등 기여도가 3~7% 내외로 극히 낮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소비지출 불평등의 17.1%를 설명하며, 12개 비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단독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모든 비교 대상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기여하는 몫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12개 비목 중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26.6%), 영국(25.3%), 덴마크(23.1%) 정도였다. 나머지 나라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9.9%(스웨덴)~14.9%(스페인)로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노인단독가구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

편차가 매우 큰 비목은 교통비였다. 교통비는 스웨덴에서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1.8%를 설명했으나, 한국에서 교통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5.6%에 불과했다. 또, 한국에서 의료비의 총소비지출 기여분은 16.7%로 비교 대상국들 중에서 가장 높았고, 12개 비목 중에서도 두 번째 높은 비목으로 나타났다.

지니분해 결과, 모든 국가에서 소비지출 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목은 교통비로 나타났다. 특히, 벨기에에서 교통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는 33.5%에 이르렀다. 반면 그리스(15.4%)에서 교통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경우 교통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22.2%로 비교 대상국 중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도를 설명하는 비중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5~7%대 수준이었다. 영국은 유독 낮아 주거·수도·광열비가 총소비지출 불평등의 3.7%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 주거·수도·광열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7.5%로 미미한 차이이지만 비교 대상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비의 불평등 기여도는 한국에서 19.2%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 노르딕 국가에서는 여전히 0에 가까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국에 이어 그리스와 영국에서 교육비의 총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가 각각 12.0%와 10.5%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다섯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유럽연합의 HBS 자료는 2015년 기준으로,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6년 전의 자료이다. 더욱이 영국이 경우, 2010년 기준 자료를 활용했다. 현재 가용한 자료를 쓰다 보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장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 시점에서 6년 전의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지난 6

년 사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적인 실험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이 있었다. 이 같은 변화의 양상 및 결과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분석에서 활용한 소득은 실제 가용한 경상소득 혹은 가처분소득이 아닌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소득값이다. 2장에서 설명하였지만 HBS에 제공된 소득 범위에 대해 유럽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각 국가에서는 연간 기준의 소득값을 제공하며, 여기에 비경상소득이 포함되었음을 확인됐다. 참고로,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연구진이 보낸 문의 사항에 대한 답신에서 복권과 같은 비경상소득도 소득변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2장 2절 참고). HBS의 경우 소비 관련 자료를 주로 담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는 경상소득나 가처분소득 같은 일반적인 소득 변수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득 대비 각 지출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 그 비중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각국의 지출 부담을 비교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셋째, 주거비 부담 뒤편에서 주거 관련 금융 비용, 즉 주거 관련 부채 원금 상환금 및 이자 지불 부담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 한국의 가계빚 규모가 지난 2021년 1/4분기 기준 1,765조 원에 이르렀고, 그 규모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하면, 가계 부채가 한국 가계에 가하는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다(한국은행, 2021). 특히, 한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4.2%로 국제금융협회(IIF)가 조사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이승호, 2021.11.16.). 물론, 김기태 외 (2019) 연구에서 한국의 가구 관련 부채의 원금 및 이자비 상환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3.7%로, 비교 대상이 된 스웨덴(4.7%), 독일(7.2%), 일본(7.8%), 미국(8.0%)보다 비교적 낮게 나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 한

국의 부채 비용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관련 부채로 조사 대상이 한정됐다는 점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는 불가피하게 추후 과제로 남긴다.

넷째, 이 보고서가 가계의 핵심생계비 분석을 위해서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을 분석했지만, 세부 비목에 대한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이를테면, 교통의 경우 세부 비목으로 자동차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교통 서비스 등 세 가지가 있고, 교통 서비스는 다시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 교통 관련 서비스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부록 1〉 참고). 실제로, 6장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부유한 5분위에서는 자동차 구입으로 인한 가계지출이 높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1분위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세부 비목의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세부 비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보고서는 정부를 통해서 빈곤층 혹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및 바우처 급여를 분석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자료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국가별 결핍값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다수의 복지국가에서는 가구의 재산 혹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수당(housing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다(OECD, 2021j). 제도의 이름은 국가별로 영국의 주거급여(housing benefit), 뉴질랜드의 임대료 지원(rent supplement), 미국의 주택 바우처(housing vouchers)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주거수당은 영국에서 GDP의 1.4%를 차지하고, 핀란드가 0.9%, 독일, 덴마크, 프랑스가 각각 0.7% 수준이다(OECD, 2021j).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해당 국가들에서 가계의 주거비 부담률 수치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여섯째, 이 연구는 가계의 지출영역에 대한 양적인 비교에 머물렀다. 그래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즉, 똑같이 가계지출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서비스의 질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이유 가운데는 주거 환경의 질이 낮은 점이 원인일 수도 있다. 주거 영역에서 가계의 지출 부담이 낮다고 해서, 관련한 가계의 생활 수준이 높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관련 서비스의 질까지 고려해 접근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그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이 부분 역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제2절 정책 제언

한국의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늘어나는 월세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전통적 정책인 주거비 지원사업과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의 지속적 공급이 있다. 한국의 주거비 지원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급여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2015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생계급여의 일환으로 여겨져 실질적 주거급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5년에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면서 별도의 주거급여 기준과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주거급여 본연의 성격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로,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임대료 기준 역시 시장임대료를 충분히 보완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는 자

체 사업을 통해 2002년에 임대료 보조사업을 수행하다 2010년 이후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박은철, 진화연, 2021). 외국에 비해 현재 한국의 주거비 지원제도는 매우 제한적이며, 급여 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임대 가구가 증가하고 특히 월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주택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의 주거급여 기준과 급여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좀 더 과감한 임대료보조 혹은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두 번째, 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의 공급은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OECD 기준을 넘어 8.9%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지역과 대상자가 많지 않아 늘어나는 부동산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기본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임대주택 입지의 차별성을 줄이고, 수요자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조세 강화 등을 통한 공급으로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과감한 주택공급 확대, 특히 민간보다는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초년생, 주택불안정 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적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곳에 사회주택 등을 공급함으로써 주택으로 인한 불평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안한 것과 같이 임대료 지원 대상의 과감한 확대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늘림으로써 주거 취약계층, 중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통합적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 부담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낮추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

nants of health)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분화, 소득 분배 및 재분배에서의 불평등, 지역 간 격차, 젠더 격차와 같은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김창업, 김명희, 이태진, 손정인, 2015).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노동 집단, 저소득 집단, 실업군과 더불어 불공평한 분배 및 소득재분배의 결과 남게 되는 빈곤층, 농어촌 지역 거주민,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여성 등 취약집단의 건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가 해소돼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같은 근본적인 접근 없이 의료비 절감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은,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을 방치한 채 강 하류에서 끊임없이 물 정수 작업을 하는 방식의 접근과 유사할 수 있다. 이를 전제하고 상대적으로 각론적인, 보건정책 영역에 한정된 제언을 세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 본인의 의료비 비용 부담을 높이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핵심 고리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급여화를 이뤄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저소득층의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책정되는데 1분위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본인부담상한액이 8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의 저소득층이 짊어지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1차 의료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최고 수준의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1차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게이트 키핑을 강화해야, 앞에서 제시한 의료비 경감 대책들이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만 몇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첫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공적 투자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보편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장학금 제도, 사배자 전형 등은-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상대적으로 왜소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드림스타트 같이 저소득 아동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기에 재능을 개발하고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질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제한된 '괜찮은 일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 서열화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반대로 낮은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간접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을 둘러싼 경쟁이 약한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평등하고, 사회임금(social wage)을 통해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 부분 보완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낮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사회임금-사회보장제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교통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 교통비 보조의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 가구의 전체 교통비가 저소득 가구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의 격차가 컸다. 자동차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저소득층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교통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교통수당,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비 지원 등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고려하여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비 보조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 경우 누가 재정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현재 도시철도 요금에서 노인 적용 제외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보전하고 있는데, 도시철도 운영지역과 비운영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과 연계 및 합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고려(65세 이상 노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지원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 서비스별 가입률, 이용량, 단말기 가격·교체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신서비스 요금 수준은 낮지만, 이용량 증가, 높은 단말기 가격과 짧은 교체 주기가 가계통신비 부담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뿐만 아니라 단말기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³⁴⁾ 즉, 본인의 이용 패턴을 고려해 요금제 및 단말 선택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서비스가 경제·사회활동에서 필수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기반이 되는 통신서비스 이용(소비)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34)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노웅래 국회의원(2018.10.31.),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91886>에서 2021.11.25. 인출

따라, 본인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되, 와이파이 확산 등을 통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우 소득 저분위 가구의 통신비 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감면 혜택의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등이 해당하며 대상에 따라 감면액은 차이를 보인다. 요금 감면 대상 및 내역이 지속 확대되고, 자동감면이 추진되는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이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넘어서 사회복지 수단으로 전환되고, 현행 감면제도가 취약계층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신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성 통화료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등 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이 통신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혹은 비대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 계층에 대하여 통신 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바우처 지급이나 통신급여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신도 사회복지를 위한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영역에서의 가계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전반적으로는 해당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핵심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역의 공공성 강화 정책은 1) 현금 복지에 대한 사회 일

부의 거부감을 완화하면서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고, 2)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고, 3)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이 라는 혜택이 있다.

이 보고서의 접근은 현재 자주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방향과도 일부 일맥상통하다(Coote and Percy, 2020; Social Prosperity Network, 2017). 영국의 학자인 Coote and Percy (2020)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기본원칙을 ‘공동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집단 책임의 이행’(81쪽)이라고 규정하고, 영국에서 이미 그 원칙이 일부 관철되고 있는 의료 및 교육의 영역의 제도 개선과 아울러, 돌봄과 주거, 교통, ITC로 기본서비스를 확장해나가자고 제안한다. 이들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장점으로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투입 대비 산출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한편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한다.

이들이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대상 영역으로 지목하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분야는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다섯 영역과 중첩된다. 이 연구가 한국에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미나, 박미선, 이재춘, 이길제, 이후빈, 조윤지, ..., 김승훈. (2021). 2020년 주거실태조사 - (일반가구)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 국토교통부. (2021.1.20.), '20.12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 친환경차 80만대 돌파. 보도자료. p.2.
- 김경년, 김안나. (2015). 사교육, 교육만의 문제인가? 복지국가의 위험 분담과 사교육 선택의 대응 원리. *교육사회학연구*, 25(1), 29-50.
- 김기태, 정은희, 이주미, 최준영, 이병재, 박은정, 송지원. (2019). 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임완섭, 황도경, ..., 송치호.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진. (2019).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85.
- 김은영, 김근진, 윤지연, 김민지, Peng, C. C., 정광희, Kristiina, S. N. (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육아정책연구소.
- 김주영, 황순연, 고두환, 오연선. (2017), 통계로 본 교통 - 2017 교통 주요 이슈에 관한 인사이트,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 김창엽, 김명희, 이태진, 손정인. (2015).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태완, 김문길, 김미곤, 여유진, 김현경, 임완섭, ..., 최민정.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 최현수,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손창균, ..., 송치호. (2013).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희. (2012). 주거비 지원에 관한 주요 국가의 법제 고찰. 서울:한국법제연구원.
- 나상우. (2021),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현황 및 경감방안, 한국가계의 생계비 지출 경감 방안 연구진 세미나(2021.04.26.) 발표자료,

-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김문길, 신현웅, 신화연, ..., 이주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세종: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 이봉주. (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철, 신화연. (2021).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1-134.
- 백일우, 박명희(2013). 세계 사교육시장과 정책 동향 분석. 비교교육연구 23(6), 1-34.
- 송인호. (2015). 우리나라 점유형태별 주거비 현황 및 국가 간 주거비 비교.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 여유진. (2002).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여유진. (2019). 코호트별 사회이동 경향 분석, 한국사회정책, 26(4), 61~81.
- 여유진, 김미곤, 구인회, 김수정, 윤자영, 허순임, 최준영. (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기태, 정재훈, 김인춘, 서현수, 길리아노 보놀리, (2019).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여유진, 남찬섭, 조한나. (201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V :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2). 25-57.
- 우세린, 손민성, 김귀현, 최만규. (2020). 고용형태별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의 차이. 보건사회연구, 40(1), 592-616.
- 유한구, 정지선, 김승보. (2009). 한국·대만·일본의 사교육정책이 사교육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승윤, 김기태. (2017).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한국사회정책, 24(4), 113-150.
- 이승호. (2021.11.16.). 눈덩이 가계빚에 자산시장 붕괴...한국경제 퍼펙트 스톱 오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3995>에서 2021.12.01. 인출.
- 이신용. (2018). 복지국가는 사교육 과잉 문제를 풀 수 있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172-182.
- 이종재, 이희숙. (2008). 사교육 현상에 대한 세계적 동향 분석-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기제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2), 203-228.
- 이현규, 한지형, 최현자. (2018). 고령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소비지출과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9(6), 77-104.
- 이현주, 김현경, 류정희, 오욱찬, 전지현, 이승호, 이상돈, 윤여인. (2020).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경석. (2020). OECD 자가 점유율 통계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4월호. 국회입법조사처.
- 최종혁, 이연, 유영주, 안태숙. (2010).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기능. 한국사회복지학. 62(1). 291-316.
- 통계청. (2020), 「가계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1). OECD Health Statistics 2021; OECD. (2021f). Health Statistics 2021에서 주요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노웅래 국회의원(2018.10.31.),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91886>에서 2021.11.25. 인출
- 한국은행. (2021). 금융안정보고서 2021.6. 서울: 한국은행.

- Coote, A. and Percy, A. (2020).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Cambridge: Policy Press.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서비스로. 한국어판. 김은경 옮김. 클라우드 나인.
- Esping-Andersen, G.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03). *Household Budget Surveys in the EU: Methodology and recommendations for harmonization_2003*. Brussel: European Commission.
- Eurostat. (2020). *Household Budget Survey 2010 Scientific-use files User Manual*. Brussel: Eurostat.
- Eurostat. (2021). [MICRODATA] RPP 73/2021-HBS - Approval of access and instructions, email to KIHASA. 2021.6.19. Brussel: Eurostat.
- Hudson, J. & Kuhner, S. (2009). Towards productive welfare? A comparative analysis of 23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 1, 34-46.
- Insee(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2021). Household budget survey 2017. <https://www.insee.fr/en/metadonnees/source/operation/s1341/processus-statistique>에서 2021.9.9. 인출.
- Knox, K., Conwell, Y., & Caine, E. (2004). If Suicide Is a Public Health Problem, What Are We Doing to Prevent I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 37-45.
- Leibfried, S. (1992). Towards a European welfare state, in Z. Ferge and J. E. Kolberg (eds.), *Social Policy in a Changing Europe*, Frankfurt: Campus-Verlag, 245-79.
- Lerman, R. I., & Yitzhaki, S. (1984). A note on the calcu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Gini index. *Economics Letters*, 15(3-4), 363-368.

- Lerman, R. I., & Yitzhaki, S. (1985). Income inequality effects by income source: A new approach and applications to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51-156.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Paris: OECD.
- OECD. (2013).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OECD.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OECD.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http://dx.doi.org/10.1787/888933405112>에서 2021. 10. 11. 인출)
- OECD. (2017a). *OECD Health Statistics*. Paris: OECD.
- OECD. (2017b). *Health at a Glance*. Paris: OECD.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Paris: OECD.
- OECD. (2021a).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1.11.17. 인출.
- OECD. (2021b). Social Spending.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에서 2021.11.17. 인출.
- OECD. (2021c). Population. <https://data.oecd.org/social-exp/social-spending.htm>에서 2021.11.17. 인출.
- OECD. (2021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Social housing0social rental housing stock, (<https://www.compareyourcountry.org/housing/en/3/all/default>에서 2021.10.23. 인출
- OECD. (2021e). OECD Better Life Index, Housing.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housing/>에서 2021.12.10. 인출.
- OECD. (2021f). Analytical House Price Indicato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OUSE_PRICES에서 2021.11.26. 인출.
- OECD. (2021g). OECD Health Statistics 2021: OECD.

- OECD. (2021h). Health spending(<https://data.oecd.org/healthres/health-spending.htm>)에서 2021.10.11. 인출
- OECD. (2021i).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indicator). doi: 10.1787/f99b45d0-en;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 (indicator). doi: 10.1787/6e70bede-en에서 2021. 10. 5. 인출
- OECD. (2021j). PH3.1 Public Spending on Housing Allowances. <https://www.oecd.org/els/family/PH3-1-Public-spending-on-housing-allowances.pdf>에서 2021.12.1. 인출.
- Powell, M. (2007).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Bristol: Bristol University Press.
- Reibling, N. Ariaans, M. Wendt, C. (2019). Worlds of Healthcare: A Healthcare System Typology of OECD countries. *Health Policy*. 123. 611-620.
- Reich, R.B. (2015). *Saving Capitalism: For the many, not the few*. New York: Knopf.
- Social Prosperity Network (2017). *Social Prosperity for the Future: A Proposal for Universal Basic Service*. London: UCL.
- UK ONS. (2017). *Living Costs and Food Survey*, Technical Report for survey year: April 2015 to March 2016. London: ONS.
- Van Parijs, P., Vanderborght, Y. (2019). *Basic Income: A Radical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gstaff, A. & Doorslaer, V.E. (2003).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2(11), 921-934.
- Wendt, C. (2009). Mapping European healthcare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nancing, service provision and access to healthcar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 432-445.

- WHO. (2005). *Designing health financing systems to reduc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echnical brief for policy-maker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ss.
- Wilensky, H. L. & Lebeaux, C. N.,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Y: The Free Press.
- Wolf, F., & Zohlnhöfer, R. (2009). Investing in human capital? the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 26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9(3), 230-244.
- e-나라지표 - 자동차 등록 현황(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11 세계자동차통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에서 2021.11.11. 다운로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인당 총가계처분가능소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10_OECDD에서 2021.11.17.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지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611_OECD에서 2021.11.17.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가계소득지출 1인 이상 가구, 전국,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에서 2021.10.03.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지역별 계층별 점유형태,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1.10.03.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행정구역별 점유형태,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1.10.03.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이동전화 가입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A10&conn_path=I3에서

24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21.10.18.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vw_cd=MT_ZTITLE&list_id=C2_1_4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1. 11. 7.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301&conn_path=I3에서 2021. 10. 5. 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블로그, OECD, 아동·가족 정책의 걸림돌로 사교육을 지목하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OECD 공동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 현장 (하),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1693400670>에서 2021. 11. 16. 인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Eurostat,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부록 1] 가계동향조사와 HBS 지출변수 비교

가계동향	HBS
01. 식료품 · 비주류음료	HE01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곡물	HE01_1 Food
곡물가공품	HE01_1_1 Bread and cereals
빵 및 떡류	HE01_1_1_1 Rice
	HE01_1_1_2 Flours and other cereals
	HE01_1_1_3 Bread
	HE01_1_1_4 Other bakery products
	HE01_1_1_5 Pizza and quiche
	HE01_1_1_6 Pasta products and couscous
	HE01_1_1_7 Breakfast cereals
	HE01_1_1_8 Other cereal products
육류	HE01_1_2 Meat
육류가공품	HE01_1_2_1 Beef and veal
	HE01_1_2_2 Pork
	HE01_1_2_3 Lamb and goat
	HE01_1_2_4 Poultry
	HE01_1_2_5 Other meats
	HE01_1_2_6 Edible offal
	HE01_1_2_7 Dried_ salted or smoked meat
	HE01_1_2_8 Other meat preparations
	HE01_1_3 Fish and seafood
신선수산물	HE01_1_3_1 Fresh or chilled fish
염건수산물	HE01_1_3_2 Frozen fish

24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기타수산물가공	HE01_1_3_3 Fresh or chilled seafood
	HE01_1_3_4 Frozen seafood
	HE01_1_3_5 Dried_ smoked or salted fish and seafood
	HE01_1_3_6 Other preserved or processed fish and seafood-based preparations
유제품 및 알	HE01_1_4 Milk_ cheese and eggs
	HE01_1_4_1 Milk_ whole_ fresh
	HE01_1_4_2 Milk_ low fat_ fresh
	HE01_1_4_3 Milk_ preserved
	HE01_1_4_4 Yoghurt
	HE01_1_4_5 Cheese and curd
	HE01_1_4_6 Other milk products
	HE01_1_4_7 Eggs
유지류	HE01_1_5 Oils and fats
	HE01_1_5_1 Butter
	HE01_1_5_2 Margarine and other vegetable fats
	HE01_1_5_3 Olive oil
	HE01_1_5_4 Other edible oils
	HE01_1_5_5 Other edible animal fats
과일 및 과일가공품	HE01_1_6 Fruit
	HE01_1_6_1 Fresh or chilled fruit
	HE01_1_6_2 Frozen fruit
	HE01_1_6_3 Dried fruit and nuts
	HE01_1_6_4 Preserved fruit and fruit-based products
채소 및 채소가공품	HE01_1_7 Vegetables
해조 및 해조가공품	HE01_1_7_1 Fresh or chilled vegetables other than potatoes and other tubers
	HE01_1_7_2 Frozen vegetables other than potatoes and other tubers

가계동향	HBS
	HE01_1_7_3 Dried vegetables_ other preserved or processed vegetables
	HE01_1_7_4 Potatoes
	HE01_1_7_5 Crisps
	HE01_1_7_6 Other tubers and products of tuber vegetables
	HE01_1_8 Sugar_ jam_ honey_ chocolate and confectionery
당류 및 과자류	HE01_1_8_1 Sugar
	HE01_1_8_2 Jams_ marmalades and honey
	HE01_1_8_3 Chocolate
	HE01_1_8_4 Confectionery products
	HE01_1_8_5 Edible ices and ice cream
	HE01_1_8_6 Artificial sugar substitutes
조미식품	HE01_1_9 Food products NEC
	HE01_1_9_1 Sauces_ condiments
	HE01_1_9_2 Salt_ spices and culinary herbs
	HE01_1_9_3 Baby food
	HE01_1_9_4 Ready-made meals
기타식품	HE01_1_9_9 Other food products NEC
커피 및 차	HE01_2 Non-alcoholic beverages
	HE01_2_1 Coffee_ tea and cocoa
	HE01_2_1_1 Coffee
	HE01_2_1_2 Tea
	HE01_2_1_3 Cocoa and powdered chocolate
	HE01_2_2 Mineral waters_ soft drinks_ fruit and vegetable juices
	HE01_2_2_1 Mineral or spring waters
	HE01_2_2_2 Soft drinks
쥬스 및 기타음료	HE01_2_2_3 Fruit and vegetable juices

246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02. 주류 · 담배	HE02 ALCOHOLIC BEVERAGES_ TOBACCO AND NARCOTICS
주류	HE02_1 Alcoholic beverages
	HE02_1_1 Spirits
	HE02_1_1_1 Spirits and liqueurs
	HE02_1_1_2 Alcoholic soft drinks
	HE02_1_2 Wine
	HE02_1_2_1 Wine from grapes
	HE02_1_2_2 Wine from other fruits
	HE02_1_2_3 Fortified wines
	HE02_1_2_4 Wine-based drinks
	HE02_1_3 Beer
	HE02_1_3_1 Lager beer
	HE02_1_3_2 Other alcoholic beer
	HE02_1_3_3 Low and non-alcoholic beer
	HE02_1_3_4 Beer-based drinks
담배	HE02_2 Tobacco
	HE02_2_0 Tobacco
	HE02_2_0_1 Cigarettes
	HE02_2_0_2 Cigars
	HE02_2_0_3 Other tobacco products
	HE02_3 Narcotics
	HE02_3_0 Narcotics
	HE02_3_0_0 Narcotics
03. 의류 · 신발	HE03 CLOTHING AND FOOTWEAR
직물 및 외의	HE03_1 Clothing
내의	HE03_1_1 Clothing materials
기타의복	HE03_1_1_0 Clothing materials
	HE03_1_2 Garments

가계동향	HBS
	HE03_1_2_1 Garments for men
	HE03_1_2_2 Garments for women
	HE03_1_2_3 Garments_For_Infants-0-to-2-years_and_children-3-to-13-years
	HE03_1_3 Other articles of clothing and clothing accessories
	HE03_1_3_1 Other articles of clothing
	HE03_1_3_2 Clothing accessories
의복관련서비스	HE03_1_4 Cleaning_ repair and hire of clothing
	HE03_1_4_1 Cleaning of clothing
	HE03_1_4_2 Repair and hire of clothing
신발	HE03_2 Footwear
	HE03_2_1 Shoes and other footwear
	HE03_2_1_1 Footwear for men
	HE03_2_1_2 Footwear for women
	HE03_2_1_3 Footwear for infants and children
신발서비스	HE03_2_2 Repair and hire of footwear
	HE03_2_2_0 Repair and hire of footwear
04. 주거 · 수도 · 광열	HE04 HOUSING_ WATER_ ELECTRICITY_ GAS AND OTHER FUELS
실제주거비	HE04_1 Actual rentals for housing
	HE04_1_1 Actual rentals paid by tenants
	HE04_1_1_0 Actual rentals paid by tenants
	HE04_1_2 Other actual rentals
	HE04_1_2_1 Actual rentals paid by tenants for secondary residences
	HE04_1_2_2 Garage rentals and other rentals paid by tenants
	HE04_2 Imputed rentals for housing
	HE04_2_1 Imputed rentals of owner-occupiers

248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HE04_2_1_0 Imputed rentals of owner-occupiers
	HE04_2_2 Other imputed rentals
	HE04_2_2_0 Other imputed rentals
주택유지 및 수선	HE04_3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dwelling
	HE04_3_1 Materials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dwelling
	HE04_3_1_0 Materials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dwelling
	HE04_3_2 Services for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dwelling
	HE04_3_2_1 Services of plumbers
	HE04_3_2_2 Services of electricians
	HE04_3_2_3 Maintenance services for heating systems
	HE04_3_2_4 Services of painters
	HE04_3_2_5 Services of carpenters
	HE04_3_2_9 Other service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the dwelling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HE04_4 Water supply and miscellaneous services relating to the dwelling
	HE04_4_1 Water supply
	HE04_4_1_0 Water supply
	HE04_4_2 Refuse collection
	HE04_4_2_0 Refuse collection
	HE04_4_3 Sewage collection
	HE04_4_3_0 Sewage collection
기타주거관련서비스	HE04_4_4 Other services relating to the dwelling NEC
	HE04_4_4_1 Maintenance charges in multi-occupied buildings
	HE04_4_4_2 Security services
	HE04_4_4_9 Other services related to dwelling

가계동향	HBS
연료비	HE04_5 Electricity_ gas and other fuels
	HE04_5_1 Electricity
	HE04_5_1_0 Electricity
	HE04_5_2 Gas
	HE04_5_2_1 Natural gas and town gas
	HE04_5_2_2 Liquefied_Hydrocarbons-butane-propane-etc
	HE04_5_3 Liquid fuels
	HE04_5_3_0 Liquid fuels
	HE04_5_4 Solid fuels
	HE04_5_4_1 Coal
	HE04_5_4_9 Other solid fuels
	HE04_5_5 Heat energy
	HE04_5_5_0 Heat energy
05.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HE05 FURNISHINGS_ HOUSEHOLD EQUIPMENT AND ROUTINE HOUSEHOLD MAINTENANCE
가구 및 조명	HE05_1 Furniture and furnishings_ carpets and other floor coverings
실내장식	HE05_1_1 Furniture and furnishings
	HE05_1_1_1 Household furniture
	HE05_1_1_2 Garden furniture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HE05_1_1_3 Lighting equipment
	HE05_1_1_9 Other furniture and furnishings
	HE05_1_2 Carpets and other floor coverings
	HE05_1_2_1 Carpets and rugs
	HE05_1_2_2 Other floor coverings
	HE05_1_2_3 Services of laying of fitted carpets and floor coverings
	HE05_1_3 Repair of furniture_ furnishings and floor coverings
	HE05_1_3_0 Repair of furniture_ furnishings and floor coverings

250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가정용 섬유	HE05_2 Household textiles
	HE05_2_0 Household textiles
	HE05_2_0_1 Furnishing fabrics and curtains
	HE05_2_0_2 Bed linen
	HE05_2_0_3 Table linen and bathroom linen
	HE05_2_0_4 Repair of household textiles
	HE05_2_0_9 Other household textiles
가전 및 가정용기기	HE05_3 Household appliances
	HE05_3_1 Major household appliances whether electric or not
	HE05_3_1_1 Refrigerators_ freezers and fridge-freezers
	HE05_3_1_2 Clothes washing machines_ clothes drying machines and dish washing machines
	HE05_3_1_3 Cookers
	HE05_3_1_4 Heaters_ air conditioners
	HE05_3_1_5 Cleaning equipment
	HE05_3_1_9 Other major household appliances
	HE05_3_2 Small electric household appliances
	HE05_3_2_1 Food processing appliances
	HE05_3_2_2 Coffee machines_ tea makers and similar appliances
	HE05_3_2_3 Irons
	HE05_3_2_4 Toasters and grills
	HE05_3_2_9 Other small electric household appliances
가전관련서비스	HE05_3_3 Repair of household appliances
	HE05_3_3_0 Repair of household appliances
가사용품	HE05_4 Glassware_ tableware and household utensils
	HE05_4_0 Glassware_ tableware and household utensils
	HE05_4_0_1 Glassware_ crystal-ware_ ceramic ware and chinaware

가계동향	HBS
	HE05_4_0_2 Cutlery_ flatware and silverware
	HE05_4_0_3 Non-electric kitchen utensils and articles
	HE05_4_0_4 Repair of glassware_ tableware and household utensils
가정용공구 및 기타	HE05_5 Tools and equipment for house and garden
	HE05_5_1 Major tools and equipment
	HE05_5_1_1 Motorized major tools and equipment
	HE05_5_1_2 Repair_ leasing and rental of major tools and equipment
	HE05_5_2 Small tools and miscellaneous accessories
	HE05_5_2_1 Non-motorized small tools
	HE05_5_2_2 Miscellaneous small tool accessories
	HE05_5_2_3 Repair of non-motorized small tools and miscellaneous accessories
가사소모품	HE05_6 Goods and services for routine household maintenance
	HE05_6_1 Non-durable household goods
	HE05_6_1_1 Cleaning and maintenance products
	HE05_6_1_2 Other non-durable small household articles
가사서비스	HE05_6_2 Domestic services and household services
	HE05_6_2_1 Domestic services by paid staff
	HE05_6_2_2 Cleaning services
	HE05_6_2_3 Hire of furniture and furnishings
	HE05_6_2_9 Other domestic services and household services
06. 보건	HE06 HEALTH
의약품	HE06_1 Medical products_ appliances and equipment
의료용소모품	HE06_1_1 Pharmaceutical products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HE06_1_1_0 Pharmaceutical products
	HE06_1_2 Other medical products

25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HE06_1_2_1 Pregnancy tests and mechanical contraceptive devices
기타의료서비스	HE06_1_2_9 Other medical products NEC
	HE06_1_3 Therapeutic appliances and equipment
	HE06_1_3_1 Corrective eye-glasses and contact lenses
	HE06_1_3_2 Hearing aids
	HE06_1_3_3 Repair of therapeutic appliances and equipment
	HE06_1_3_9 Other therapeutic appliances and equipment
외래의료서비스	HE06_2 Out-patient services
	HE06_2_1 Medical services
	HE06_2_1_1 General practice
	HE06_2_1_2 Specialist practice
치과서비스	HE06_2_2 Dental services
	HE06_2_2_0 Dental services
	HE06_2_3 Paramedical services
	HE06_2_3_1 Services of medical analysis laboratories and X-ray centres
	HE06_2_3_2
	Thermal-baths_ corrective-gymnastic therapy_ ambulance services and hire of therapeutic equipment
	HE06_2_3_9 Other paramedical services
입원서비스	HE06_3 Hospital services
	HE06_3_0 Hospital services
	HE06_3_0_0 Hospital services
07. 교통	HE07 TRANSPORT
자동차구입	HE07_1 Purchase of vehicles
기타운송기구구입	HE07_1_1 Motor cars
	HE07_1_1_1 New motor cars

가계동향	HBS
	HE07_1_1_2 Second-hand motor cars
	HE07_1_2 Motor cycles
	HE07_1_2_0 Motor cycles
	HE07_1_3 Bicycles
	HE07_1_3_0 Bicycles
	HE07_1_4 Animal drawn vehicles
	HE07_1_4_0 Animal drawn vehicles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HE07_2 Operation of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1 Spare parts and accessories for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1_1 Tyres
	HE07_2_1_2 Spare parts for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1_3 Accessories for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운송기구 연료비	HE07_2_2 Fuels and lubricants for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2_1 Diesel
	HE07_2_2_2 Petrol
	HE07_2_2_3 Other fuels for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2_4 Lubricants
	HE07_2_3 Maintenance and repair of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3_0 Maintenance and repair of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기타개인교통서비스	HE07_2_4 Other services in respect of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4_1 Hire of garages_ parking spaces and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HE07_2_4_2 Toll facilities and parking meters
	HE07_2_4_3 Driving lessons_ tests_ licences and road worthiness tests
	HE07_3 Transport services

25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철도운송	HE07_3_1 Passenger transport by railway	
	HE07_3_1_1 Passenger transport by train	
	HE07_3_1_2 Passenger transport by underground and tram	
육상운송	HE07_3_2 Passenger transport by road	
	HE07_3_2_1 Passenger transport by bus and coach	
	HE07_3_2_2 Passenger transport by taxi and hired car with driver	
기타운송	HE07_3_3 Passenger transport by air	
	HE07_3_3_1 Domestic flights	
	HE07_3_3_2 International flights	
	HE07_3_4 Passenger transport by sea and inland waterway	
	HE07_3_4_1 Passenger transport by sea	
	HE07_3_4_2 Passenger transport by inland waterway	
	HE07_3_5 Combined passenger transport	
	HE07_3_5_0 Combined passenger transport	
	기타교통관련서비스	HE07_3_6 Other purchased transport services
		HE07_3_6_1 Funicular_ cable-car and chair-lift transport
HE07_3_6_2 Removal and storage services		
HE07_3_6_9 Other purchased transport services NEC		
08. 통신	HE08 COMMUNICATION	
우편서비스	HE08_1 Postal services	
	HE08_1_0 Postal services	
	HE08_1_0_1 Letter handling services	
	HE08_1_0_9 Other postal services	
통신장비	HE08_2 Telephone and telefax equipment	
	HE08_2_0 Telephone and telefax equipment	
	HE08_2_0_1 Fixed telephone equipment	

가계동향	HBS
	HE08_2_0_2 Mobile telephone equipment
	HE08_2_0_3 Other equipment of telephone and telefax equipment
	HE08_2_0_4 Repair of telephone or telefax equipment
통신서비스	HE08_3 Telephone and telefax services
	HE08_3_0 Telephone and telefax services
	HE08_3_0_1 Wired telephone services
	HE08_3_0_2 Wireless telephone services
	HE08_3_0_3 Internet access provision services
	HE08_3_0_4 Bundled telecommunication services
	HE08_3_0_5 Other information transmission services
09. 오락·문화	HE09 RECREATION AND CULTURE
영상음향기기	HE09_1 Audio-visual_ photographic and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사진광학장비	HE09_1_1 Equipment for the reception_ recording and reproduction of sound and picture
정보처리장치	HE09_1_1_1 Equipment for the reception_ recording and reproduction of sound
기록매체	HE09_1_1_2 Equipment for the reception_ recording and reproduction of sound and vision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HE09_1_1_3 Portable sound and vision devices
오락문화 내구재	HE09_1_1_9 Other equipment for the reception_ recording and reproduction of sound and picture
약기기구	HE09_1_2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equipment and optical instruments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HE09_1_2_1 Cameras
장난감 및 취미용품	HE09_1_2_2 Accessories for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equipment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HE09_1_2_3 Optical instruments
화훼관련용품	HE09_1_3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애완동물관련물품	HE09_1_3_1 Personal computers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HE09_1_3_2 Accessories for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256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운동 및 오락서비스	HE09_1_3_3 Software
문화서비스	HE09_1_3_4 Calculators and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복권	HE09_1_4 Recording media
서적	HE09_1_4_1 Pre-recorded recording media
기타인쇄물	HE09_1_4_2 Unrecorded recording media
문구	HE09_1_4_9 Other recording media
단체여행비	HE09_1_5 Repair of audio-visual_ photographic and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HE09_1_5_0 Repair of audio-visual_ photographic and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HE09_2 Other major durables for recreation and culture
	HE09_2_1 Major durables for outdoor recreation
	HE09_2_1_1 Camper vans_ caravans and trailers
	HE09_2_1_2 Aeroplanes_ microlight aircraft_ gliders_ hang-gliders and hot-air balloons
	HE09_2_1_3 Boats_ outboard motors and fitting out of boats
	HE09_2_1_4 Horses_ ponies and accessories
	HE09_2_1_5 Major items for games and sport
	HE09_2_2 Musical instruments and major durables for indoor recreation
	HE09_2_2_1 Musical instruments
	HE09_2_2_2 Major durables for indoor recreation
	HE09_2_3 Maintenance and repair of other major durables for recreation and culture
	HE09_2_3_0 Maintenance and repair of other major durables for recreation and culture
	HE09_3 Other recreational items and equipment_ gardens and pets
	HE09_3_1 Games_ toys and hobbies
	HE09_3_1_1 Games and hobbies
	HE09_3_1_2 Toys and celebration articles

가계동향	HBS
	HE09_3_2 Equipment for sport_ camping and open-air recreation
	HE09_3_2_1 Equipment for sport
	HE09_3_2_2 Equipment for camping and open-air recreation
	HE09_3_2_3 Repair of equipment for sport_ camping and open-air recreation
	HE09_3_3 Gardens_ plants and flowers
	HE09_3_3_1 Garden products
	HE09_3_3_2 Plants and flowers
	HE09_3_4 Pets and related products
	HE09_3_4_1 Purchase of pets
	HE09_3_4_2 Products for pets
	HE09_3_5 Veterinary and other services for pets
	HE09_3_5_0 Veterinary and other services for pets
	HE09_4 Recreational and cultural services
	HE09_4_1 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HE09_4_1_1 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 Attendance
	HE09_4_1_2 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 Participation
	HE09_4_2 Cultural services
	HE09_4_2_1 Cinemas_ theatres_ concerts
	HE09_4_2_2 Museums_ libraries_ zoological gardens
	HE09_4_2_3 Television and radio licence fees_ subscriptions
	HE09_4_2_4 Hire of equipment and accessories for culture
	HE09_4_2_5 Photographic services
	HE09_4_2_9 Other cultural services
	HE09_4_3 Games of chance
	HE09_4_3_0 Games of chance

가계동향	HBS
	HE09_5 Newspapers_ books and stationery
	HE09_5_1 Books
	HE09_5_1_1 Fiction books
	HE09_5_1_2 Educational text books
	HE09_5_1_3 Other non-fiction books
	HE09_5_1_4 Binding services and E-book downloads
	HE09_5_2 Newspapers and periodicals
	HE09_5_2_1 Newspapers
	HE09_5_2_2 Magazines and periodicals
	HE09_5_3 Miscellaneous printed matter
	HE09_5_3_0 Miscellaneous printed matter
	HE09_5_4 Stationery and drawing materials
	HE09_5_4_1 Paper products
	HE09_5_4_9 Other stationery and drawing materials
	HE09_6 Package holidays
	HE09_6_0 Package holidays
	HE09_6_0_1 Package domestic holidays
	HE09_6_0_2 Package international holidays
10. 교육	HE10 EDUCATION
정규교육	HE10_1 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HE10_1_0 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HE10_1_0_1 Pre-primary education
	HE10_1_0_2 Primary education
중등교육	HE10_2 Secondary education
	HE10_2_0 Secondary education
	HE10_2_0_0 Secondary education
	HE10_3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HE10_3_0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가계동향	HBS
	HE10_3_0_0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고등교육	HE10_4 Tertiary education
	HE10_4_0 Tertiary education
	HE10_4_0_0 Tertiary education
	HE10_5 Education not definable by level
	HE10_5_0 Education not definable by level
	HE10_5_0_0 Education not definable by level
학원 및 보습교육	
학생학원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11. 음식·숙박	HE11 RESTAURANTS AND HOTELS
식사비	HE11_1 Catering services
숙박비	HE11_1_1 Restaurants_ cafés and the like
	HE11_1_1_1 Restaurants_ cafés and dancing establishments
	HE11_1_1_2 Fast food and take away food services
	HE11_1_2 Canteens
	HE11_1_2_0 Canteens
	HE11_2 Accommodation services
	HE11_2_0 Accommodation services
	HE11_2_0_1 Hotels_ motels_ inns and similar accommodation services
	HE11_2_0_2 Holiday centres_ camping sites_ youth hostels and similar accommodation services
	HE11_2_0_3 Accommodation services of other establishments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HE12 MISCELLANEOUS GOODS AND SERVICES
이미용서비스	HE12_1 Personal care
이미용 기기	HE12_1_1 Hairdressing salons and personal grooming establishments

260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동향	HBS
위생 및 미용용품	HE12_1_1_1 Hairdressing for men and children
시계 및 장신구	HE12_1_1_2 Hairdressing for women
기타개인용품	HE12_1_1_3 Personal grooming treatments
복지시설	HE12_1_2 Electric appliances for personal care
보험	HE12_1_2_1 Electric appliances for personal care
기타금융	HE12_1_2_2 Repair of electric appliances for personal care
기타서비스	HE12_1_3 Other appliances_ articles and products for personal care
	HE12_1_3_1 Non-electrical appliances
	HE12_1_3_2 Articles for personal hygiene and wellness_ esoteric products and beauty products
	HE12_2 Prostitution
	HE12_2_0 Prostitution
	HE12_2_0_0 Prostitution
	HE12_3 Personal effects NEC
	HE12_3_1 Jewellery_ clocks and watches
	HE12_3_1_1 Jewellery
	HE12_3_1_2 Clocks and watches
	HE12_3_1_3 Repair of jewellery_ clocks and watches
	HE12_3_2 Other personal effects
	HE12_3_2_1 Travel goods
	HE12_3_2_2 Articles for babies
	HE12_3_2_3 Repair of other personal effects
	HE12_3_2_9 Other personal effects NEC
	HE12_4 Social protection
	HE12_4_0 Social protection
	HE12_4_0_1 Child care services
	HE12_4_0_2 Retirement homes for elderly persons and residences for disabled persons

가계동향	HBS
	HE12_4_0_3 Services to maintain people in their private homes
	HE12_4_0_4 Counselling
	HE12_5 Insurance
	HE12_5_2 Insurance connected with the dwelling
	HE12_5_2_0 Insurance connected with the dwelling
	HE12_5_3 Insurance connected with health
	HE12_5_3_1 Public insurance connected with health
	HE12_5_3_2 Private insurance connected with health
	HE12_5_4 Insurance connected with transport
	HE12_5_4_1 Motor vehicle insurance
	HE12_5_4_2 Travel insurance
	HE12_5_5 Other insurance
	HE12_5_5_0 Other insurance
	HE12_6 Financial services NEC
	HE12_6_2 Other financial services NEC
	HE12_6_2_1 Charges by banks and post offices
	HE12_6_2_2 Fees and service charges of brokers_ investment counsellors
	HE12_7 Other services NEC
	HE12_7_0 Other services NEC
	HE12_7_0_1 Administrative fees
	HE12_7_0_2 Legal services and accountancy
	HE12_7_0_3 Funeral services
	HE12_7_0_4 Other fees and services

[부록 2] 노인단독가구 및 4인 가구 핵심생계비 분석 결과

〈부록표 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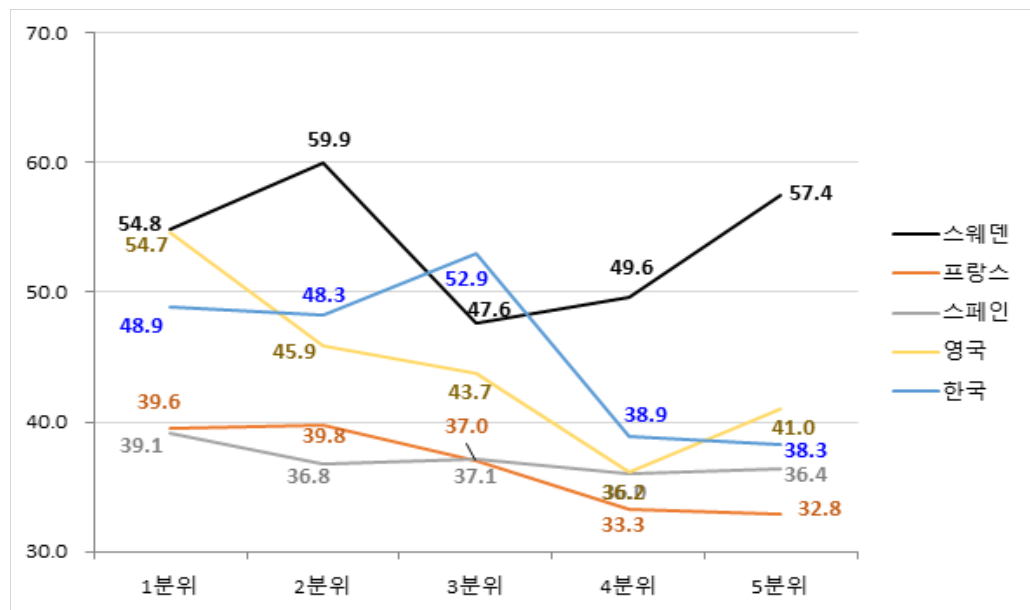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54.8	59.9	47.6	49.6	57.4	55.7
덴마크	54.9	52.2	49.7	55.9	52.3	53.5
벨기에	46.7	41.5	43.1	42.9	41.4	43.6
프랑스	39.6	39.8	37.0	33.3	32.8	36.7
스페인	39.1	36.8	37.1	36.0	36.4	36.8
그리스	40.5	40.5	41.2	38.9	39.4	40.2
아일랜드	42.8	43.2	43.6	40.6	43.7	42.8
영국	54.7	45.9	43.7	36.2	41.0	47.2
한국	48.9	48.3	52.9	38.9	38.3	48.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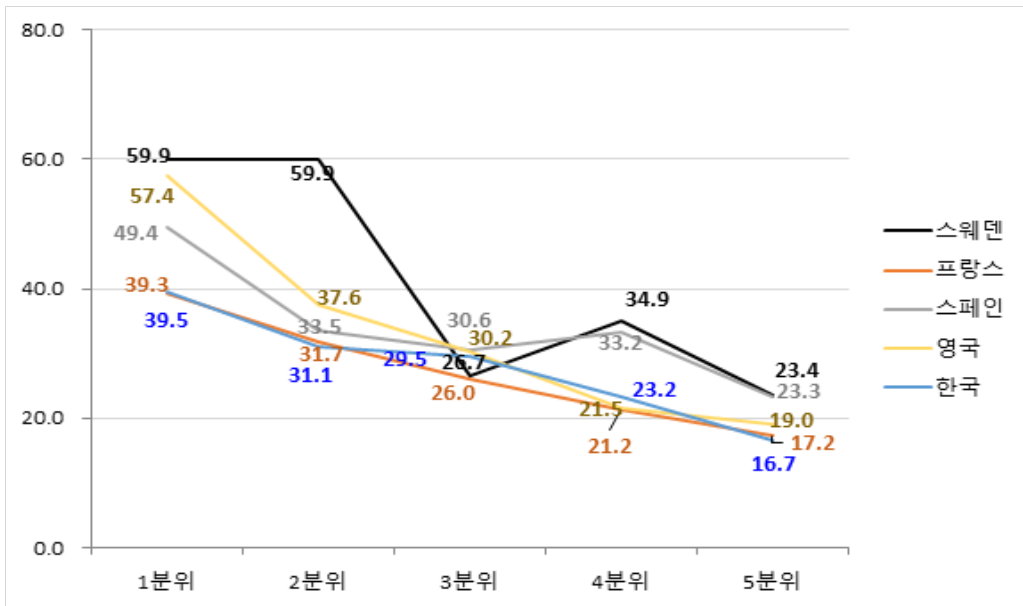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59.9	59.9	26.7	34.9	23.4	47.2
덴마크	51.6	45.7	38.7	46.4	18.8	42.9
벨기에	53.8	42.7	40.7	37.1	23.0	41.9
프랑스	39.3	31.7	26.0	21.2	17.2	25.6
스페인	49.4	33.5	30.6	33.2	23.3	30.9
그리스	57.1	42.5	38.7	32.7	27.3	38.3
아일랜드	39.0	34.2	28.7	27.8	22.8	32.8
영국	57.4	37.6	30.2	21.5	19.0	37.0
한국	39.5	31.1	29.5	23.2	16.7	34.0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264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부록표 2-3〉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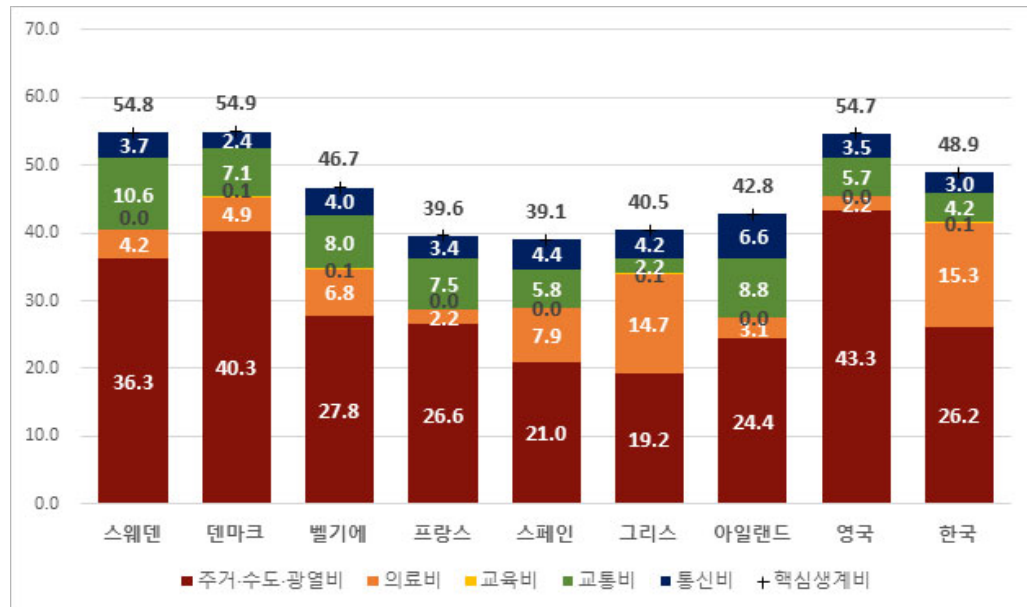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36.3	4.2	0.0	10.6	3.7	54.8
덴마크	40.3	4.9	0.1	7.1	2.4	54.9
벨기에	27.8	6.8	0.1	8.0	4.0	46.7
프랑스	26.6	2.2	0.0	7.5	3.4	39.6
스페인	21.0	7.9	0.0	5.8	4.4	39.1
그리스	19.2	14.7	0.1	2.2	4.2	40.5
아일랜드	24.4	3.1	0.0	8.8	6.6	42.8
영국	43.3	2.2	0.0	5.7	3.5	54.7
한국	26.2	15.3	0.1	4.2	3.0	48.9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3]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4〉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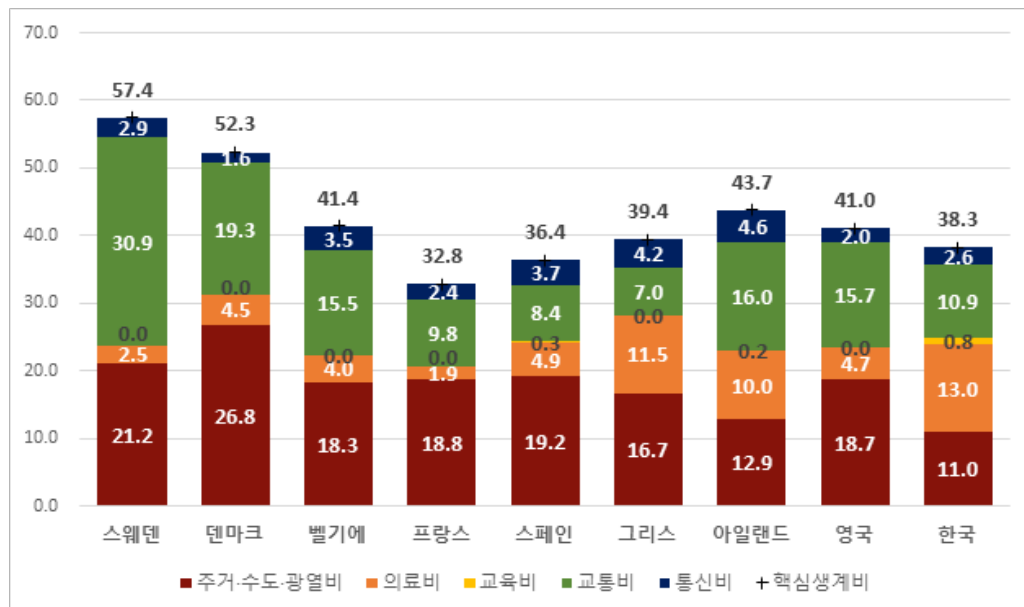
구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 ·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21.2	2.5	0.0	30.9	2.9	57.4
덴마크	26.8	4.5	0.0	19.3	1.6	52.3
벨기에	18.3	4.0	0.0	15.5	3.5	41.4
프랑스	18.8	1.9	0.0	9.8	2.4	32.8
스페인	19.2	4.9	0.3	8.4	3.7	36.4
그리스	16.7	11.5	0.0	7.0	4.2	39.4
아일랜드	12.9	10.0	0.2	16.0	4.6	43.7
영국	18.7	4.7	0.0	15.7	2.0	41.0
한국	11.0	13.0	0.8	10.9	2.6	38.3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4]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5〉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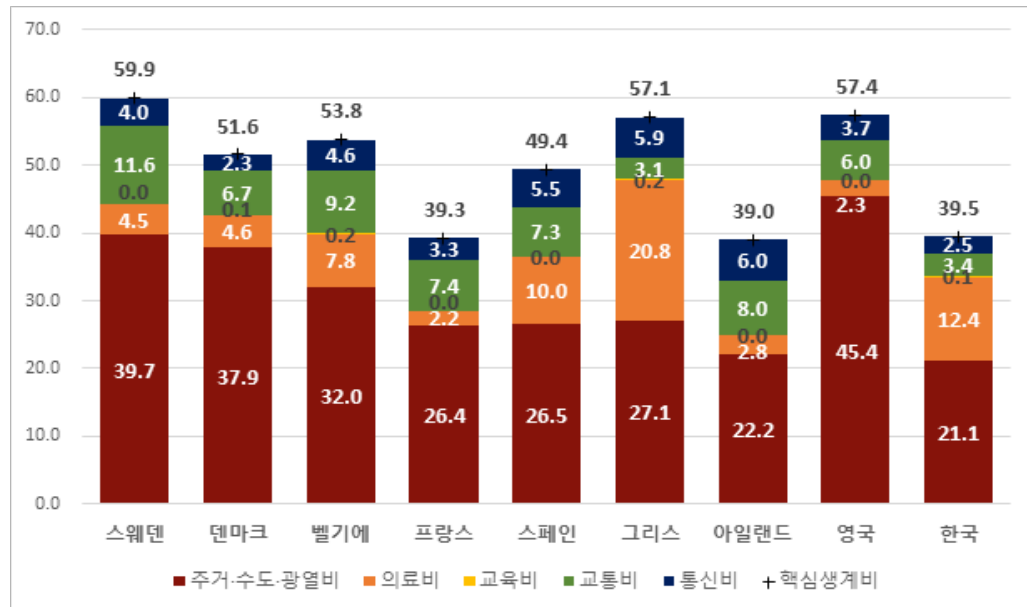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생계비 구성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39.7	4.5	0.0	11.6	4.0	59.9
덴마크	37.9	4.6	0.1	6.7	2.3	51.6
벨기에	32.0	7.8	0.2	9.2	4.6	53.8
프랑스	26.4	2.2	0.0	7.4	3.3	39.3
스페인	26.5	10.0	0.0	7.3	5.5	49.4
그리스	27.1	20.8	0.2	3.1	5.9	57.1
아일랜드	22.2	2.8	0.0	8.0	6.0	39.0
영국	45.4	2.3	0.0	6.0	3.7	57.4
한국	21.1	12.4	0.1	3.4	2.5	39.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5]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6〉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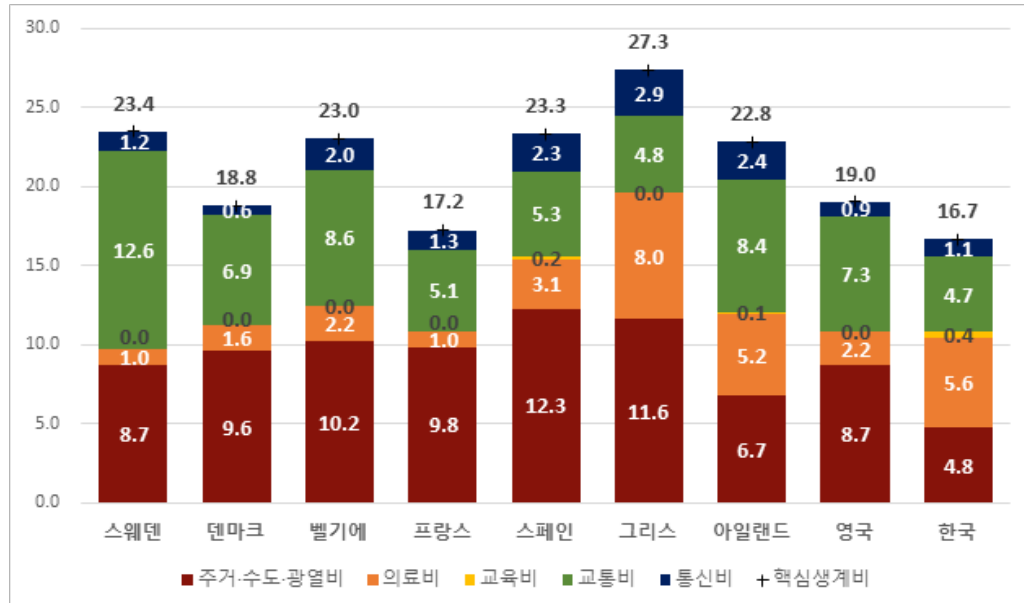
구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8.7	1.0	0.0	12.6	1.2	23.4
덴마크	9.6	1.6	0.0	6.9	0.6	18.8
벨기에	10.2	2.2	0.0	8.6	2.0	23.0
프랑스	9.8	1.0	0.0	5.1	1.3	17.2
스페인	12.3	3.1	0.2	5.3	2.3	23.3
그리스	11.6	8.0	0.0	4.8	2.9	27.3
아일랜드	6.7	5.2	0.1	8.4	2.4	22.8
영국	8.7	2.2	0.0	7.3	0.9	19.0
한국	4.8	5.6	0.4	4.7	1.1	16.7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6]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노인단독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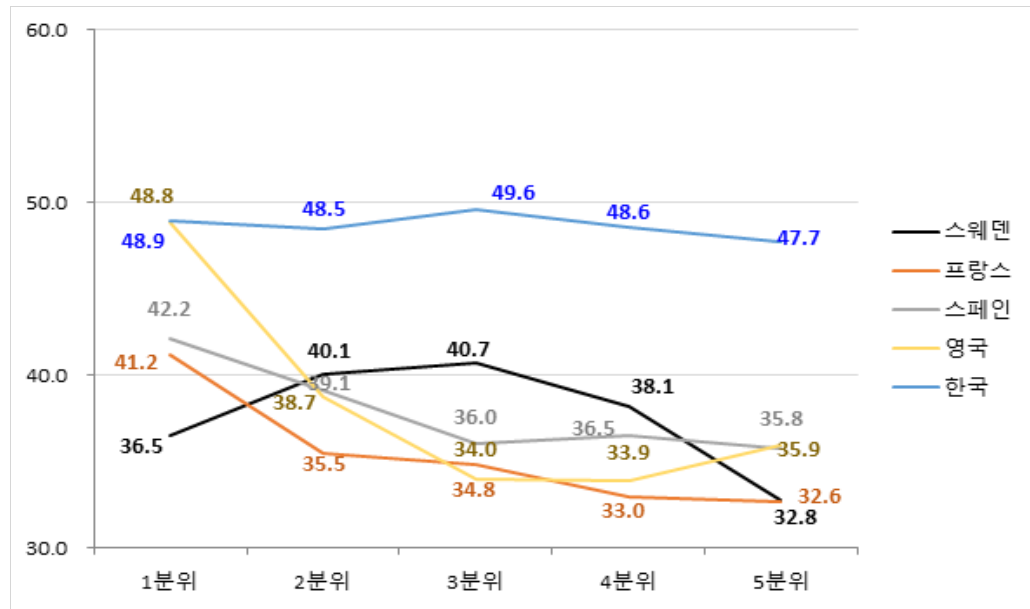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6.5	40.1	40.7	38.1	32.8	37.6
덴마크	46.7	41.3	33.5	38.4	32.7	36.9
벨기에	45.5	40.2	37.3	35.0	33.4	36.8
프랑스	41.2	35.5	34.8	33.0	32.6	34.4
스페인	42.2	39.1	36.0	36.5	35.8	37.4
그리스	42.5	42.2	42.8	42.0	40.9	41.8
아일랜드	40.2	42.0	40.2	37.7	36.5	38.8
영국	48.8	38.7	34.0	33.9	35.9	36.7
한국	48.9	48.5	49.6	48.6	47.7	48.5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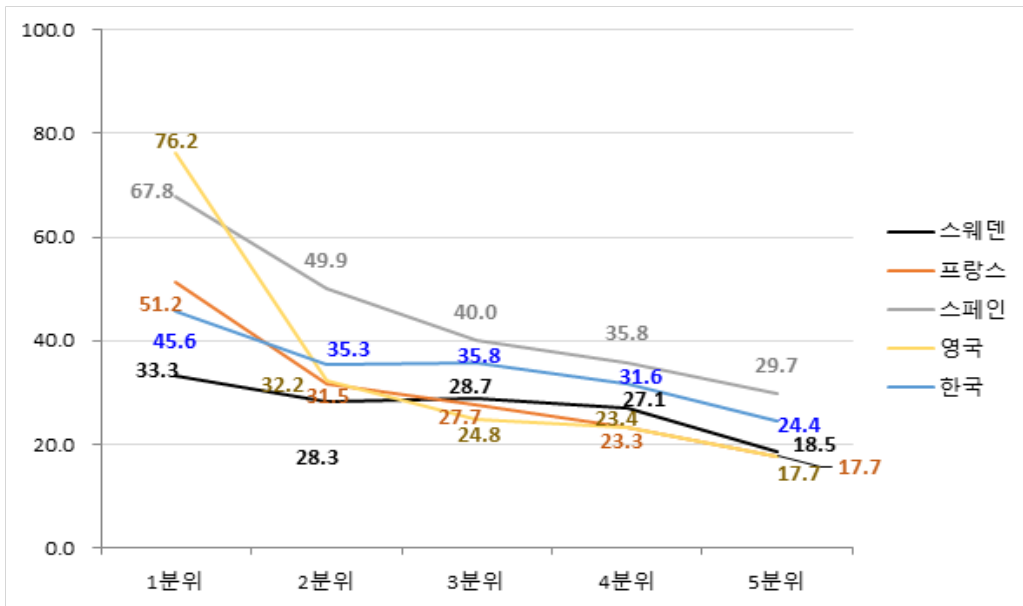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스웨덴	33.3	28.3	28.7	27.1	18.5	25.3
덴마크	45.5	23.3	19.0	19.9	13.8	19.3
벨기에	46.8	36.8	32.8	26.4	22.4	29.2
프랑스	51.2	31.5	27.7	23.3	17.7	24.4
스페인	67.8	49.9	40.0	35.8	29.7	38.8
그리스	105.5	56.1	52.4	45.0	37.5	48.6
아일랜드	42.7	34.1	29.6	24.3	17.7	25.0
영국	76.2	32.2	24.8	23.4	17.7	24.3
한국	45.6	35.3	35.8	31.6	24.4	31.6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270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부록표 2-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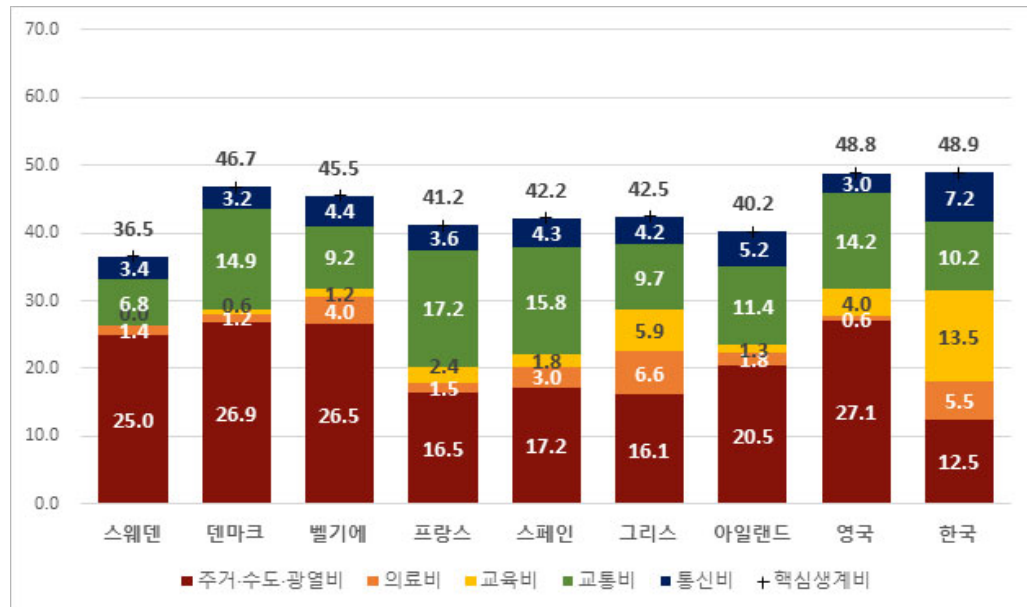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25.0	1.4	0.0	6.8	3.4	36.5
덴마크	26.9	1.2	0.6	14.9	3.2	46.7
벨기에	26.5	4.0	1.2	9.2	4.4	45.5
프랑스	16.5	1.5	2.4	17.2	3.6	41.2
스페인	17.2	3.0	1.8	15.8	4.3	42.2
그리스	16.1	6.6	5.9	9.7	4.2	42.5
아일랜드	20.5	1.8	1.3	11.4	5.2	40.2
영국	27.1	0.6	4.0	14.2	3.0	48.8
한국	12.5	5.5	13.5	10.2	7.2	48.9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10〉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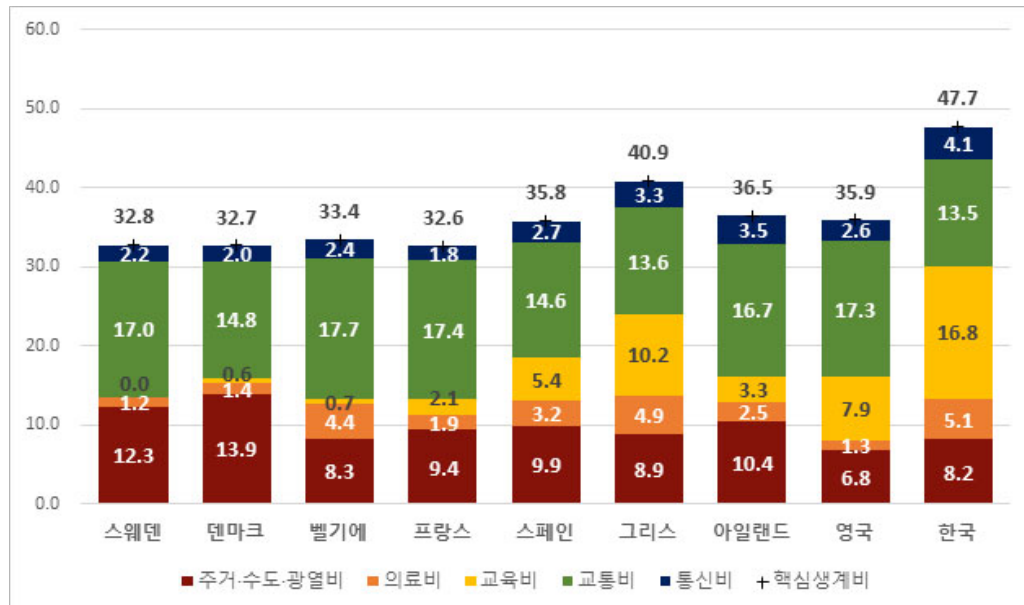
구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12.3	1.2	0.0	17.0	2.2	32.8
덴마크	13.9	1.4	0.6	14.8	2.0	32.7
벨기에	8.3	4.4	0.7	17.7	2.4	33.4
프랑스	9.4	1.9	2.1	17.4	1.8	32.6
스페인	9.9	3.2	5.4	14.6	2.7	35.8
그리스	8.9	4.9	10.2	13.6	3.3	40.9
아일랜드	10.4	2.5	3.3	16.7	3.5	36.5
영국	6.8	1.3	7.9	17.3	2.6	35.9
한국	8.2	5.1	16.8	13.5	4.1	47.7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10]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272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부록표 2-11〉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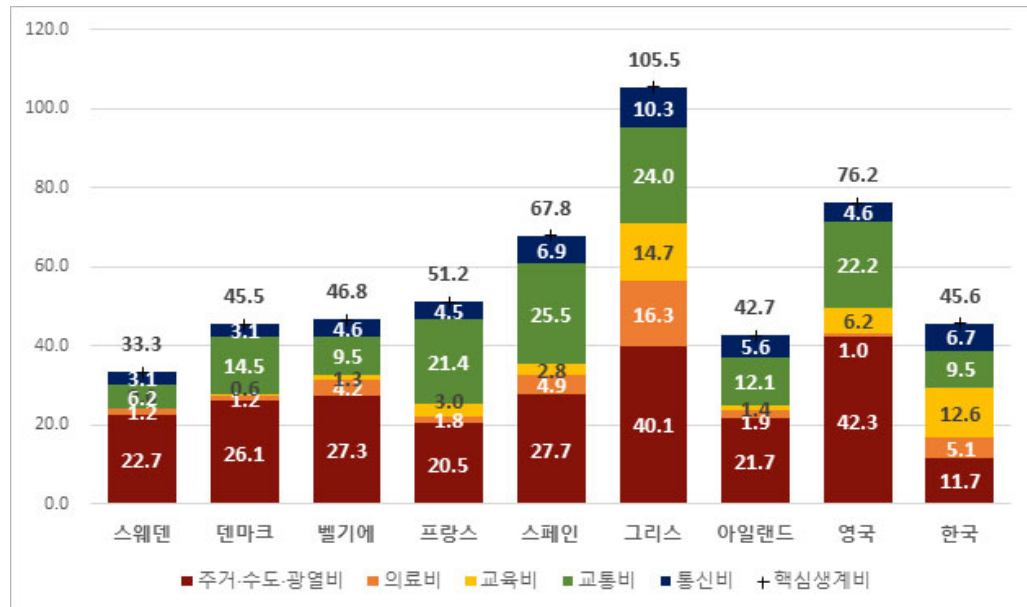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22.7	1.2	0.0	6.2	3.1	33.3
덴마크	26.1	1.2	0.6	14.5	3.1	45.5
벨기에	27.3	4.2	1.3	9.5	4.6	46.8
프랑스	20.5	1.8	3.0	21.4	4.5	51.2
스페인	27.7	4.9	2.8	25.5	6.9	67.8
그리스	40.1	16.3	14.7	24.0	10.3	105.5
아일랜드	21.7	1.9	1.4	12.1	5.6	42.7
영국	42.3	1.0	6.2	22.2	4.6	76.2
한국	11.7	5.1	12.6	9.5	6.7	45.6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11]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표 2-12〉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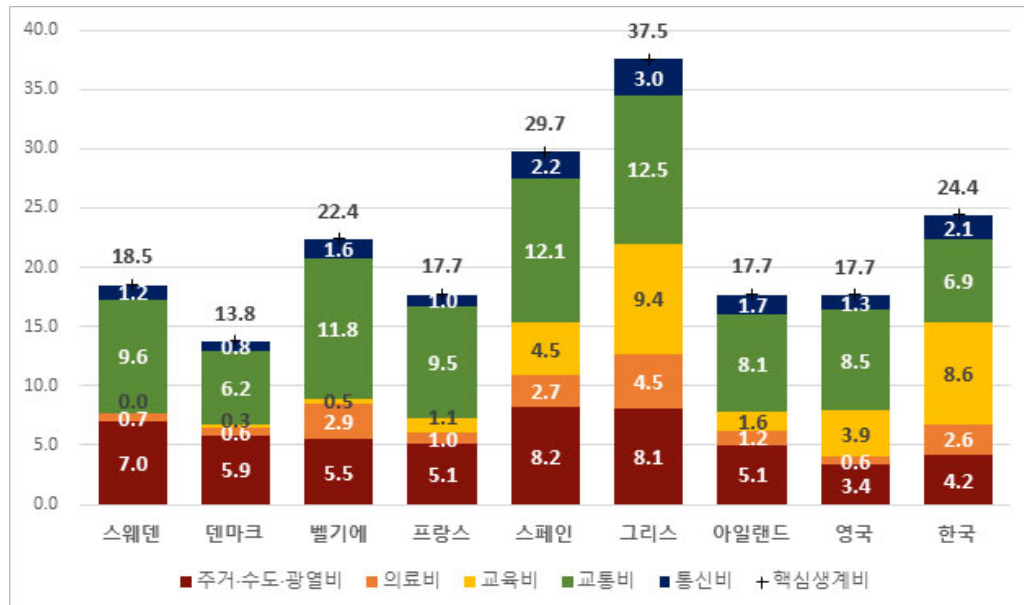
구분	핵심생계비					핵심생계비
	주거·수도·광열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스웨덴	7.0	0.7	0.0	9.6	1.2	18.5
덴마크	5.9	0.6	0.3	6.2	0.8	13.8
벨기에	5.5	2.9	0.5	11.8	1.6	22.4
프랑스	5.1	1.0	1.1	9.5	1.0	17.7
스페인	8.2	2.7	4.5	12.1	2.2	29.7
그리스	8.1	4.5	9.4	12.5	3.0	37.5
아일랜드	5.1	1.2	1.6	8.1	1.7	17.7
영국	3.4	0.6	3.9	8.5	1.3	17.7
한국	4.2	2.6	8.6	6.9	2.1	24.4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그림 2-12]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4인 가구)

(단위: %)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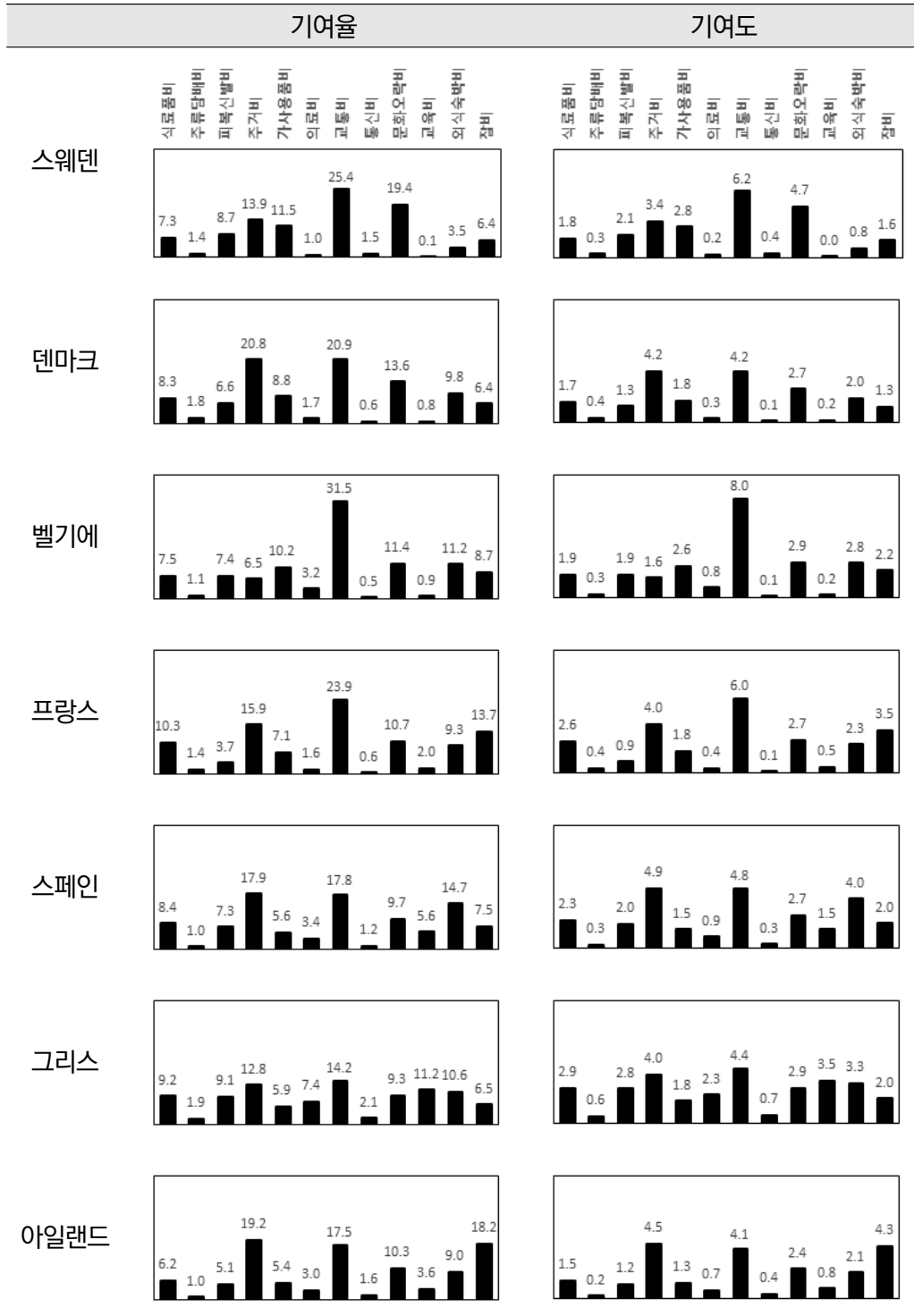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부록 3] 경상소득 대비 지출비목별 비율 분포 (2019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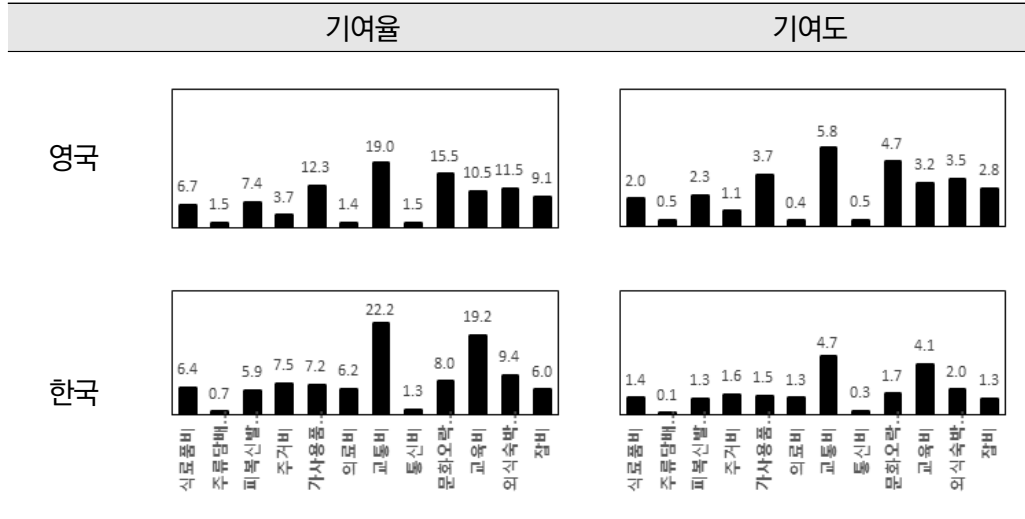
	가중치 미적용 표본 수					합계	가중치 적용 비율				
	소득=0	0.5% 미만	1% 미만	200% 이상	나머지		소득=0	0.5% 미만	1% 미만	200% 이상	나머지
01. 식료품·비주류음료	46	13	21	17	4,354	4451	1.1	0.3	0.5	0.4	97.8
02. 주류·담배	46	1574	517	5	2,309	4451	1.1	37.7	11.8	0.1	49.3
03. 의류·신발	46	509	416	3	3,477	4451	1.1	10.3	9.6	0.1	78.8
04. 주거·수도·광열	46	24	24	19	4,338	4451	1.1	0.4	0.4	0.4	97.7
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6	1051	812	6	2,536	4451	1.1	23.9	18.7	0.1	56.2
06. 보건	46	405	411	14	3,575	4451	1.1	9.8	10.4	0.3	78.5
07. 교통	46	119	212	26	4,048	4451	1.1	2.2	4.5	0.6	91.6
08. 통신	46	124	287	7	3,987	4451	1.1	2.4	6.1	0.2	90.2
09. 오락·문화	46	443	535	9	3,418	4451	1.1	8.1	10.8	0.2	79.8
10. 교육	46	60	72	4	4,269	4451	1.1	1.4	1.9	0.2	95.5
11. 음식·숙박	46	74	97	15	4,219	4451	1.1	1.2	1.8	0.3	95.6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46	95	205	10	4,095	4451	1.1	2.0	4.6	0.2	92.1
소비지출	46	0	0	188	4,217	4451	1.1	0.0	0.0	3.7	95.2

자료: 통계청(2019),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부록 4] 불평등 기여율과 기여도 (4인 가구)



276 한국 가계의 생계비 지출 부담 경감 방안 연구: 유럽 8개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주: 2015년 기준(단, 영국의 경우 2010년 기준임)
 자료: 유럽 8개국은 Household Budget Survey (HBS), 원자료; 한국은 가계동향조사(2015), 원자료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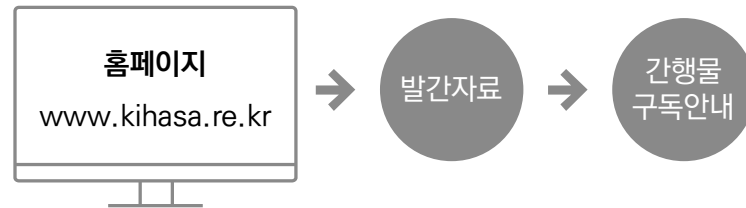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